

#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연구

Enhancing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trategies for Adapting to Social Changes

허재석 Her, Jaeseok  
고영호 Ko, Youngho  
김영우 Kim, Youngwoo  
임보영 Im, Boyeong  
문보람 Moon, Boram

(aur)

[기본연구보고서 2024-9](#)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연구**

Enhancing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trategies for Adapting to Social Changes

지은이 허재석, 고영호, 김영우, 임보영, 문보람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4년 10월 25일, 발행: 2024년 10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5,000원, ISBN: 979-11-5659-476-5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연구책임

허재석 연구원

| 연구진

고영호 연구위원

김영우 부연구위원

임보영 부연구위원

문보람 연구원

| 연구보조원

강정구 조사원

이다니엘 조사원

임정하 조사원

최해인 조사원

| 연구심의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조영진 선임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위원

이경훈 고려대학교 교수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자문위원

강석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김도우 경남대학교 교수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현미 수가이앤씨 상무

김혜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진 영동경찰서 경감

박신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

박재현 공주경찰서 경위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현호 용인대학교 교수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장원 이음파트너스 대표

양재섭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재언 가천대학교 교수

이경환 공주대학교 교수

이동희 경찰대학교 교수

이연지 이음파트너스 본부장

이정원 한림대학교 교수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

이제승 서울대학교 교수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지범 UNIST 교수

황종아 SH연구원 사무기술전문가



## 제1장 서론

최근 10년간 국내 범죄 전수는 감소했으나, 강력범죄는 증감을 반복하며 최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주요 사회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뉴스 보도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매우 높다.

정부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정 및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주로 CCTV 설치나 경관 개선 등 물리적 시설물에 집중되어 범죄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며, 유지관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거주적합성을 고려한 확장된 CPTED 개념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책과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사회적 여건과 범죄 발생 추이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도입이 요구된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국정과제로 포함된 지금,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과 개선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주요 현안을 도출하고, Q 방법론과 AHP 방법론을 활용해 우선순위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제2장 주요 현안별 제도 및 사업 현황 분석

사회환경 변화는 건축 및 도시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며, 이는 범죄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범죄 특성과 발생 패턴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합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방향성 개선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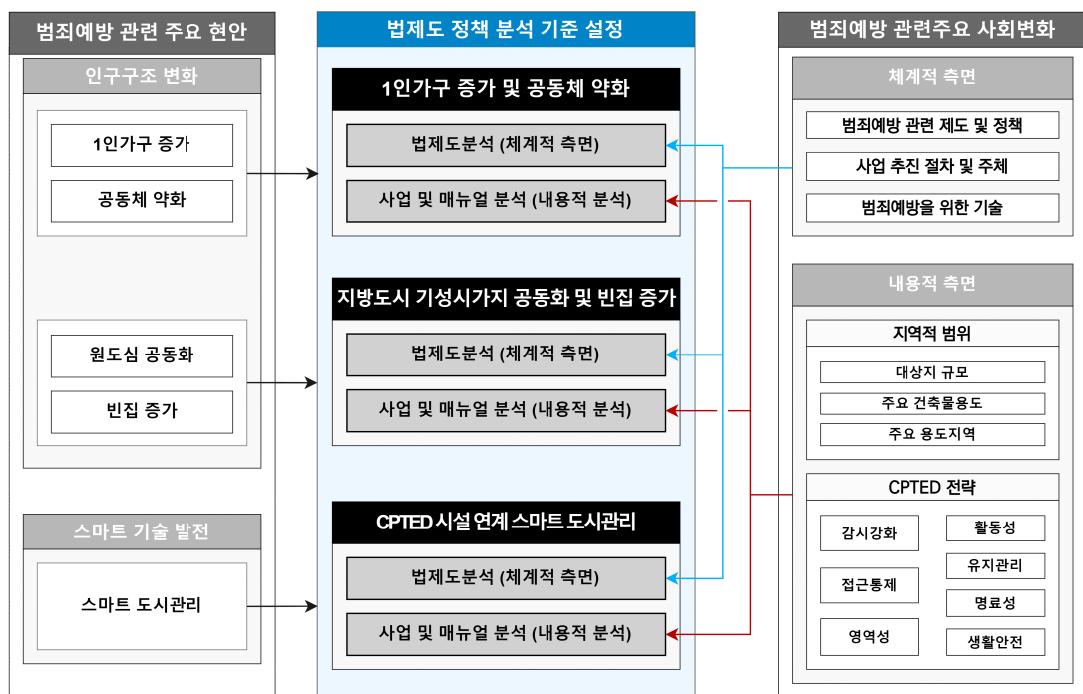
본 연구는 건축·도시 및 범죄 부문의 사회변화 대응 방향성을 고찰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현 검토 결과, 인구, 경제·사회, 문화, 기술, 환경·에너지, 산업 등 6개 주요 분야에서 사회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인구 변화에서는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노동 인력의 증가가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으며, 경제·사회적으로는 저성장, 사회 양극화, 수도권 집중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가 주된 이슈로 확인되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개인주의 강화와 비대면 생활 패턴의 증가, 기술 분야에서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범죄 예방 건축·도시공간 조성에 있어서는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밀집지역 확대, 원도심 공동화, 빙집 증가, 도시 인프라 노후화, 공동체성 약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이 핵심 이슈로 확인되었으며, 각 분야의 대응이 범죄예방 공간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요 이슈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서 다뤄야 할 주요 현안을 도출하였다. 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범죄, 건축·도시,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 경제·사회, 문화, 기술 등의 사회변화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각 현안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대응해야 할 세 가지 주요 현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1인 가구의 증가와 공동체성 약화로 인해 범죄예방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소형 주택 밀집지역에서 여성과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대응이 강조되었다. 둘째, 지방 도시 기성시 가지의 공동화와 빙집 증가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환경개선 및 구체적인 범죄예방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셋째,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전략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도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제3장 주요 현안별 제도 및 사업 현황 분석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이슈를 ① 체계적 측면과 ②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① 체계적 측면에서는 1인 가구 증가, 지방 도시 공동화, 스마트 도시관리 등 사회변화 이슈에 따라 관련 법령, 제도, 정책을 검토하였다. 특히, 범죄예방 환경조성과 관련된 CPTED 조례가 공공디자인 조례에 통합되는 추세를 분석하고, 스마트 도시관리와 범죄예방 사업 간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내용적 측면에서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추진한 주요 범죄예방 사업과 매뉴얼을 CPTED 전략에 따라 감시강화,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 7가지 전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은 공간 단위별로 건축물(점), 가로(선), 블록(면)으로 구분하여 적용되었으며, 지역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적절한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평가되었다. 분석을 통해 각 공간 단위별로 적용된 CPTED 전략의 경향성을 비교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주요 현안별 제도 및 사업 현황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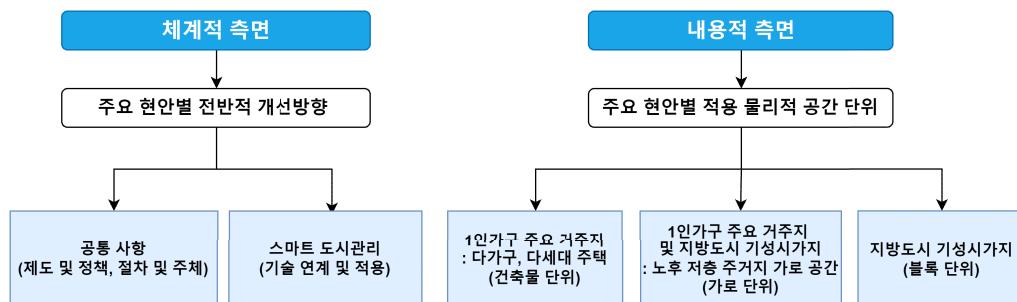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나타났다.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과 함께, 건축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감시강화와 접근통제가 주로 적용되었으나, 공동체성을 보완하는 활동성 강화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공동화와 빈집 증가는 도시 쇠퇴와 연계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하나, 지자체별로 실행력의 차이가 크며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빈집 밀집 지역에서 감시강화와 영역성 강화 전략이 주로 적용되었으나, 주민 참여와 활동성 강화를 통한 지속적 관리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는 범죄예방에서의 기술적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법적 기반이 부족하고 스마트 기술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드러났다. CCTV, 스마트 가로등 등의 감시강화 전략이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체계적 측면에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 및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며, 특히 스마트 도시관리 기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정책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각 현안에 따른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단위,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가로 단위, 그리고 지방도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블록 단위에서의 CPTED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주요 현안별 제도 및 사업 분석 결과 종합

출처: 연구진 작성

## 제4장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우선순위 분석

본 장의 목적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도출된 주요 현안과 3장에서 분석한 제도, 사업, 매뉴얼을 종합하고, 전문가, 공무원, 경찰, 설계업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개선방향은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Q방법론과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1인 가구 증가, 지방도시 공동화 및 빈집 증가, 스마트 도시관리 등 3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체계적,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체계적 측면에서는 법·제도와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내용적 측면에서는 공간 단위별 설계전략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분석의 틀 및 구성 항목

구분	2장 분석 결과(주요 현안 3가지)		
	1인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 약화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빈집 증가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적 측면 (제도 및 정책)		공통부분(제도 및 정책 부분, 추진 절차 및 주체 부분)	
3장 : Q방법론	-	-	기술 연계 부분
분석 결과	내용적 측면 (매뉴얼 및 사업) : AHP 방법론	가로 단위 전략 (노후 저층 주거지역 가로) 건축물 단위 전략 (다가구·다세대 주택)	블록 단위 전략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출처: 연구진 작성

이후 이를 종합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체계적 측면의 주요 시사점은 첫째,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범죄예방 사업은 교통 및 화재안전과 같은 생활안전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관련 기관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둘째, 스마트 도시관리와의 연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스마트 기술과 범죄예방 사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스마트 기술이 도시 관리에서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서는 아직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스마트 기술의 범죄예방 분야 연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균형적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법적 기반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법적 기반 강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범죄예방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야 하며,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령 강화 및 조례, 인증제도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내용적 측면의 주요 시사점은 첫째, 범죄예방 사업 전략의 우선순위는 감시 강화 전략이 모든 공간 단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사업 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집단별 전략 우선순위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찰은 감시 강화를, 전문가들은 접근 통제와 유지관리를, 공무원은 공동체 활동을 중시하는 등 각기 다른 전략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협력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셋째,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요구된다. 각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제5장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된 주요 사회적 변화 이슈와 3장 제도 및 정책 분석, 4장에서의 우선순위 도출 결과를 종합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사회변화에 대응한 통합적 생활안전 관리 전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범죄 예방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생활안전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 공동체성 약화, 지방 도시 공동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스마트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교통, 화재 등 생활안전 측면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 2.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사회환경 변화 대응형 범죄예방 전략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은 범죄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전반을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지능형 CCTV, IoT 기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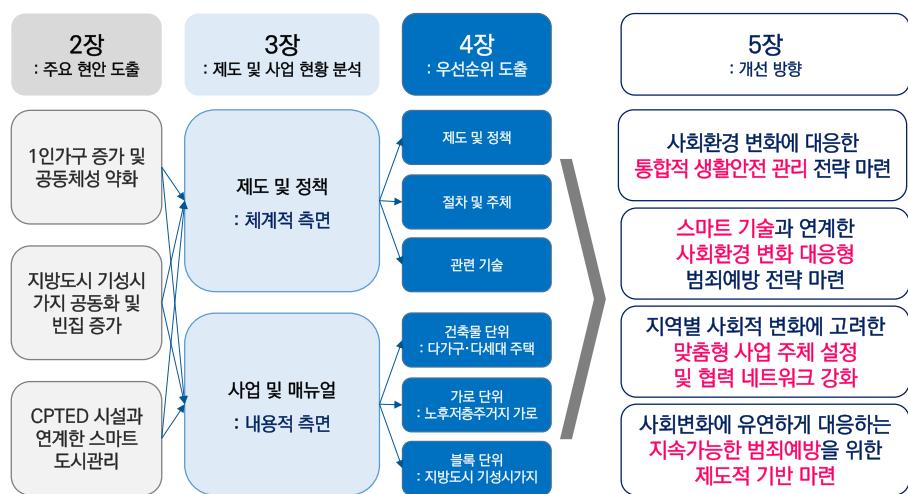
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장기적인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스마트 기술과 연계된 종합적 범죄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 3. 지역별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 주체 설정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각 지역의 사회적 변화와 특성에 맞춘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중심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는 범죄예방 협의체 구성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협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찰,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 4.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 지방 도시 인구 감소와 같은 변화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예방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

# 차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1) 연구의 내용	10
2) 연구의 방법	1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4. 연구 흐름도	16
제2장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	17
1. 건축·도시공간에서의 사회변화 동향 분석	17
1) 건축·도시 및 범죄 부문의 사회변화 대응 방향성 고찰	18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도시공간 대응 이슈 도출	25
2. 주요 현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30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30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2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종합	42
3.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 도출	43
1)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의 약화 대응 필요	43
2)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의 공동화 및 빈집의 증가	45
3)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46
제3장 주요 현안별 제도 및 사업 현황 분석	47
1. 분석의 개요	47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47
2) 분석의 틀	53
2. 국내 범죄예방 관련 제도, 정책 및 사업 분석	57
1)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 약화 관련 제도 및 사업에서의 CPTED	57
2)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빈집 증가 관련 제도 및 사업	65

3)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제도 및 사업	77
3. 소결	82
1) 분석 종합	82
2) 시사점	85
 제4장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우선순위 분석	87
1. 분석의 개요	87
1) 배경 및 목적	87
2) 분석의 틀	88
2. 분석 결과	98
1)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체계적 측면 개선 사항	98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내용적 측면 개선 사항	107
3. 소결	117
1)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체계적 측면 주요 시사점	117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내용적 측면 주요 시사점	121
 제5장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123
1.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합적 생활안전 관리 전략 마련	124
2.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사회환경 변화 대응형 범죄예방 전략 마련	127
3. 지역별 사회적 변화에 고려한 맞춤형 사업 주체 설정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130
4.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32
 제6장 결론	135
1. 연구 요약	13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37
 참고문헌	139
 SUMMARY	149
 부록.	151
1. 검찰청 및 경찰청 범죄통계자료 분석	151
2. 지역유형별 신고빈발지 및 체감안전도 자료 분석	164
3.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관계자 의견조사 설문조사지	167
4. Q 방법론 분석 결과(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체계 및 기술 관련 관계자 인식조사 분석 결과)	181

---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전체 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 건수 변화 추이	1
[표 1-2] 1세대 CPTED에서부터 3세대 CPTED 비교 현황	6
[표 1-3] (시간대별/장소별/범죄자 특성별) 재물 및 감정 범죄 발생 현황 비교 분석 종합	8
[표 1-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4
[표 2-1] 메가트렌드에 따른 건축 수요 예측과 건축 정책 동향	19
[표 2-2] 도시 분야 코로나19 전후 분야별 메가트렌드	20
[표 2-3] 2050 국토교통 메가트렌드-트렌드 도출 결과	21
[표 2-4] 2050 국토교통 분야 주제별 이슈 도출	22
[표 2-5] 주요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 발생 원인과 미래 예측 및 대비 정책	23
[표 2-6] 사회환경 주요 변화와 범죄 발생 특성과의 관계 종합	25
[표 2-7] 건축 도시·범죄 부문 사회환경 주요 변화와 환경설계 기법(건축도시공간) 대응 가능 이슈	29
[표 2-8] 중요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2
[표 2-9] 중요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3
[표 2-10] 긴급성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4
[표 2-11] 대응 가능성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6
[표 2-12] 유형별 긍정·부정 응답에 따른 CPTED 사업 개선 고려사항	42
[표 3-1] 국내 CPTED 관련 법령 현황	48
[표 3-2] 중앙부처 수립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현황	50
[표 3-3] 자자체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현황	50
[표 3-4] 국내 법·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의 틀	54
[표 3-5] 1인 가구 대상 조례 내 CPTED 내용 정리	58
[표 3-6] 1인 가구 대상 CPTED 관련 사업	60
[표 3-7]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주요 지역 용도	61
[표 3-8]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중 주거, 주거 및 상업 혼합지역 내 주요 주택유형	61
[표 3-9]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중 주거, 주거 및 상업 혼합지역 내 주요 주택유형별 CPTED 전략	62
[표 3-10]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중 주거, 주거 및 상업 혼합지역 내 적용 공간적 범위별 CPTED 전략	63
[표 3-11] 국내 CPTED 매뉴얼 유형별 건축물 단위에서의 CPTED 전략	64
[표 3-12]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지역	72
[표 3-13]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주요 지역 용도	73
[표 3-14]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중 원도심 내 적용 공간적 범위별 CPTED 전략	73
[표 3-15] 국내 CPTED 매뉴얼 유형별 가로 및 블록 단위에서의 CPTED 전략	75
[표 3-16]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 내용 정리	78
[표 3-17] 스마트도시 정책사업별 범죄예방 관련 요소 및 주요내용	80

[표 3-18] 적용 공간적 범위별 스마트 기술이 활용된 CPTED 전략	81
[표 4-1] 응답자 기초 현황	88
[표 4-2]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분석의 틀 및 분석 방법론	89
[표 4-3]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분석의 틀 및 구성 항목	93
[표 4-4]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 문항	94
[표 4-5] 공간 단위별 CPTED 원리 및 세부 전략	96
[표 4-6] 체계적 측면 개선사항	98
[표 4-7] 유형별 관계자 현황	99
[표 4-8] 제1유형 :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의 통합적 접근	99
[표 4-9] 제2유형 : 법적 기반 및 제도 강화 중시	100
[표 4-10] 제3유형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균형적 역할 중요	100
[표 4-11] 제4유형 : 유지관리 및 지속가능성 중요	101
[표 4-12] 제5유형 : 대도시 및 지방도시의 맞춤형 접근 중요	101
[표 4-13] 제6유형 :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중요	102
[표 4-14] 상대적 중요도 높은 사업의 체계적 측면 공통 사항 (상위 30% 항목)	103
[표 4-15] 집단별 상대적 중요도 높은 사업의 체계적 측면 공통 사항 (상위 30% 항목)	104
[표 4-16] 사업의 체계적 측면 기술 부분	105
[표 4-17] 상대적 중요도 높은 사업의 체계적 측면 공통 사항 (상위 30% 항목)	106
[표 4-18] 내용적 측면 개선 사항	107
[표 4-19]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공간 단위별 중요도 (100점 만점)	107
[표 4-20] 건축물 단위 : 다가구·다세대 주택 CPTED 원리별 중요도 (100점 만점)	108
[표 4-21] 건축물 단위 접근통제 전략별 중요도	109
[표 4-22] 건축물 단위 감시강화 전략별 중요도	109
[표 4-23] 건축물 단위 공동체 활동 전략별 중요도	110
[표 4-24] 가로 단위 CPTED 원리별 중요도	110
[표 4-25] 가로 단위 감시강화 전략별 중요도	111
[표 4-26] 가로 단위 영역성 강화 전략별 중요도	112
[표 4-27] 가로 단위 명료성 강화 전략별 중요도	112
[표 4-28]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CPTED 원리별 중요도	113
[표 4-29]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영역성 강화 전략별 중요도	114
[표 4-30]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유지관리 전략별 중요도	115
[표 4-31]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활동성 강화 전략별 중요도	115
[표 4-32]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공동체 활동 전략별 중요도	116

---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변화 추이	2
[그림 1-2] ‘범죄예방’으로 검색한 국내 언론기사 작성 빈도수(2019.1.1. - 2023.12.31.)	3
[그림 1-3] ‘범죄예방’으로 검색한 국내 언론기사 작성 빈도수(상위 100개 키워드)	3
[그림 1-4] 중앙부처 및 지자체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건수 변화 추이	4
[그림 1-5] 5대 범죄 유형 분류(재물 및 감정 범죄) 및 CPTED 대응력 판단 기준	7
[그림 1-6] 연구 흐름도	16
[그림 2-1] 건축 및 도시공간에서의 사회변화 동향 분석 과정	17
[그림 2-2] 사회변화에 따라 건축 공간에 요구되는 요소들	18
[그림 2-3]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31
[그림 2-4] 중요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3
[그림 2-5] 긴급성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5
[그림 2-6] 대응 가능성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6
[그림 2-7] 사회변화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종합	37
[그림 2-8] 도심 집중,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37
[그림 2-9] 1·2인 가구, 소형주택 증가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38
[그림 2-10] 지방 빙집 증가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38
[그림 2-11] 스마트 도시관리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39
[그림 2-12] 기반시설 노후화, 무질서화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39
[그림 2-13] 도시-비도시 주거, 교통 격차 심화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40
[그림 2-14] 야간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40
[그림 2-15]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41
[그림 2-16] 지방도시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41
[그림 3-1] 분석의 틀	53
[그림 3-2] 사업 및 매뉴얼 분석 흐름도	56
[그림 3-3] CPTED 관련 조례 내용	69
[그림 3-4] 광명시 스마트도시계획 방법 관련 스마트도시서비스 소개	79
[그림 3-5] 주요 현안별 제도 및 사업 분석 결과 종합	86
[그림 4-1] R 방법론 및 Q 방법론 개념 예시	90
[그림 4-2] Q 방법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응답 형태	91
[그림 4-3] 사회변화를 고려한 공간 단위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전략(내용적 측면)	91
[그림 4-4] 공간 단위별 세부 전략 설문 문항 예시	92
[그림 4-5]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체계 개선사항(체계적 측면) 도출 과정	93
[그림 4-6] 공간 단위별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내용적 측면) 도출 과정	95
[그림 5-1]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 방향 도출 과정	123

[그림 5-2] 생활안전을 고려한 CPTED 개념의 확장 방향	126
[그림 5-3]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사회환경 변화 대응형 범죄예방 전략	129
[그림 5-4]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 범죄예방환경개선 협의회 개선안	133
[그림 5-4]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안	134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 흐름도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사회의 주요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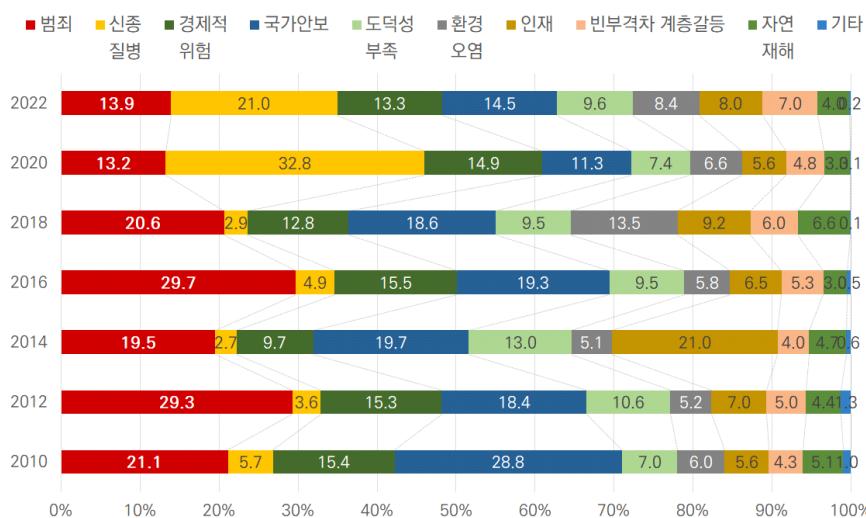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1,996,389건에서 2021년 1,531,705건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2022년에는 1,575,007건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23, p.3). 특히,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 2013년 33,787건에서 2021년 35,126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9.3% 증가한 43,927건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대검찰청, 2023, p.8).

[표 1-1] 전체 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 건수 변화 추이

연도	전체 범죄		강력범죄	
	발생 건수	전년 대비 증감률	발생 건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13	1,996,389	-	33,787	-
2014	1,933,835	-3.1	34,126	1.0
2015	2,020,731	4.5	35,139	3.0
2016	2,008,290	-0.6	32,963	-6.2
2017	1,824,876	-9.1	36,030	9.3
2018	1,738,190	-4.8	35,272	-2.1
2019	1,767,684	1.7	35,066	-0.6
2020	1,714,579	-3.0	32,812	-6.4
2021	1,531,705	-10.7	35,126	7.1
2022	1,575,007	2.8	43,927	25.1

출처: 대검찰청. (2023).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p.3, p.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국내 범죄 발생은 변화의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의 증가는 새로운 범죄양상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묻지마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묻지마 사건의 발생장소는 노상, 지하철 역사, 백화점 등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단 최근의 문제만이 아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통계청 사회조사(통계청, 2022, p.73)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불안 요인 중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항상 상위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COVID-19와 같은 신종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범죄가 주요 사회 불안 요인이며,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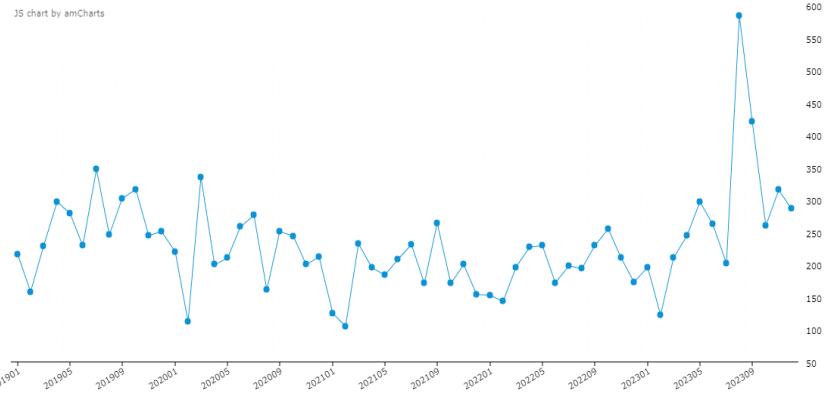
[그림 1-1]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변화 추이

출처: 통계청, (2022). 사회조사보고서. p.73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범죄예방 관련 국내 언론보도 현황

빅카인즈<sup>1)</sup>에서 지난 5년(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동안을 기준일로 설정하고 ‘범죄예방’ 키워드 빈도수를 확인한 결과, 최근 범죄예방 관련 기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예방’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는 14,070건이 도출되었는데, 범죄 예방 관련 국내 언론기사 작성 빈도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8월 발생한 서울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사건으로 범죄예방과 관련된 뉴스 빈도 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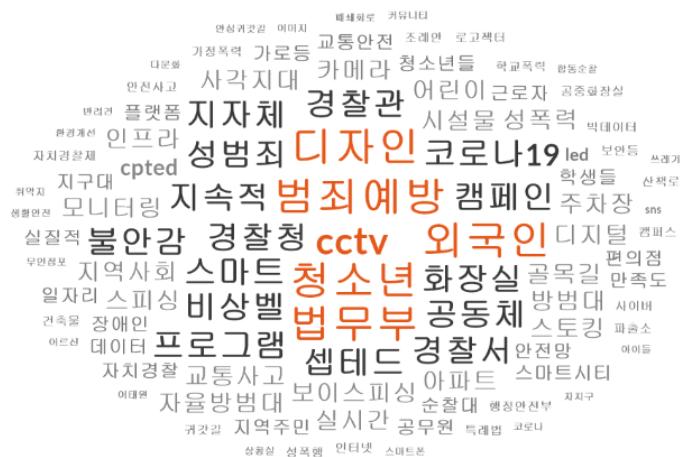
1)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https://www.bigkinds.or.kr/>



[그림 1-2] ‘범죄예방’으로 검색한 국내 언론기사 작성 빈도수(2019.1.1. – 2023.12.31.)

출처: 빅카인즈 검색 결과를 통한 연구진 작성

질적 연구 소프트웨어인 NVivo를 사용하여 ‘범죄 예방’ 관련 국내 언론기사의 주요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작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로 도출된 키워드는 CCTV(10,222번) → 청소년(6,783번) → 법무부(3,360번) → 외국인(3,261번) → 디자인(3,201번) → 경찰청(2,939번) → 스마트(2,606번) → 화장실(2,522번)로 나타났다. 외에도 관련된 주요 키워드로는 방범시설물 중에서 비상벨, LED, 가로등, 보안등, 로고젝터가 도출되었고, 관련 공간으로 골목길, 주차장, 사각지대, 스마트시티, 산책로, 무인점포가 도출되었다. 또한, 사회환경 변화 중 인구부문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키워드인 ‘외국인’이 범죄 예방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관련 부처로는 ‘법무부’, ‘경찰청’ 순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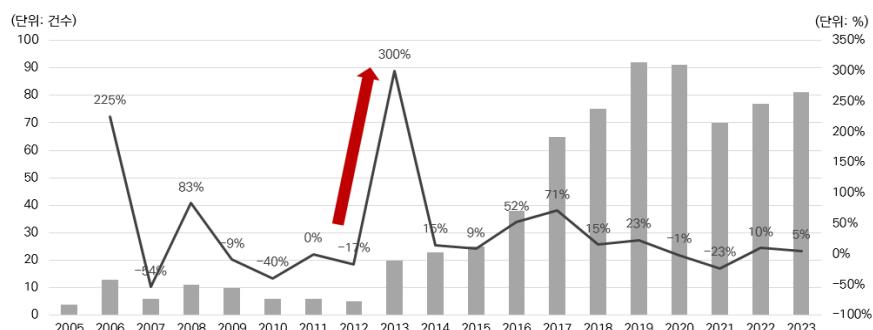


[그림 1-3] ‘범죄예방’으로 검색한 국내 언론기사 작성 빈도수(상위 100개 키워드)

출처: 빅카인즈 언론기사(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sup>2)</sup>의 전국적 확대

국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개념이 처음 소개된 시점은 1980년대이며, 2000년대 이후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임보영, 허재석, 2023, p.28). 이후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CPTED가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는 ‘염리동 소금길 사업’이 추진된 시기이다. 여전히 대표 CPTED 사례로 회자되는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았고, 사업 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주민의 두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경래 외, 2013, pp.124-125). 비슷한 시기 추진된 또 다른 대표 사례인 ‘강서구 공진중학교’ 사업은 학교 내부 공간에 대한 이용도 증가, 학생과 교사들의 장소별 호감도 상승, 범죄 두려움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다(박경래 외, 2013, pp.244-245). 이와 같이 2010년대 초반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으로 추진된 두 사례의 범죄예방 효과가 일부 입증되면서 전국적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앙부처뿐만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예산 확보, 관련 법·제도 제정을 통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등 범죄예방 환경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4] 중앙부처 및 지자체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건수 변화 추이

출처: 나라장터. (2023). <https://www.g2b.go.kr/index.jsp>(검색일: 2024.02.05.)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주: 2005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셉테드, CPTED, 범죄예방 키워드가 포함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조달청  
입찰 건수를 분석

## □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설정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중요성 재조명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는 내용을 법무부 과제로 제시하였다(대한민국 대통령실, 2022, p.111). 법무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

2) 본 연구에서는 CPTED 사업,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라 명명하였음.

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를 위해 2022년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정, 2023년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범죄예방 환경개선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한 지표' 개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표준 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정책 성과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재조명되면서 관련 예산 확보,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3)</sup>

#### 국정과제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中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관련 내용

##### 과제목표

-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종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출처 : 정부업무평가. (2023).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62](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62)(검색일: 2024.02.05.)

##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방식과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 지속적 제기

범죄예방 환경설계(이하 CPTED)는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한 개념으로 국내의 환경적 요인과 다른 서구의 공간과 생활방식을 토대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설계 전략을 도출하였다. 국내에서는 CPTED를 초기에는 그대로 도입하여 건축도시 환경에 적용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범죄예방 관련 사업은 CCTV 설치, 경관 개선 중심으로 지역 여건과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곧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하여 범죄취약지역에 CCTV 설치 대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에 벽화를 그리거나, 단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관 개선 사업 중심의 사업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범죄예방, 주민들의 생활 안전 확보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sup>4)</sup> 이외에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효과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 방범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범죄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가 와해되며, 후속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범

3)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3년 초 6억원이었던 셀테드 관련 예산을 2024년에는 15억까지 증액할 계획임을 밝혔음(김민정 2023, 6억→15억까지 예산 증액…잇단 흉악 범죄에 '이것' 다시 뜬다. 중앙일보. 9월 2일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9356#home>(검색일: 2024.02.01.)

4) 정준희. (2023). 법무부도 나선 범죄예방 환경설계 '셀테드(CPTED)'. 법률신문. 1월 5일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184296>(검색일: 2024.02.07.)

죄예방 효과성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사후 범죄발생 건수, 범죄 두려움 변화 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나, 사업 평가 지표, 모니터링 체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이 부지기수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2010년 초반부터 해당 국가와 지역사회의 사회환경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세대 CPTED’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세대 CPTED는 기존 CPTED 5대 원리에 기반한 물리 환경 중심의 1세대 CPTED와 지역 주민간의 관계 및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2세대 CPTED와 같이 체계화되고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향후 CPTED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확장성 제고를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세대 CPTED는 기존의 CPTED 개념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 거주적 합성 등의 요소를 추가로 고려한 개념으로, 기존 CPTED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핵심 사항으로 CPTED 개념을 재구성하였다.

[표 1-2] 1세대 CPTED에서부터 3세대 CPTED 비교 현황

구분	1세대 CPTED	2세대 CPTED	3세대 CPTED
주요 개념	영역성	공동체 의식	녹색 전략
핵심 사항	건축과 물리 환경 디자인	사회 생태, 균린계획, 집단효능감, 규모 환경	사회혁신,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지속가능성
시작 시점	1970년대	1997년	2010년대
관련 학자	Ray Jeffrey, Newman & Rand, Jane Jacob	Greg Saville & Gerry Cleveland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Carlos Ratti
주요 내용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설계	주민 간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이웃 감시 계획	감시를 위한 기술적인 도움, 기본적인 안전 목표를 넘어 서 인공지능적으로 강화
주요 요소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와 환경 접근통제	사회적 결합 커뮤니티 문화 연결성 수용력	접근통제&보안 지속가능한 환경 거주적 합성&이미지어빌리티 공동체 참여
적용을 위한 소요 기간	단기간	장기간	장기간

출처: Raj, M. P., & Patil, D. R. (2023, p.3). *Perceptions of 3rd Generation CPTED: Emerging Applications of Technology in Public Space Designs in Smart Cities*. *Qeios*.

#### 재구성된 3세대 CPTED 개념 예시

- 기존 CPTED 개념의 문제점**
- CPTED 실행에 있어 다양한 분야·기관 간 협업이 어려움
  - CPTED는 디자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고, 범죄 위험의 사회적 맥락, 두려움과 인식에 대한 고려 부족
  -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미흡
  - CPTED 개념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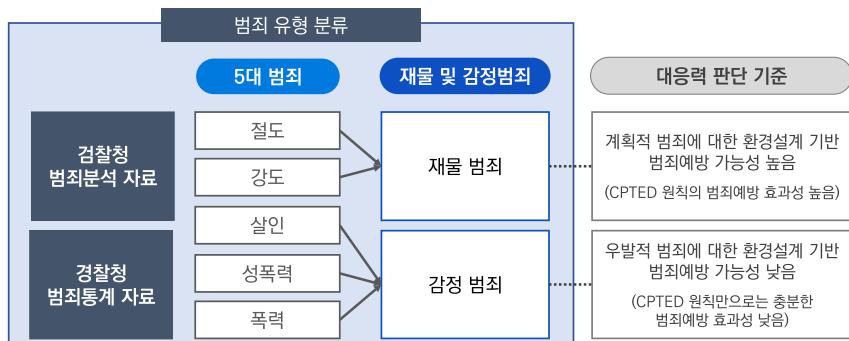
- 재구성된 CPTED 개념의 틀**
- (CPTED의 궁극적인 목표) 영역성 강화
  - (CPTED 주요 개념) 감시, 긍정적 강화, 접근통제
  - (CPTED 6개 원칙) 공식적 감시, 비공식적 감시, 이미지 유지관리, 활동 지원, 타겟 하드닝, 경계 정의

출처 : Gibson. (2016, pp.182–639). *Third generation CPTED? Rethinking the basis for crime prevention strategies*.

- 국내 범죄발생 추이 분석결과, 코로나19 이후 장소별, 연령별 재물 범죄 증가와 감정범죄 감소 등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발생 추이 변화를 확인

검찰청과 경찰청의 범죄 발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014~2022년 기간 전국 250개 시군구의 5대 범죄(절도,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발생 특성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구체화를 범죄 유형을 재물 범죄(절도, 강도)와 감정 범죄(살인, 성폭력, 폭력)로 구분<sup>5)</sup>하고, 발생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범죄 발생의 추이를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과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개인화·비대면화 및 디지털 기반 사회체계의 변화 기간(2019~2022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재물 범죄와 감정 범죄에 있어 장소별, 시간대별 범죄발생의 추이가 기존 대비 코로나19 이후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장소별, 시간대별 범죄발생 특성이 코로나19 시기 전후 사회변화와 무관하게 지속 감소하거나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유형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5] 5대 범죄 유형 분류(재물 및 감정 범죄) 및 CPTED 대응력 판단 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2019년을 사회변화의 분기점으로 가정하고 살펴본 국내 범죄발생의 추이는 재물범죄의 경우 주간 발생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등에서의 발생이 증가함을 확인한 반면, 고령자 범죄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증가하는 등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사회변화 기점으로 가정하고 살펴본 범죄발생의 추이 변화는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의 시간대별, 장소별, 범죄자 특성별 등 유형 특화 전략으로 세분되고 개선될 필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5) 환경설계를 기반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할 때, 재물범죄인 절도와 강도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원칙을 고려한 환경에서 해당 유형의 범죄예방이 효과적이다(조영진 외, 2019, p.79). 반면 살인, 성폭력, 폭력 등의 감정 범죄는 재물 범죄에 비해 우발적·감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손동필 외, 2021, pp. 19-22), 이에 감정 범죄는 비교적 계획적인 범죄일 수 있는 재물 범죄와 달리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3] (시간대별/장소별/범죄자 특성별) 재물 및 감정 범죄 발생 현황 비교 분석 종합

구분1	구분2	구분3	'14-'22 증감 추이	'14-'22 연평균 발생 건수	'19-'22 증감 추이	'19-'22 연평균 발생 건수
재물 범죄	시간대별	주간	감소	93,940	증가	91,096
		야간	감소	81,939	감소	68,989
	장소별	주거시설	증가	13,135	증가	16,261
		공동주택	감소	12,004	감소	9,633
		상업시설	증가	32,831	증가	41,026
		유통 및 숙박시설	감소	16,719	감소	15,017
	범죄자 특성별	야외, 주차장	유지	59,173	증가	63,190
		공공공간	감소	6,433	감소	6,199
	연령	60세 미만	감소	-	감소	-
		60세 이상	증가	-	증가	-
감정 범죄	시간대별	주간	유지	79,857	감소	78,011
		야간	감소	166,345	감소	146,915
	장소별	주거시설	증가	34,818	유지	45,817
		공동주택	증가	24,231	감소	27,485
		상업시설	증가	9,109	유지	10,751
		유통 및 숙박시설	유지	34,931	감소	37,625
	범죄자 특성별	야외, 주차장	감소	120,083	감소	112,193
		공공공간	증가	7,302	유지	8,669
	연령	20세 미만	유지	-	감소	-
		60세 이상	유지	-	감소	-
	국적	내국인	감소	-	감소	-
		외국인	감소	-	감소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경찰청 범죄통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현 범죄예방 관련 제도 및 정책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 미흡

건축 및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대부분 신도심 조성 시 고려 사항이며, 범죄에 취약한 구도심, 낙후 지역 관련 사항은 미흡한 실정이다(손동

필 외, 2022, p.106). 최근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심도가 증가하였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조영진 외, 2023, p.39). 여전히 사업의 추진 동력이 충분하지 못하며 사회환경 변화나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기존 사례를 답습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본격화된 지 약 2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관련 법, 제도, 사업들의 현황분석을 통해 국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진화 과정과 변화 흐름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 집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설계 분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진보된 기술(디지털화, 자동화, 인공지능 등)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서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는 지역의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두려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과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범죄와 관련된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사회변화를 도출하고 사회변화와 관련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을 도출한다. 둘째,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내 제도 및 정책, 사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공간 단위별 전략 및 정책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 도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도시공간의 양극화, 이용 행태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의 현황과 특성도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방안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검토를 통해 범죄 관련된 건축 및 도시 공간 분야의 주요 사회변화 이슈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후 주요 이슈별 전문가 의견조사(중요성, 시급성, 대응 가능성)를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국내 범죄예방 관련 제도 및 정책, 사업의 현황 및 사회변화 대응 가능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국내 법·제도, 정책 및 사업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문헌 검토,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현 제도 및 정책, 관련 매뉴얼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현 제도 및 정책, 사업의 실태를 진단하고 사회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추진의 개선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 도출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범죄의 동향을 고려할 때, 기존의 범죄예방 정책 및 환경설계가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법제도와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환경 변화 흐름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의 범죄예방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내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효과적인 구축과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활용 가능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 □ 문헌고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을 도출하기 위해 ‘범죄’, ‘건축’, ‘도시’ 분야의 문헌 고찰을 하고자 한다. 문헌은 메가트랜드 관련 문헌, 사회변화에 따른 건축도시·범죄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문헌 분석을 통해 사회변화의 이슈를 정리하고 범죄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국내 법·제도, 정책 및 사업 현황분석을 위해 관련 제도 및 정책,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 관련 매뉴얼 등을 검토한다.

### □ 전문가 및 관계자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사회변화에 따른 중요성, 긴급성, 대응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 도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추진 전략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범죄예방 분야의 관계자(전문가, 공무원, 민간설계업체 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주요 전략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

### □ Q 방법론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Q 방법론은 주관적 인식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추진체계(법제도, 추진절차 및 주체,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사항의 우선 순위 도출을 위해 활용 가능하다.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전략에 비해 비교적 정립이 되지 않은 관련 체계에 대해 관계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전문가 자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주요 현안과 개선 방향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범죄학, 건축학, 도시학, 사회학, 심리학, 인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 및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선행연구 현황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효과성 분석 중심의 CPTED 연구 비중이 가장 높음

CPTED 관련 선행연구는 ① CPTED 관련 법, 제도, 정책 대안 마련 연구, ②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모니터링 연구, ③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외 연구 모두 사업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에 진행된 연구 대부분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로 관련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CPTED 사업 모니터링, 효과성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자체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기여점이 있으나, 도출된 결과가 특정 중앙부처·지자체를 중심으로 적용·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범죄예방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원도심 등은 선제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나, 이 지역들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CPTED 관련 제도 및 정책 대안을 마련 연구에서는 CPTED 개념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관련 주체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서구사회에서 도래한 CPTED 개념을 국내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를 활용한 공간 유형별 제도화 방안에 대해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왔다. 2000년대 중반에는 해외 CPTED 전략을 소개하고, CPTED 제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2010년도 들어서 학교 및 학교주변지역,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시설, 지하철 역사, 성폭력 및 학교폭력 발생 지역 등에 범죄를 막기 위한 환경설계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2010년도 초반 연구들은 건축물에 대한 CPTED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물리적 시설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활동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고, 저소득 지역,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등 이른바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반성아래, 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박경래, 2013, p.21에서 발췌).

2012년도에는 CPTED 원칙에 근거하여 강남구, 성남시 구리시, 은평구 저소득 지역,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범죄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2013년도에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위험성을 평가하고, BID 정책과 범죄예방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5년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회 변화에 따른 형사정책의 주요 쟁점을 급속한 인구 고령화, 다문화 사회의 확산,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규정하고 각 영역에 대한 추세와 변화를 예측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를 3개년 동안 추진하였다(박형민 외, 2016).

박형민·서주연(2015)은 인구 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에서 고령 인구의 범죄 유발을 억제하는 단기 전략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CPTED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박형민·조성현·김선희(201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확산, 형사정책의 변화에서 치안 활동 확대,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 강화를 외국인 범죄 대상 맞춤형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홍영오 외(2017)의 연구에서는 청년 실업증가, 증산층 축소, 노인빈곤 증가 등 경제적 양극화는 시군구 수준에서 절도, 성폭력, 폭행 및 상해 등 주요 범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김지영 외(2020)는 도서 산간의 범죄 특성, 범죄 두려움을 분석하고 농어촌 도서산간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 □ 본 연구의 차별성

- 첫째,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형사법무 정책, 치안정책 내에서 일부 CTPED 관련 정책, 제도를 다뤄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관점에서 사회환경 변화 이슈를 다룸
- 둘째, 본 연구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을 도출하고 현안별 국내 제도 및 정책, 사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 셋째,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설계적 측면의 전략과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 측면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설계적정책적 측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의 우선순위를 공간 단위별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CPTED 전략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정책적 기대효과) 국내 변화하는 사회환경 및 여건에 적합한 사업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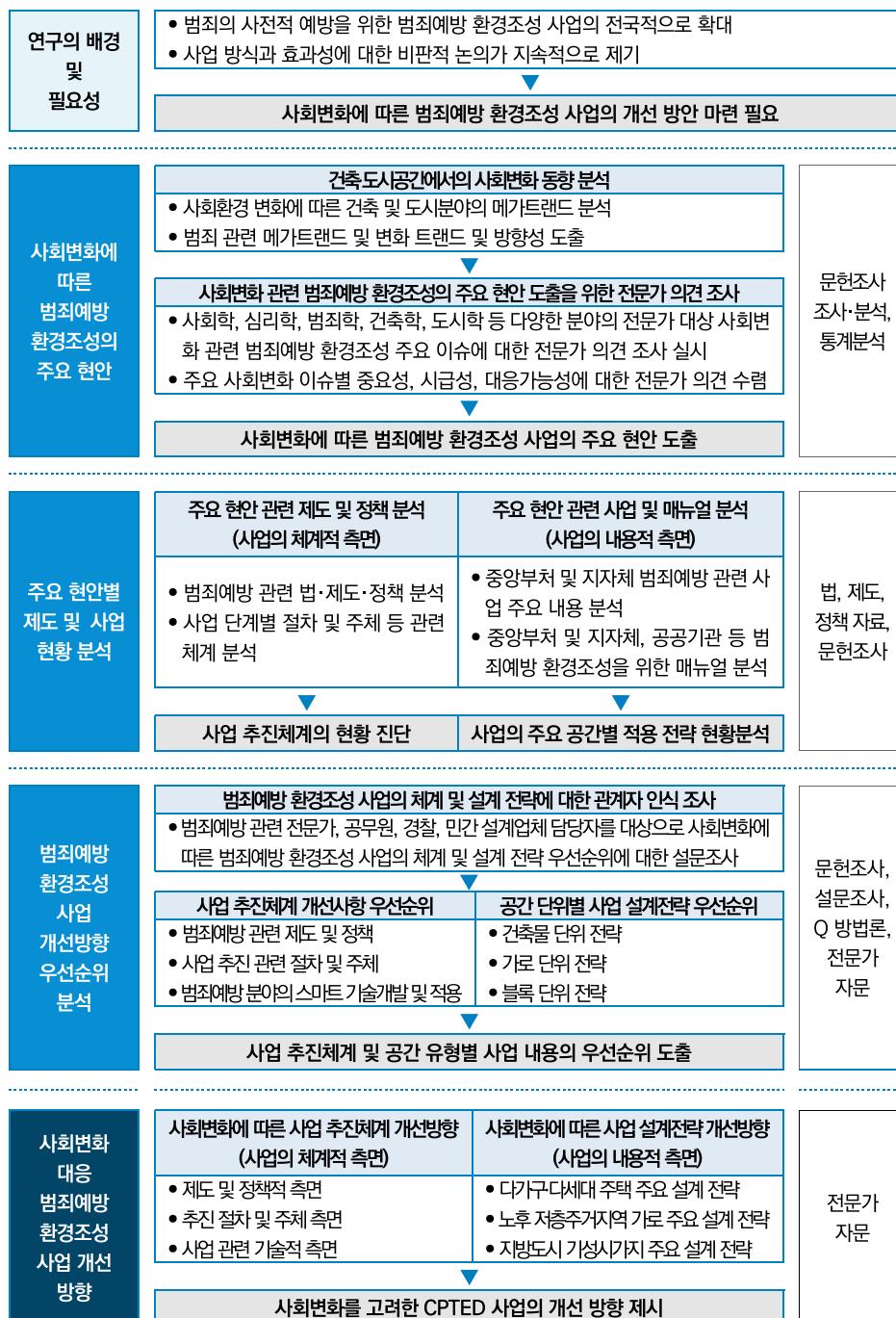
[표 1-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선행 연구	- 이은혜 외 (2008), 지구단위계획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적용에 대한 연구	- CPTED 국내외 사례조사 - CPTED 관련 법, 제도, 가이드라인 적용 사례 분석	-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른 CPTED 기법 유형화 및 적용 가능성 분석 - CPTED 기법의 실제 적용을 위해 방법
	1 - 연구목적: 안전한 도시 및 건축공간 형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들을 유형화,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CPTED 관련기관 및 실무자 설문조사 - 통계분석(빈도분석, 분산분석, T-test)	관련 지구단위계획, 방법설계 인증과 같은 제도 신설을 제안
	- 김부치 외 (2014),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CPTED 지침의 초등학교 적용현황 분석	- CPTED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지역 특성, 범죄율 데이터 분석 - 서울시 초등학교 CPTED 지침과 외국 유사 사업과 차별화되도록 시범사업의	- 안심마을 사업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
	2 - 연구목적: 서울시 재정비 촉진사업 CPTED 지침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CPTED 가이드라인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 연구목적: 서울시 재정비 촉진사업 CPTED 지침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CPTED 가이드라인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내용, 방향을 설정하는 업무 지침 마련
	- 김은희 외 (2014),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침 마련 연구	- 현행 법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 - 유사 사업 현황분석 - 주민 인터뷰	- 안심마을 사업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
	3 - 연구목적: 10개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안심마을 사업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가이드 제시	- 현장조사를 통한 시범사업지역 모니터링 - 사업 대상지 현장조사 - 사업 민족도,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 범죄 불안감 등에 대한 설문조사	- 유사 사업과 차별화되도록 시범사업의 내용, 방향을 설정하는 업무 지침 마련
본 연구	- 조상규 외 (2015),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사업 주체별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인터뷰 - 관할 지구대 범죄데이터 분석	-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10개 사업지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 도구개발
	4 - 연구목적: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성과 분석, 지속적인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기본마련		- 지역주민 설문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 효과 분석 - 시범사업 개선 방향 도출
	- 유공률 외(2017),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의 시행효과 분석 연구	- CPTED 관련 선행연구 고찰 -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사업 동향 분석	-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프로그램별 만족도 분석
	- 연구목적: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이 거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계열 효과성 분석	- 사업 시행 전, 준공 직후, 준공 후 주민 설문조사 - 범죄데이터, 지역 물리환경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지 현황 분석 - 통계분석	-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효과의 지속기간 분석
	5 - 서승연 외 (2018),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효과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천안 시 원성동 사업을 중심으로	- CPTED 이론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주민, 공무원 등 관련주체 인터뷰 및 설문조사 - 통계분석 및 GIS 분석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다각 도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진단도구 개발 - 천안시 원성동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 -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의 개선 방향 도출
도 시 기 관 연 구	6 - 연구목적: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효과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측면에 서의 사업 개선 방안 도출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7	- 조성제(2019), 인천도시, 여성친화도시, CPTED, 도시재생 등 도시 안전 4 축의 공통 지침입법을 위한 제안 - 연구목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지침입법을 제안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중앙정부 및 지자체 범죄예방 관련 법, 제도 분석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CPTED 적용 강화
	- 조영진 외(2021), 자총주거지 내 범죄 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실태 증 연구 - 연구목적: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범죄예방효과를 미사적 공간단위에서 검증	- 선행연구 고찰 - 통계분석 및 GIS 분석 - 계층통계분석(이항로짓 분석)	- 대상지 내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설치 현황 및 112신고 건수 변화 분석 -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실증
8	- 심민규 (2022), CPTED 관련 조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천안시 CPTED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목적: CPTED 관련 조례가 적절히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CPTED 관련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	- CPTED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국내 CPTED 관련 조례 분석 -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현황 분석 - 주민 설문조사 - 도시안전디자인 대상지 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조사	- CPTED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조례의 현장 적용 여부 분석 - CPTED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에서의 CPTED 체크리스트 개발 제안
	- 정자연 외(2023), 인천시 타겟하드닝 CPTED 사업 효과의 실증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연구목적: 범죄두려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 개선안 제시	- CPTED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국내 타겟하드닝 사업 분석 - 주민 설문조사, 인터뷰 - 통계분석 - 현장조사	- 방범성능시설물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 집합호흡감에 대한 효과성 분석 수행 -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단체표준 등 방범성능 기준이 총족된 제품에 대한 장려
9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 - 연구목적: 국내 지역 여건과 공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방안을 탐색하고,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	- CPTED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CPTED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분석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관련 매뉴얼 분석 -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시공사 등 관련 주체 설문조사 및 인터뷰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 방향 정립을 위한 전문가 협업 - 정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 실태 파악, 관련 법 제도 조사·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 현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 도출 - 사업 분석, 관련 주체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공간 특성을 고려한 CPTED 전략 우선순위 제시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방향 제시
	본 연구		

출처 : 상기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 4. 연구 흐름도



[그림 1-6] 연구 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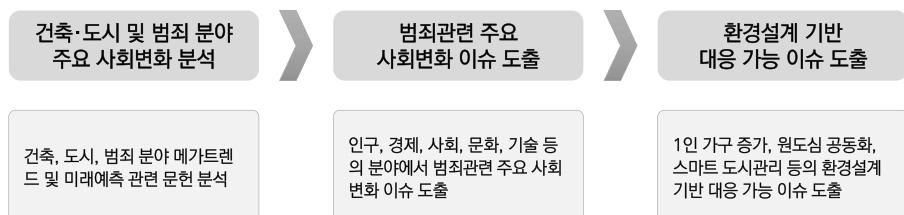
# 제2장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

1. 건축·도시공간에서의 사회변화 동향 분석
2. 주요 현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3.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 도출

## 1. 건축·도시공간에서의 사회변화 동향 분석

### □ 분석의 배경 및 목적

다양한 분야의 사회환경 변화는 건축 및 도시공간을 변화시키며, 공간의 물리적 특성은 범죄 발생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범죄 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 유형이나 도전에 대응하기 어렵다.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범죄의 특성 및 발생 추이 역시 달라질 가능성 있으며, 기술의 발전 및 정치·정책 이슈 등에 따른 범죄 발생 추이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축 및 도시공간 역시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의 방향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림 2-1] 건축 및 도시공간에서의 사회변화 동향 분석 과정  
출처: 연구진 작성

## 1) 건축·도시 및 범죄 부문의 사회변화 대응 방향성 고찰

### □ 건축 부문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건축과 생활 SOC 시설이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시 내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며, 여가와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와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향은 사회·경제·환경적 변화에 따라 높아지는 국민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축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영현 외, 2022, p.38).

먼저 인구 사회 분야에서는 인구 감소, 여가 시간 증가, 범죄 환경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공간 확대, CPTED 설계, 빙집 노후 건축이 요구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득 양극화, 저성장으로 소형 건축 리모델링, 축소 도시가 필요하다. 기술 분야에서는 AI, IoT, AR, VR, 드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신기술 발달로 인공지능 건축설계, BIM·스마트 홈 설계, AR·VR 건축모델링, 건축물 정보 공개 등이 요구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로 제로에너지 건축, 녹색 건축이 부각되고 있다. 재해 안전 분야에서는 화재, 지진, 코로나 19,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축자재 성능 강화, 재해 안전 설계, 임시주거시설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2-2] 사회변화에 따라 건축 공간에 요구되는 요소들

출처: 국토교통부. (2021).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2021~2025). p.23.

김영현 외(2022, p.37)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에서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건축정책의 사회요구 및 가치 변화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 분야에서는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생산인구(노동공급)감소로 인하여 학교시설이 축소되고, 1~2인 소형 주택 수요와 함께 고령층을 위한 시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건설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전제작 및 모듈러 공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복합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규모 근린 생활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건설자동화 사업 시행과 같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김영현, 2022, p.35).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로 인해 재난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 건축 및 재난방지시설이 증가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상가 공실률이 하락하고, 물류센터 등 이커머스 관련 시설의 공급이 증가하며, 재택근무 확대로 주거·사무공간이 복합화·대형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지속·확대되고, 학교 등 실내 공기질이 관리 되며, 건물 부분 탄소중립 정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김영현, 2022, p.35).

[표 2-1] 메가트렌드에 따른 건축 수요 예측과 건축 정책 동향

메가트렌드 구분		건축 수요 예측	건축 정책 동향
내용			
인구	• 고령화	• 학교시설 축소	• 학교시설 복합화
	• 1~2인 가구 증가	• 1~2인 소형 주택 수요 증가	•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생산인구(노동공급)감소	• 고령층을 위한 시설 수요 증가 • 건설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전제작 및 모듈러 공법 확대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건설자동화 사업 시행
환경	• 기후변화(지구온난화)	• 저탄소 녹색건축 증가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속·확대
	• 재난재해 증가	• 재난방지시설 증가	• 학교 등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	• 인수공통감염병 증가	•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상가 공실률이 하락하고, 물류센터 등 이커머스 관련 시설 공급 증가 • 재택근무 확대로 주거·사무공간 복합화, 대형화	• 건물부분 탄소중립 추진
	• 자율주행자동차 발달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홈 증가	• 국토교통 데이터 개방 추진
	• 품 사물인터넷 발달	• 3D프린팅 건축 도입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
	• 3D프린터 상용화	•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 증가	•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
경제	• 데이터 사용량 급증	• 건축 데이터 표준화 요구	
	• 소득불평등 심화	• 저렴주택 필요	• 주택공급확대
	• 저성장 및 탈세계화	• 물류센터, 촬영장 등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 수요 증가	•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 지원
경제		• 온디맨드, 전자상거래 및 배달경제 확대	

출처: 김영현 외. (2022).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p.37.

기술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홈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3D프린터가 상용화되고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홈이 증가하고 3D프린팅 건축이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이 증가하고, 건축 데이터 표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 데이터 개방과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추진되었다. 또한,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비율이 상향되었다(김영현, 2022, p.36).

경제 분야에서는 소득불평등 심화, 저성장, 탈세계화, 온디맨드, 전자상거래 및 배달경제 확대로 인하여 저렴주택 및 물류센터, 촬영장 등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영현, 2022, p.36).

## □ 도시 부문

이길제 외(2022, p.2)는 코로나19 전후 국내외 메가트렌드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미래 트렌드를 검토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STEPPER 분류법<sup>6)</sup>에 기초하여 인구, 경제, 기술, 환경·자원, 사회·정치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표 2-2] 도시 분야 코로나19 전후 분야별 메가트렌드

구분	메가트렌드		코로나 19 이후 방향성
	코로나 19 이전	코로나 19 이후	
인구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1·2인 가구 증가(국내)	저출산, 고령화 등 기존 트렌드 유지	유지
	국가 간 인구 이동 증가, 외국인 증가 (국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장기적으로는 기존 트렌드 유지)	변화 (장기 유지)
경제	저성장, 부의 불평등 심화 글로벌화, 다국적 기업 영향력 강화	경제 악화 및 빈부격차 심화 탈세계화 및 지역화, 국가별 공급망 강화	가속 변화
기술	디지털화, 자동화 및 인공지능의 발전, 바이오 기술의 진보, 사이버 의존도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수용도 증가, 원격의료 및 가상현실 기술 발달, 온라인 서비스 규제 완화	가속
환경· 자원	기후변화, 환경오염, 재난재해 심화 보건 문제의 심화	기후변화 등 기존 트렌드 유지	유지
	자원 부족(식량자원, 화석연료)·에너지 소비 증가 및 에너지 부족	신종 감염병 대확산, 위험 대응 일상화 에너지 소비 증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가속
사회· 정치	사회 양극화, 개인주의 강화 도시화, 수도권 집중 경향	개인화 및 디지털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확대, 개인-공동체 간 가치 충돌 심화 메가시티 매력 저하	가속 일부 변화
	거버넌스의 복잡화 및 정부 영향력 감소, 분권화, 다원화 및 사회참여 증가	큰 정부(정부의 역할과 시장개입 강화), 정부-민간 공조, 디지털 기반의 정치 확대	변화

출처: 이길제·김지혜·이재준·조운지. (2022).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방향. 국토정책 Brief. No.886. 국토연구원. p.2.

6) 미래를 예측하는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환경(Environment), 인구(Population), 정치(Politics), 경제(Economy), 자원(Resources)의 7가지 기준을 의미

인구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가 주요 특징으로 나타난다. 경제 분야에서는 저성장과 부의 불평등 심화가 두드러지며,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분야에서는 디지털화, 자동화 및 인공지능 발전, 바이오기술 진보, 사이버 의존도 증가가 뚜렷하다. 환경·자원 분야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환경오염, 재난재해가 지속되며,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협 대응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정치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사회 양극화와 개인주의 강화, 정부 영향력 감소가 전망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큰 정부와 정부-민간 공조 강화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이길제 외, 2022, pp.2-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23)은 국토교통 2050 미래유망 전략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국내외 미래전망 보고서를 수집하여 트렌드 재분류 및 구조화를 통해 도시인구, 기술, 산업 노동, 환경 에너지 변화로 구분하여 메가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최소영 외, 2023, p. 19).

[표 2-3] 2050 국토교통 메가트렌드-트렌드 도출 결과

구분	메가트렌드(13)	트렌드(28)
도시인구 구조변화	1.1 고령화 및 저출산 심화	고령화 심화 저출산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1.2 사회가치 다양화로 인한 개인화 및 양극화 심화	사회가치 다양화 개인화 및 양극화 심화
	1.3 뉴노멀 사회에서 비대면 생활패턴 증가 및 디지털 라이프 확산	뉴노멀 사회에서 비대면 생활패턴 증가 디지털 라이프 확산
	1.4 도시 노후화로 인프라 안전사고 우려 증가	도시 인프라 노후화 유지관리비 증가 및 안전사고 증가
기술 구조적 변화	2.1 AI, 양자컴퓨팅,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가속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분야 확대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활성화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확대
	2.2 자율형 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다양성 확대	자율형 모빌리티 모빌리티 다양성
	2.3 항공 및 우주기술 개발 가속화	항공분야 고효율·친환경 기술개발 가속화 우주기술 개발 가속화
	2.4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첨단기술 경쟁심화
산업노동 구조의 변화	3.1 저탄소화 요구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경제 확대	저탄소화 요구 증대 신재생 에너지 경제 확대
	3.2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 가상자산시장 성장	데이터경제 확산 디지털 가상자산시장 성장
	3.3 플랫폼 중심 비즈니스 확대	플랫폼 중심 비즈니스 확대 산업노동구조의 변화
	4.1 지구온난화 심화 및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재난 증가	지구온난화 심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재난 증가
환경 에너지 변화	4.2 에너지 및 자원 위기 심화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3R(Recycle, Resue, Reduce) 기술 중요성 대두 국지적·계절적 물 부족 심화 식량 안보 중요성 증대 에너지 및 자원 안보 중요성 증가

출처: 최소영 외. (2023). 국토교통 2050 미래기술 전략로드맵수립.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p.19.

상기 종합한 메가트렌드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도출한 국토교통 분야 10대 주제별 이슈는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2050 국토교통 분야 주제별 이슈 도출

주제	이슈
건설산업 인력 부족 및 작업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건설산업 인력 부족 및 외국인 노동 인력 증가</li> <li>- 인프라 건설 노동강도 저감 요구 증대 및 안전한 인프라 건설현장 조성 수요 증가</li> <li>-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해 옥외 작업 환경 악화 및 작업 가능 일수 감소</li> <li>- 인프라 건설 노동 강도 저감 요구 증대 및 안전한 인프라 건설현장 조성 수요 증가</li> </ul>
메가시티 집중 및 지방도시 쇠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용 증가, 노후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 증가</li> <li>- 도심 집중으로 교통 및 물류 혼잡도 증가, 도시 슬럼화 및 공동화, 도심 주거공간 부족</li> <li>- 기존 대도시권의 확대 및 주요 거점도시 확산으로 도시 간 이동 위한 광역 통행량 증가</li> <li>- 지방의 빙집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도시-비도시 간 교육, 업무환경, 주거환경, 교통편의 시설 격차 심화</li> </ul>
주거생활에 대한 니즈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택 및 비대면업무,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여가활동(홈루덴스족, 홈케이션족등)증가 등으로 주거 공간에 대한 니즈 변화</li> <li>- 주거·생활 공간 어메니티(Amenity)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li> <li>- 동성가족, 1·2인 가구, 이민자 가족, 반려동물 거주, 공유주택 등 다양한 가구 유형 증가</li> </ul>
도시 내 건물 및 인프라 노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기반시설 교체, 보수, 유지 위한 비용적, 기술적, 환경 이슈(에너지, 탄소저감)복합 제기</li> <li>- 지하 시설물 관련 사고 증가로 지하공간 안전 증진 및 노후 시설물 유지 관리 수요 증가</li> <li>- 인프라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고내구성 및 장수명기술 개발 필요성 증대</li> </ul>
교통 복지 및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반, 어린이 등)의 이동편의시설 확대 필요</li> <li>- 고령자의 생활, 통행·이동 패턴 변화에 따른 교통수단·서비스 수요변화 및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li> </ul>
新교통수단 및 공유 모빌리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차, UAM, 공유 모빌리티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확산됨에 따라 전용도로, ICT 인프라, 안전관리시설 변화 및 관련 서비스 확충 필요성 증가</li> <li>- 라이드쉐어링, 주차공유, 공유기반형 교통시스템, 공유오피스 등 공유경제 확산으로 소형, 공유형 모빌리티수요 급증</li> </ul>
환경오염 심화 및 기후재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대비한 도시와 사회 인프라의 레질리언스 확보에 대한 관심 증가</li> <li>- 도시와 기반시설 홍수 피해 저감 위한 재해대비 건설기술 상향, 신속 복구 기술 등 필요</li> <li>-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주택 및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증가</li> <li>- 건축물(제로에너지빌딩), 저탄소 건설기술 및 건설재료, 건설장비의 탄소배출 저감 필요</li> </ul>
자원부족 및 신에너지 활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 자원 확보 경쟁 심화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 지속, 디지털 기기 증가로 에너지 소비량 증가</li> <li>- 지구차원의 자원 고갈로 인해 자원의 순환 활용을 위한 기술 중요성 증가</li> <li>-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대용량 장기 에너지 저장 인프라 구축 필요성 증가</li> <li>- 건물 신재생에너지 적용 및 에너지 효율화 요구 증가</li> </ul>
신공간 창출 논의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도로, 지하공간, 해저도시, 수중도로와 같은 공간의 확장에 대한 도전 증가로 생활공간 및 이동성 확장</li> <li>- 하이퍼튜브, 극초음속 비행기 등 초광역 교통수단 개발 논의 지속</li> <li>- 심해/지하 공간으로 확장을 위한 공간개발 방안 마련 및 주거, 교통 기반 시설 변화 대응 필요</li> <li>- 대심도 지하공간 내, 해저(중), 우주공간에 적합한 공간구성, 시설물 형태 및 건설기술 필요</li> </ul>
디지털화 및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이용, 디지털화를 통한 자동화, 생산성 향상 필요</li> <li>- 초대형 건설사업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한 관리 효율화</li> <li>- 건설산업에서는 플랫폼 중심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산업 내 활용</li> <li>- 건설생산방식 자동화, ICT 융합 등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화, 글로벌 표준 확보의 필요성 증가</li> </ul>

출처: 최소영 외. (2023). 국토교통 2050 미래기술 전략로드맵수립.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pp.117-119.

## □ 범죄 부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3개년 연구 총서를 발간하고, 연도별 주제를 인구고령화(15), 다문화 사회(16), 경제적 양극화(17)로 구분하였다.

[표 2-5] 주요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 발생 원인과 미래 예측 및 대비 정책

원인	세부 원인	범죄 발생 예측	사회변화에 대비한 정책
인구 고령화	노인 빈곤, 고용 불안, 건강 악화, 사회적 소외, 세대갈등, 상대적 박탈감과 스트레스의 증가, 노인 단독 가구 증가, 노인 주거환경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체 사회의 범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li> <li>- 노인범죄율은 1990년대까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일정기간 동안에는 정체를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 오히려 급증</li> <li>- 인구의 고령화는 전체 범죄의 발생보다는 노인 범죄의 발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침</li> <li>-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인구가 되기 시작하는 2025년부터는 전체 인구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범죄율 또한 가장 높은 코호트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의미이며, 결국 노인의 범죄와 범죄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li> </ul>	<p>[ 단기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기관 역할 강화</li> <li>-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li> <li>- 노인 재범 방지 프로그램 도입</li> <li>- 지역 사회 경찰활동 강화</li> <li>- 노인 대상의 지역 사회를 통한 범죄 예방 교육 실시</li> <li>- 독거 노인 거주 시설의 취약성 보강</li> <li>- 노인 범죄자 및 수형자 분류 기준 확립</li> <li>- 노인수형자 전용 교정 프로그램 개발</li> </ul> <p>[ 장기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복지 강화,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 형사절차상 노인 보호, 노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노인 피해자 보호 및 노인 범죄자 지원 법률 제정, 노인교정시설 설치,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 개선, 전문 프로그램 마련, 대안적 처우 개선, 간생 보호 확대 개선, 노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 연구</li> </ul>
다문화 사회	<p>[ 외국인 범죄 ]</p> <p>외국인 수 증가,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부실, 차별과 혐오, 경제적 빈곤, 한국문화 부적응</p> <p>[ 외국인 범죄 피해 ]</p> <p>외국인 입국자 증가, 불안정한 신분, 차별과 혐오, 피해자 보호 미흡, 외국인 간 범죄 발생 증가, 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가 증가하는 추세</li> <li>- 외국인들 중 범죄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li> <li>- 금융범죄의 수법 역시 진화하는 경향</li> </ul>	<p>[ 외국인 범죄 대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범죄 대상 맞춤형 경찰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범죄에 대한 통계의 정교화와 외국인범죄자 데이터베이스 마련, 외국인범죄 전담 경찰관 및 외국인 경찰관 확대, 외국인의 신종범죄 및 지능범죄에 대한 분석,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강화</li> </ul> </li> <li>- 사회정책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외국인 차별의식 개선, 임금 및 복지제도 개선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체류 외국인 신분단속 강화</li> </ul> <p>[ 외국인 범죄 피해 대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차별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경찰방안 마련, 범죄예방 교육, 밀집지역 집중관리</li> </ul>
경제 양극화	지역 간 격차, 부의 세습으로 어려운 계층이 등, 급속한 세계화, 정보와 기술의 편중, 교육 기회 불평등, 부자 위주의 정부 정책,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의 비행 평성 및 불안정성 문제	(미래 사회 범죄의 특성) 데이터범죄, 전문직·고소득층 화이트칼라의 몰카 등 성추행 범죄, 보이스피싱 및 해킹,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범죄, 일자리 감소와 부채 증가에 따른 생계형 범죄, 사기·횡령 범죄 등의 성격한 증가, 범죄자의 저연령화 현상,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 증가, 일시적 분노 표출하는 보복범죄, 사회에 대한 불신이 분노로 이어지면서 사소한 사건을 발단으로 공격성이 드러나는 경우,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종오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경제 및 형사정책들의 종합적 고려</li> <li>- 지역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고려한 범죄예방 대책</li> <li>- 법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성의 극대화</li> <li>-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형사정책 및 경찰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의 특성에 기반한 형사정책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인, 방화: 농어촌 ↑ / 수도권 ↓</li> <li>* 성폭력, 폭행, 상해: 수도권 ↑ / 농어촌 ↓</li> <li>* 재산범죄(강도, 절도): 중추 도시권</li> </ul> </li> <li>- 지역사회 기반의 경찰정책, 집중경찰정책, 문제해결식 경찰정책</li> </ul> </li> </ul>

출처: 박형민·서주연. (2015).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박형민 외. (2016).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I):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홍영오 외. (2017).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II):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인구 고령화 분야를 보면 세부 원인으로 노인 빈곤, 고용 불안, 건강 악화, 사회적 소외, 세대갈등, 상대적 박탈감과 스트레스의 증가, 노인 단독 가구 증가, 노인 주거환경 악화가 제시되며, 노인의 범죄와 범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문화 사회 분야에서는 외국인이 가해자인 범죄와 피해자인 범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강력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 금융범죄 수법도 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 양극화 분야에서는 지역 간 격차, 부의 세습으로 어려운 계층이동, 급속한 세계화, 정보와 기술의 편중, 교육 기회 불평등, 부자 위주의 정부 정책(조세정책, 산업정책),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가 세부 원인으로 제시되었으며,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유발되는 범죄 유형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지역별(생활권별) 범죄 발생 추세 및 특성 분석 결과, 범죄현상이 대도시와 농어촌에서 다르게 나타나므로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 또한 지역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홍영오 외, 2017, p.428)일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살인과 방화의 경우, 농어촌에서 가장 높고, 수도권에서 가장 낮게 발생하였다. 반면, 성폭력, 폭행, 상해의 경우, 수도권에서 가장 높고, 농어촌에서 가장 낮게 발생하였다. 강도,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는 중추 도시권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였다.

#### □ 건축·도시·범죄 부문의 사회변화 대응 방향성

건축·도시·범죄 부문의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선행연구과 관련 자료 검토결과, 인구, 경제·사회, 문화, 기술, 환경·에너지, 산업의 총 6개 분야 사회변화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으로 종합할 수 있다. 인구 관련 사회변화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역피라미드 형태의 인구구조로 변화하며 인구 규모도 감소함에 건축·도시·범죄 부문이 공통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외국인 노동 인력 증가 등이 구체적인 사회환경 주요 변화 대응 주제임을 확인하였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건축·도시·범죄 부문이 공통으로 저성장, 사회 양극화 및 수도권 집중화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응할 필요가 강조되었다. 문화 분야의 경우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개인주의 강화, 사회가치의 다양화, 비대면 생활패턴의 증가에 건축·도시·범죄 부문의 공통적 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기술 분야에서는 디지털화 및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응하며 기술 진보의 가속도와 의존도 증가에 공통으로 대응할 필요가 확인되었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자원 부족이 사회환경 주요 변화 이슈로 확인되었으며, 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 가상자산시장의 성장, 플랫폼 중심 산업의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확인되었다.

##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도시공간 대응 이슈 도출

인구, 경제·사회, 문화, 기술, 환경·에너지, 산업으로 도출된 주요 사회변화 대응 필요 분야 중 범죄예방의 건축·도시공간 조성을 통한 대응 가능 이슈를 도출하였다. 관련 부분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 범죄예방 건축·도시공간 조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이슈로는 인구, 경제·사회, 문화, 기술 총 4개의 분야가 선정되었다. 환경·에너지 및 산업 분야의 사회변화 대응은 건축·도시·범죄 부문의 사회변화 대응이 필요한 내용에는 포함되었으나, 범죄예방 건축·도시공간 조성을 통한 대응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범죄예방 건축·도시공간 조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인구, 경제·사회, 문화, 기술 분야의 주요 내용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사회환경 주요 변화와 범죄 발생 특성과의 관계 종합

주요 변화	세부 주요 변화	범죄 발생 특성
인구	1·2인 가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비율 증가 시, 폭력 범죄와 성범죄 증가(서민진·강석진 2023)</li> <li>- 1인 가구 비율 증가 시, 폭력 범죄 증가(염윤호 2020)</li> <li>-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1%p 증가 시, 5대 범죄율은 10만 명당 약 247건까지 증가. 5대 범죄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 범죄는 성범죄와 절도범죄(김원종 2020)</li> </ul>
	소형 주택 밀집지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세대주택 수와 저층 건물 수가 많을수록 폭력 범죄와 성범죄가 감소(서민진·강석진 2023)</li> <li>- 다세대주택 비율이 증가할수록 절도범죄·폭력범죄 감소(염윤호 2020)</li> <li>- 저층 주거지역 가로공간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범죄 두려움을 느끼며 환경 민감성이 크고, 두려움을 느끼는 가로환경요소는 자연적 감시의 부족과 미흡한 조명(이자현 외 2022)</li> </ul>
	외국인 밀집지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생활인구수가 높을수록 살인 발생이 유의미하게 증가(장현석 2022)</li> <li>-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발생 위험 증가(황종아·강지연 2021)</li> </ul>
경제·사회	원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 도시-비도시 간 주거환경 격차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상권 입지 지역일수록, 노후 상업용 건물과 공기가 많을수록, 노후 주택용 건물비율이 높을수록,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수록 범죄발생 위험 증가(황종아·강지연 2021)</li> <li>- 인구밀도 감소 시, 폭력범죄 증가(염윤호 2020)</li> <li>- 공간 밀도와 접근성, 생활인구 높은 상업·주거지역에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정진도 2023)</li> </ul>
문화	공동체성 약화 및 비대면 활동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발생 초기 유행 경우, 범죄 발생은 감소했으나 시민생활밀착형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 후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 실업이 이어지면서 불법사금용 피해가 심화되고, 불법사행성계임범죄가 크게 증가(오세연·김학범 2021)</li> <li>- 코로나19 시기 대부분의 대면 범죄가 감소하였고 전체범죄도 소폭 감소. 반면, 비대면으로 실행 가능한 사이버범죄, 협박, 공갈, 스토킹 범죄는 증가(이기수 2021)</li> </ul>
기술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IoT 기반 도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발전과 스마트조명시스템 진화는 범죄예방 수단으로서 유의미함(이정민·강태임 2023)</li> <li>- 신개발지 및 아파트 단지에 비해 도시설계적 CPTED 접근이 어려운 고밀형 저층주거지의 경우 방범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CPTED를 적극적으로 활용(최우철·나준엽·이상경 2023)</li> <li>- 방대한 범죄 기록을 빅데이터 처리하여 범죄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경우 범죄의 발생 빈도 감소 가능(김원 2020)</li> </ul>

출처: 상기 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 □ (인구)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형 주택 밀집지역의 증가 등에 주목할 필요

### 사회환경 주요 변화

-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과 함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 감소가 예측됨
- 반면, 핵가족화로 인해 1·2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국내 노동 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 인력이 증가함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

- 도시 내 1~2인 가구 밀집지역이 증가함
-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대되고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슈가 대두됨

- 1·2인 가구 증가

서민진·강석진(2023, p.235)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폭력 범죄와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윤호(2020, p.221)도 1인 가구 비율 증가 시,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밝혔다. 김원종(2020, p.148)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1%p 증가할 때 5대 범죄율은 10만 명당 약 247건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대 범죄율 평균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5대 범죄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 범죄는 성범죄와 절도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소형 주택 밀집지역 증가

서민진·강석진(2023, p.235)은 다세대주택 수와 저층 건물 수가 많을수록 폭력 범죄와 성범죄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마찬가지로 염윤호(2020, p.221)도 다세대주택 비율이 증가할수록 폭력범죄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지현 외(2022, p.64)는 저층 주거지역 가로공간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범죄 두려움을 느끼며 환경 민감성이 크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두려움을 느끼는 가로환경요소로 자연적 감시의 부족과 미흡한 조명을 확인했으며,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에서 진행하는 바닥 문구와 안내판의 설치가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 외국인 밀집지역 증가

장현석(2022, p.137)에 따르면 외국인 생활인구수가 높을수록 살인 발생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종아·강지연(2021, p.93)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 □ (경제·사회) 원도심 공동화 및 빈집의 증가,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응할 필요

### 사회환경 주요 변화

- 사회 양극화 가속화와 함께 부의 불평등이 심화됨
  - 도시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동시에 도시의 오래된 인프라는 노후화를 경험
  - 지방 분권화와 더불어 거버넌스가 복잡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추세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
- 도시 내 1~2인 가구 밀집지역이 증가
  -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대되고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이슈가 대두됨

- 원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 도시-비도시 간 주거환경 격차 심화

황종아·강지연(2021, p.93)은 일반적인 중심상업 및 업무지역보다는 소규모의 상권이 입지한 지역일수록, 노후 상업용 건물과 공가가 많을수록 범죄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노후 주택용 건물비율이 높을수록,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수록 범죄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염윤호(2020, p.221)는 인구밀도 감소 시, 폭력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반대되는 결과로 정진도(2023, p.33)는 공간 밀도와 접근성, 생활인구가 높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또한, 거주인구나 지역고용인구 등 지역 소속감이 높은 인구가 많을수록 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 □ (문화)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개인주의 강화 및 공동체성 약화에 대응할 필요

### 사회환경 주요 변화

-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생활패턴 증가와 함께 단체 문화가 축소됨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
-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추세
  - 택배 활용 등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회식 문화 감소 등으로 야간 유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범죄 발생 패턴이 변화할 가능성 높음

- 공동체성 약화 및 비대면 활동 증가

사회 전반적으로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코로나19와 범죄 발생에 관한 연구로 오세연·김학범(2021, p.682)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유행단계인 경우, 전체적으로 범죄 발생은 감소했으나 시민생활밀착형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반기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 실업이 이어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화되고, 불법사행성계임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기수(2021, p.186)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전파상황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 빈곤

의 확산 등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요인을 갖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접촉과 범죄학습의 기회를 줄여 범죄감소요인을 갖고 있기도 하다고 봤다. 실제 코로나19 시기에 대부분의 대면 범죄가 감소하였고 전체범죄도 소폭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비대면으로 실행 가능한 사이버범죄, 협박, 공갈, 스토킹 범죄 등의 증가는 매우 특징적이다.

#### □ (기술) 스마트도시 조성과 기술 발전에 적극 합류할 필요

##### 사회환경 주요 변화

- 스마트·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 중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
-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통합관제센터가 대다수 지자체에서 구축·운영되어 IoT 기반 도시 관리가 가능

-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IoT 기반 도시 관리

이정민·강태임(2023, p.348)은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조명시스템이 진화함에 따라 범죄예방 수단으로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우철 외(2023, p.95)는 신개발지 및 아파트 단지에 비해 도시설계적 CPTED 접근이 어려운 고밀형 저층주거지의 경우 방범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CPTED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됨을 밝혔다. 김원(2020, p.79)은 방대한 범죄 기록을 빅데이터 처리하여 범죄를 예측하는데 사용할 경우 범죄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기 본 절에서 정리한 건축·도시·범죄 부문의 주요 사회환경 변화 분야 도출(인구, 경제·사회, 문화, 기술, 환경·에너지, 산업)과 그 중 범죄예방 건축·도시공간 조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사회환경 변화로 범위를 제한한 결과(인구, 경제·사회, 문화, 기술) 및 해당 사회환경 변화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집중해야 할 이슈 도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7] 건축·도시·범죄 부문 사회환경 주요 변화와 환경설계 기반(건축도시공간) 대응 가능 이슈

구분	1단계. 사회환경 주요 변화(배경)	2단계(원인). 사회환경 주요 변화(범죄 관련)	3단계(결과). 환경설계 기반 범죄예방 대응 가능 이슈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li> <li>- 1·2인 가구 증가, 외국인 노동 인력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구조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li> <li>- 1·2인 가구 증가</li> <li>- 외국인 노동 인력 증가</li> </ul> </li> <li>( 수도권 집중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양극화 및 부의 불평등 심화</li> <li>- 도시화, 수도권 집중 경향</li> <li>- 도시 인프라 노후화</li> <li>- 거버넌스의 복잡화 및 정부 영향력 감소, 분권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인 가구, 소형 주택 밀집지역 증가</li> <li>- 외국인 밀집지역 증가</li> </ul>
경제·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성장, 부의 불평등 심화</li> <li>- 글로벌화, 다국적 기업 영향력 강화</li> <li>- 사회 양극화</li> <li>- 도시화, 수도권 집중 경향</li> <li>- 도시 인프라 노후화</li> <li>- 거버넌스의 복잡화 및 정부 영향력 감소, 분권화, 사회참여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집중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양극화 및 부의 불평등 심화</li> <li>- 도시화, 수도권 집중 경향</li> <li>- 도시 인프라 노후화</li> <li>- 거버넌스의 복잡화 및 정부 영향력 감소, 분권화</li> </ul> </li> <li>( 개인주의 및 비대면 생활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주의 강화</li> <li>- 비대면 생활패턴 증가</li> <li>- 코로나 19 이후 단체 문화 축소</li> </ul> </li> <li>( 디지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디지털 기술 발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집중으로 원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li> <li>- 도시 기반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원도심 무질서도 증가</li> <li>- 지방의 빙집 증가</li> <li>- 도시-비도시 간 주거환경, 교통편의 시설 격차 심화</li> <li>- 경제 소외 지역 예산 부족으로 범죄 예방 시설 설치 부족</li> <li>-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공동체성 약화</li> <li>- 택배 활용 등 비대면 활동 증가</li> <li>- 야간 유동인구 감소</li> <li>-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IoT 기반 도시 관리</li> </ul>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주의 강화, 사회가치 다양화</li> <li>- 여가 시간 증가 및 비대면 생활패턴 증가</li> <li>- 디지털화, 자동화 및 인공지능의 발전, 바이오 기술의 진보, 사이버 의존도 증가</li> </ul>	-	-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화, 자동화 및 인공지능의 발전, 바이오 기술의 진보, 사이버 의존도 증가</li> <li>- 기후변화, 환경오염, 재난재해 심화</li> </ul>	-	-
환경·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 문제의 심화</li> <li>- 에너지 소비 증가 및 자원 부족(식량자원, 화석연료)</li> </ul>	-	-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화 요구 증대</li> <li>-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 가상자산시장 성장</li> <li>- 플랫폼 중심 비즈니스 확대</li> </ul>	-	-

출처: 김영현 외. (2022); 이길제 외. (2022); 최소영 외. (2023); 박형민-서주연. (2015); 박형민 외. (2016); 홍영호 외. (2017) 및 상기 절에서 참고한 문헌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 2. 주요 현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 전문가 의견조사의 목적

인구, 경제·사회, 문화 및 기술 부문의 사회변화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정책과 사업의 기준 전략 변화를 요구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와 소형 주택의 밀집 현상은 청년 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화의 전략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 변화 필요의 대표적 예시일 것이다. 하지만 인구, 경제·사회, 문화·기술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하나하나 발맞추어 대응하며 전략의 변화를 꾀하기에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한계가 존재한다.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전략 개선 필요를 논의함에 있어 각 사회변화 이슈가 갖는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이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정책과 사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가능한 고려 가능한 주요 사회변화 이슈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범죄 예방 환경조성의 개선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회변화 이슈를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 의견조사 방법과 주요 내용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의 변화 필요에 있어 주요 사회변화 이슈가 갖는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 양식을 마련하였다. 의견조사 대상 전문가는 범죄, 건축·도시, 안전, 복지 분야 등 본 연구가 정리한 주요 사회변화 부문 정책·학술연구자로 풀을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이메일과 개별 연락을 통한 서면자문 형식으로 전문가 의견 조사지를 발송하고, 2024년 5월 7일부터 2024년 5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관련 전문가 43인의 의견 조사지를 회수하였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이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의 제목으로 수행된 전문가 의견 조사지에는 본 연구의 개요와 조사의 범위에 대한 소개, 본 연구에서 정리한 주요 사회변화 이슈와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관련 주요 현안, 검찰청 및 경찰청 범죄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하였다. 연구소개, 사회변화 관련 주요 현안, 범죄데이터 분석결과 설명 이후 전문가 의견 조사지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있어 각 현안이 갖는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을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척

도 리커트 형식으로 질문하였다. 아울러 각 응답자로 하여금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회변화 현안 등을 서술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

- (중요도) 다음의 주요 현안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진 중요성(영향력)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	중요성(영향력)				
		낮음<-----> 높음				
인구구조 변화	1·2인 가구, 소형 주택 밀집지역 증가	①	②	③	④	⑤
	외국인 밀집지역 증가	①	②	③	④	⑤
	지방도시 청년인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①	②	③	④	⑤
수도권 집중화	도심 집중으로 원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	①	②	③	④	⑤
	도시 기반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원도심 무질서도 증가	①	②	③	④	⑤
	지방의 빈집 증가	①	②	③	④	⑤
	도시-비도시 간 주거환경, 교통편의 시설 격차 심화	①	②	③	④	⑤
	경제 소외 지역 예산 부족으로 범죄 예방 시설 설치 부족	①	②	③	④	⑤
개인주의 및 비대면 생활 확대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공동체성 악화	①	②	③	④	⑤
	택배 활용 등 비대면 활동 증가	①	②	③	④	⑤
	야간 유동인구 감소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화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IoT 기반 도시 관리	①	②	③	④	⑤

- (긴급성) 다음의 주요 현안들이 발생·변화하는 추이 등에 비추어 범죄예방 관련 분야에서의 대응 긴급성 또는 시급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	긴급성(시급성)				
		낮음<-----> 높음				
인구구조 변화	1·2인 가구, 소형 주택 밀집지역 증가	①	②	③	④	⑤
	외국인 밀집지역 증가	①	②	③	④	⑤
	지방도시 청년인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①	②	③	④	⑤
수도권 집중화	도심 집중으로 원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	①	②	③	④	⑤
	도시 기반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원도심 무질서도 증가	①	②	③	④	⑤
	지방의 빈집 증가	①	②	③	④	⑤
	도시-비도시 간 주거환경, 교통편의 시설 격차 심화	①	②	③	④	⑤
	경제 소외 지역 예산 부족으로 범죄 예방 시설 설치 부족	①	②	③	④	⑤
개인주의 및 비대면 생활 확대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공동체성 악화	①	②	③	④	⑤
	택배 활용 등 비대면 활동 증가	①	②	③	④	⑤
	야간 유동인구 감소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화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IoT 기반 도시 관리	①	②	③	④	⑤

[그림 2-3]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출처: 연구진 작성

##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 응답자 기초 현황

전문가 의견조사의 응답자는 총 43명이며, 건축, 도시, 범죄, 경찰, 사회, 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다. 전문가 중 도시 분야의 전문가가 37.2%로 가장 많았다. 도시 분야 전문가는 크게 도시설계, 도시계획, 지리학 등으로 분류되며, 세부적으로는 생활안전, 도시재생, 공간 네트워크, 보행, 고령친화 등으로 다양하였다. 건축 분야 전문가는 14.0%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범죄 분야 전문가는 경찰 대학교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 연구기관의 교수, 연구원 등이로 구성하였다. 사회 분야 전문가는 16.3%이며, 인구나 심리 등의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표 2-8] 중요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단위: %pt)

분야	건축	도시	범죄	경찰	사회	합계
표본수(명)	6	19	5	6	7	43
비율(비율)	14.0	44.2	14.0	11.6	1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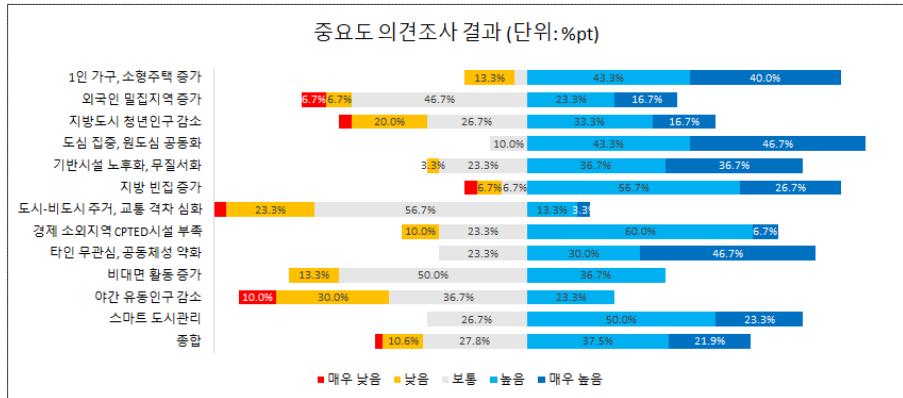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 □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 필요의 중요도

주요 사회변화가 갖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 필요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조사결과, 인구, 경제·사회, 문화, 기술 부문의 주요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의 개선 필요 중요도 응답을 종합하였을 때 평균 73.3%pt로 나타났으며 ±7.3%pt의 신뢰구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의 %pt 구간<sup>7)</sup>으로 볼 때, 응답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주요 사회변화가 갖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 필요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도심 집중으로 인한 원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높음·매우 높음 응답 - 90.0%pt), “1·2인 가구 및 소형주택 밀집지역 증가”(높음·매우 높음 응답 - 83.3%pt), “지방의 빈집 증가”(높음·매우 높음 응답 - 83.3%pt) 등의 사회변화 현안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7) 매우 낮음 : 0~20%pt, 낮음 : 20~40%pt, 보통 : 40~60%pt, 높음 : 60~80%pt, 매우 높음 : 80~100%pt



[그림 2-4] 중요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반면 전문가들은 “도시-비도시 간 주거환경, 교통편의 시설 격차 심화”(보통·낮음·매우 낮음 응답 - 83.3%pt), “야간 유동인구 감소”(보통·낮음·매우 낮음 응답 - 76.7%pt), “택 배 활용 등 비대면 활동 증가”(보통·낮음·매우 낮음 응답 - 63.3%pt) 등의 사회변화 현안은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 필요에 있어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2-9] 중요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단위: %pt)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평균	신뢰 구간(±)
1인 가구, 소형주택 증가	0.0	13.3	3.3	43.3	40.0	82.0	7.2
외국인 밀집지역 증가	6.7	6.7	46.7	23.3	16.7	67.3	7.8
지방도시 청년인구 감소	3.3	20.0	26.7	33.3	16.7	68.0	8.0
도심 집중, 원도심 공동화	0.0	0.0	10.0	43.3	46.7	87.3	4.9
기반시설 노후화, 무질서화	0.0	3.3	23.3	36.7	36.7	81.3	6.3
지방 빈집 증가	3.3	6.7	6.7	56.7	26.7	79.3	7.0
도시-비도시 주거·교통 격차	3.3	23.3	56.7	13.3	3.3	58.0	5.8
경제 소외지역 CPTED시설 부족	0.0	10.0	23.3	60.0	6.7	72.7	5.6
타인 무관심, 공동체성 악화	0.0	0.0	23.3	30.0	46.7	84.7	5.9
비대면 활동 증가	0.0	13.3	50.0	36.7	0.0	64.7	4.9
야간 유동인구 감소	10.0	30.0	36.7	23.3	0.0	54.7	6.9
스마트 도시관리	0.0	0.0	26.7	50.0	23.3	79.3	5.2
종합	2.2	10.6	27.8	37.5	21.9	73.3	7.3

출처: 연구진 작성

## □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의 긴급성

주요 사회변화가 갖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의 긴급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는 해당 응답을 종합하였을 때 평균 70.4%pt로 나타났으며  $\pm 7.7\%$ pt의 신뢰구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의 %pt 구간<sup>8)</sup>으로 볼 때, 응답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주요 사회변화가 갖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의 긴급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IoT 기반 도시 관리”(높음·매우 높음 응답 - 83.3%pt), “도시 기반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원도심 무질서도 증가”(높음·매우 높음 응답 - 83.3%pt), “도심 집중으로 인한 원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높음·매우 높음 응답 - 76.7%pt) 등의 사회변화 현안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 긴급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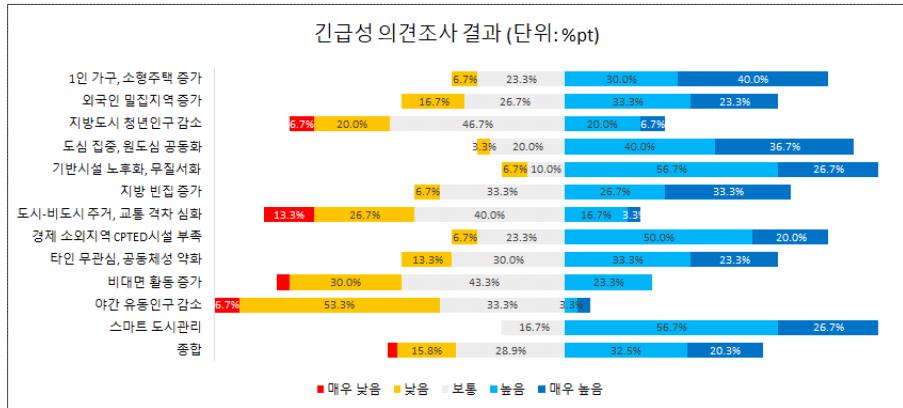
반면 전문가들은 “야간 유동인구 감소”(보통·낮음·매우 낮음 응답 - 93.3%pt), “도시-비도시 간 주거환경, 교통편의 시설 격차 심화”(보통·낮음·매우 낮음 응답 - 80.0%pt), “택배 활용 등 비대면 활동 증가”(보통·낮음·매우 낮음 응답 - 76.7%pt) 등의 사회변화 현안은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의 긴급성이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2-10] 긴급성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단위: %pt)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평균	신뢰 구간( $\pm$ )
1인 가구, 소형주택 증가	0.0	6.7	23.3	30.0	40.0	80.7	7.0
외국인 밀집지역 증가	0.0	16.7	26.7	33.3	23.3	72.7	7.5
지방도시 청년인구 감소	6.7	20.0	46.7	20.0	6.7	60.0	7.2
도심 집중, 원도심 공동화	0.0	3.3	20.0	40.0	36.7	82.0	6.1
기반시설 노후화, 무질서화	0.0	6.7	10.0	56.7	26.7	80.7	5.9
지방 빈집 증가	0.0	6.7	33.3	26.7	33.3	77.3	7.1
도시-비도시 주거·교통 격차	13.3	26.7	40.0	16.7	3.3	54.0	7.4
경제 소외지역 CPTED시설 부족	0.0	6.7	23.3	50.0	20.0	76.7	6.1
타인 무관심, 공동체성 약화	0.0	13.3	30.0	33.3	23.3	73.3	7.2
비대면 활동 증가	3.3	30.0	43.3	23.3	0.0	57.3	6.0
야간 유동인구 감소	6.7	53.3	33.3	3.3	3.3	48.7	5.9
스마트 도시관리	0.0	0.0	16.7	56.7	26.7	82.0	4.8
종합	2.5	15.8	28.9	32.5	20.3	70.4	7.7

출처 : 연구진 작성

8) 매우 낮음 : 0~20%pt, 낮음 : 20~40%pt, 보통 : 40~60%pt, 높음 : 60~80%pt, 높음 : 80~100%pt



[그림 2-5] 긴급성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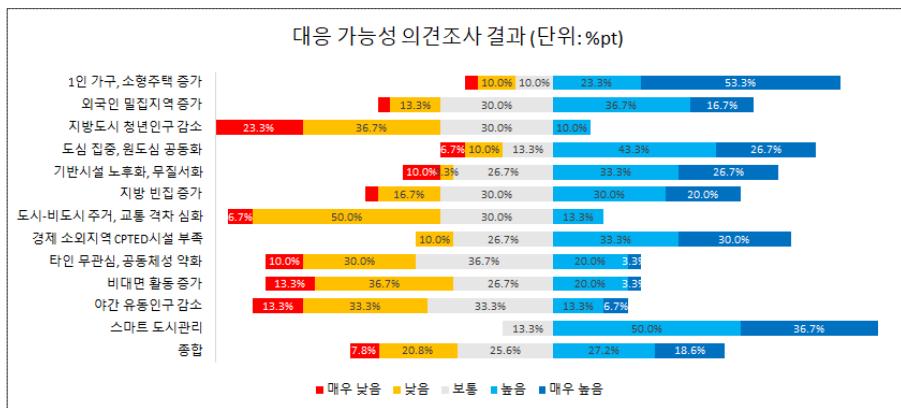
#### □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대응 가능성

주요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대응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는 해당 응답을 종합하였을 때 평균 65.6%pt로 나타났으며 ±8.8%pt의 신뢰구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의 %pt 구간<sup>9)</sup>으로 볼 때, 응답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주요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대응 가능성이 보통~높음 수준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IoT 기반 도시 관리”(높음·매우 높음 응답 - 86.7%pt), “1·2인 가구, 소형 주택 밀집지역 증가”(높음·매우 높음 응답 - 76.7%pt), “도심 집중으로 인한 원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높음·매우 높음 응답 - 70.0%pt) 등의 사회변화 현안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대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지방도시 청년인구 감소”(보통·낮음·매우 낮음 응답 - 90.0%pt), “도시-비도시 간 주거환경, 교통편의 시설 격차 심화”(보통·낮음·매우 낮음 응답 - 86.7%pt), “야간 유동인구 감소”(보통·낮음·매우 낮음 응답 - 80.0%pt) 등의 사회변화 현안은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통한 대응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9) 매우 낮음 : 0~20%pt, 낮음 : 20~40%pt, 보통 : 40~60%pt, 높음 : 60~80%pt, 높음 : 80~100%pt



[그림 2-6] 대응 가능성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표 2-11] 대응 가능성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단위: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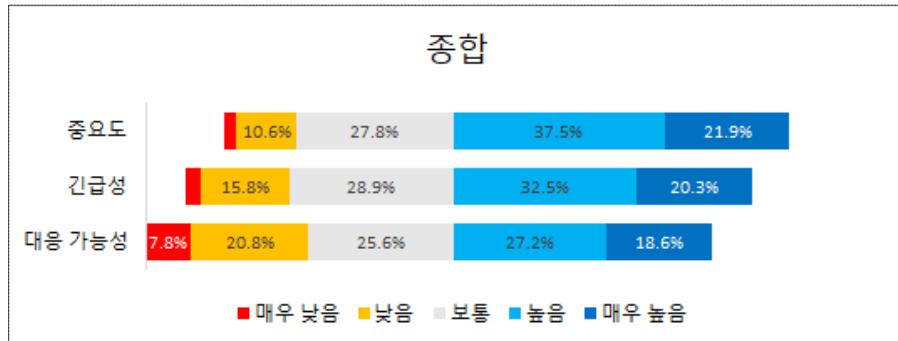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평균	신뢰 구간(±)
1인 가구, 소형주택 증가	3.3	10.0	10.0	23.3	53.3	82.7	8.5
외국인 밀집지역 증가	3.3	13.3	30.0	36.7	16.7	70.0	7.6
지방도시 청년인구 감소	23.3	36.7	30.0	10.0	0.0	45.3	6.9
도심 집중, 원도심 공동화	6.7	10.0	13.3	43.3	26.7	74.7	8.5
기반시설 노후화, 무질서화	10.0	3.3	26.7	33.3	26.7	72.7	8.9
지방 빈집 증가	3.3	16.7	30.0	30.0	20.0	69.3	8.1
도시-비도시 주거·교통 격차	6.7	50.0	30.0	13.3	0.0	50.0	6.0
경제 소외지역 CPTED시설 부족	0.0	10.0	26.7	33.3	30.0	76.7	7.2
타인 무관심, 공동체성 악화	10.0	30.0	36.7	20.0	3.3	55.3	7.3
비대면 활동 증가	13.3	36.7	26.7	20.0	3.3	52.7	7.8
야간 유동인구 감소	13.3	33.3	33.3	13.3	6.7	53.3	8.0
스마트 도시관리	0.0	0.0	13.3	50.0	36.7	84.7	4.9
종합	7.8	20.8	25.6	27.2	18.6	65.6	8.8

출처 : 연구진 작성

#### □ 주요 문항별 의견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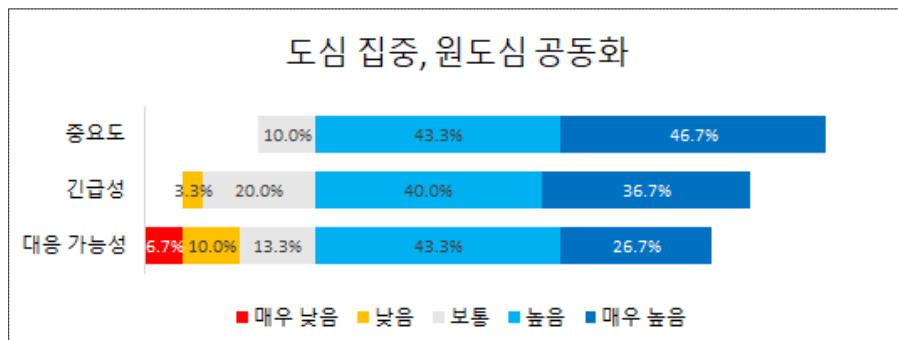
주요 사회변화 현안별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전략 개선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을 정리하였다. 모든 사회현안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12가지 사회변화 현안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 개선의 중요도는 59.4%pt의 긍정 응답(높음과

매우 높음)을 나타났으며, 긴급성은 52.8%pt의 긍정 응답(높음과 매우 높음), 대응 가능성은 45.8%pt의 긍정 응답(높음과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 의견조사에 응답한 관련 전문가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12가지 사회변화 현안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 개선이 매우 중요하며 긴급하지만 대응 가능성은 중요도와 긴급성 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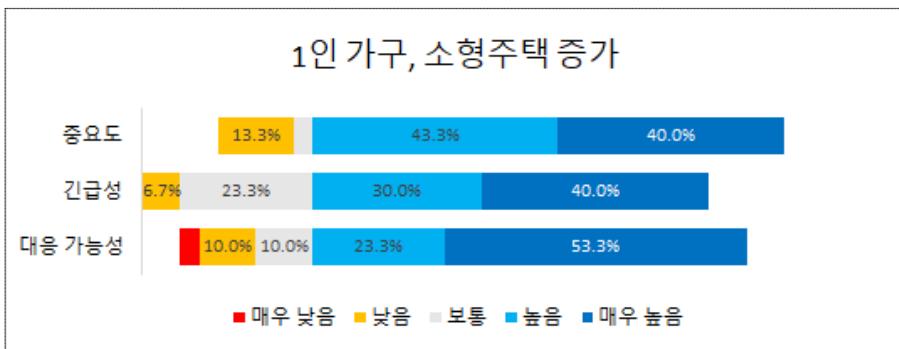
[그림 2-7] 사회변화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종합  
출처: 연구진 작성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 개선의 중요도에 대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것(90.0%pt, 높음과 매우 높음)으로 나타난 “도심 집중으로 원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는 긴급성, 대응 가능성에서도 긍정 응답(긴급성 76.7%pt, 대응 가능성 70.0%pt, 높음과 매우 높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도심 집중,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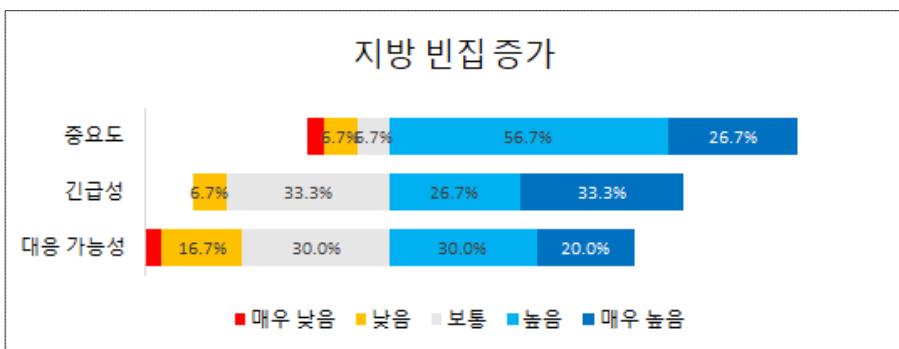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 개선의 중요도에 대한 긍정 응답이 2순위로 높은 것(83.3%pt, 높음과 매우 높음)으로 나타난 “1·2인 가구, 소형 주택 밀집지역 증가”는 긴급성, 대응 가능성에서도 긍정 응답(긴급성 70.0%pt, 대응 가능성 76.7%pt, 높음과 매우 높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1·2인 가구, 소형주택 증가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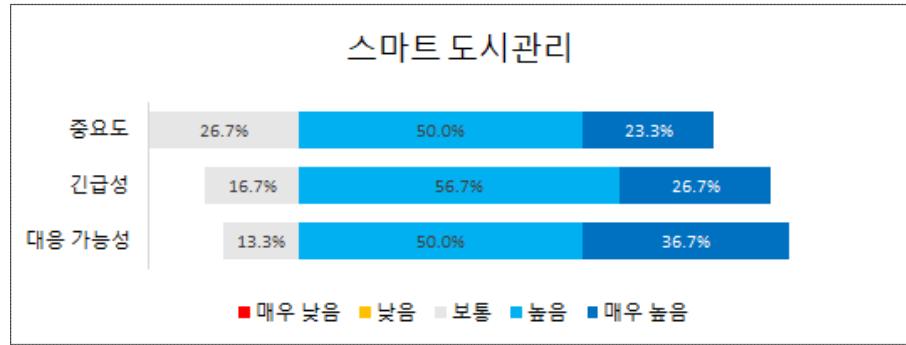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 개선의 중요도에 대한 긍정 응답이 3순위로 높은 것(83.3%pt, 높음과 매우 높음)으로 나타난 “지방의 빈집 증가”는 긴급성, 대응 가능성에서도 긍정 응답(긴급성 60.0%pt, 대응 가능성 50.0%pt, 높음과 매우 높음)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지방 빈집 증가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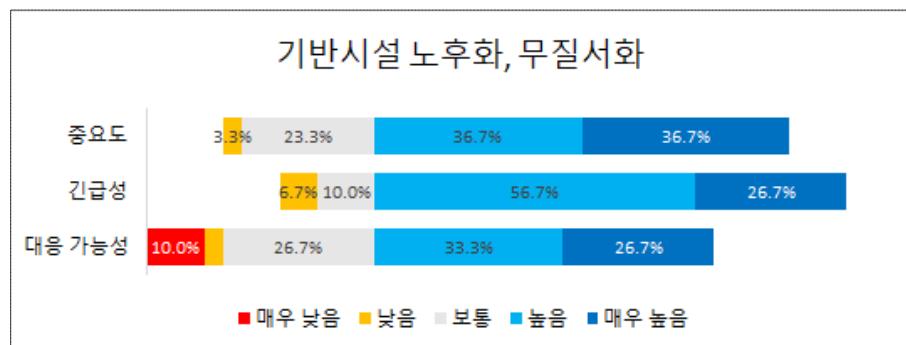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 개선의 긴급성과 대응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것(긴급성 83.3%pt, 대응 가능성 86.7%, 높음과 매우 높음)으로 나타난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IoT 기반 도시 관리”는 중요도에서도 긍정 응답(73.3%pt, 높음과 매우 높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해당 사회변화 현안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에 대해 “보통” 응답을 제외한 “낮음”, “매우 낮음” 응답율이 0.0%pt로 나타났다.



[그림 2-11] 스마트 도시관리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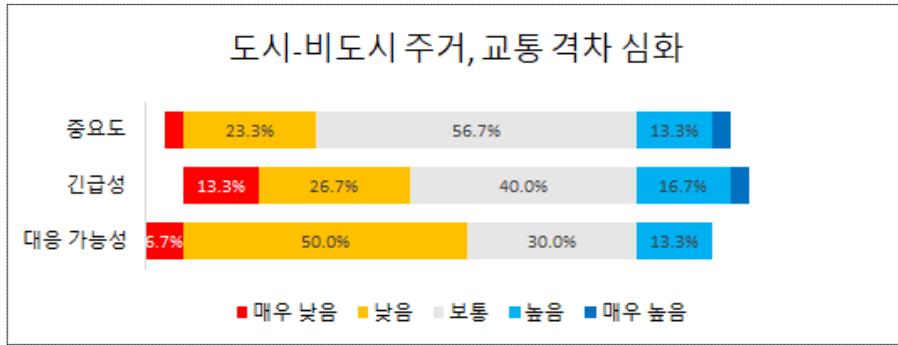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 개선의 긴급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2순위로 높은 것(83.3%pt, 높음과 매우 높음)으로 나타난 “도시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원도심 무질서도 증가”는 중요도, 대응 가능성에서도 긍정 응답(중요도 73.3%pt, 대응 가능성 60.0%pt, 높음과 매우 높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기반시설 노후화, 무질서화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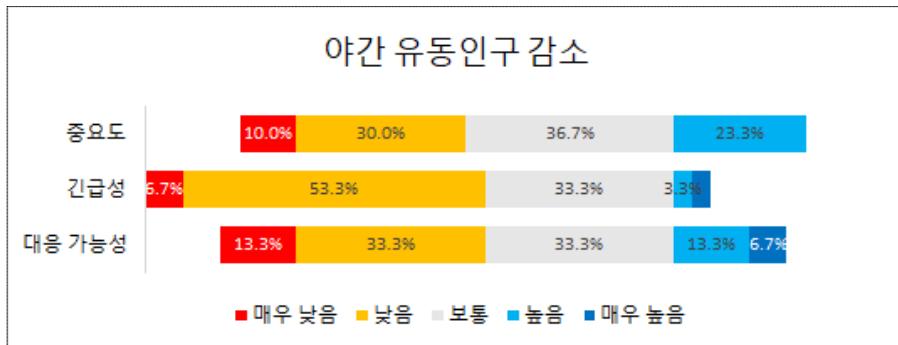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 개선의 중요도에 대한 부정 응답이 가장 높은 것(83.3%pt, 보통+낮음+매우 낮음)으로 나타난 “도시-비도시 간 주거환경, 교통편의 시설 격차 심화”는 긴급성, 대응 가능성에서도 부정 응답(긴급성 80.0%pt, 대응 가능성 86.7%pt, 보통+낮음+매우 낮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견조사에 응답한 관련 전문가들의 “도시-비도시 간 주거환경, 교통편의 시설 격차 심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높음 +매우 높음)은 각 16.7%pt, 20.0%pt, 13.3%p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도시-비도시 주거, 교통 격차 심화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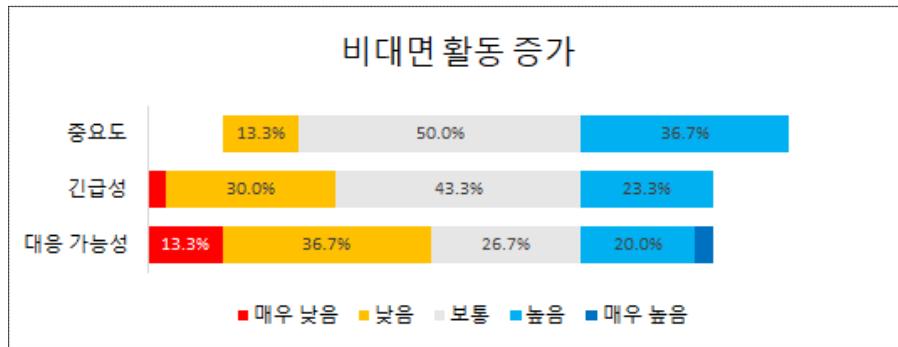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 개선의 긴급성에 대한 부정 응답이 가장 높은 것(93.3%pt, 보통+낮음+매우 낮음)으로 나타난 “야간 유동인구 감소”는 중요도, 대응 가능성에서도 부정 응답(중요도 76.7%pt, 대응 가능성 80.0%pt, 보통+낮음+매우 낮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견조사에 응답한 관련 전문가들의 “야간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높음+매우 높음)은 각 23.3%pt, 6.7%pt, 20.0%p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야간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출처: 연구진 작성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의 중요도와 긴급성에 대한 부정 응답이 각 3순위로 높은 것(중요도 63.3%pt, 긴급성 76.7%pt, 보통+낮음+매우 낮음)으로 나타난 “택배 활용 등 비대면 활동 증가”는 대응 가능성에서도 부정 응답(76.7%pt, 보통+낮음+매우 낮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견조사에 응답한 관련 전문가들의 “택배 활용 등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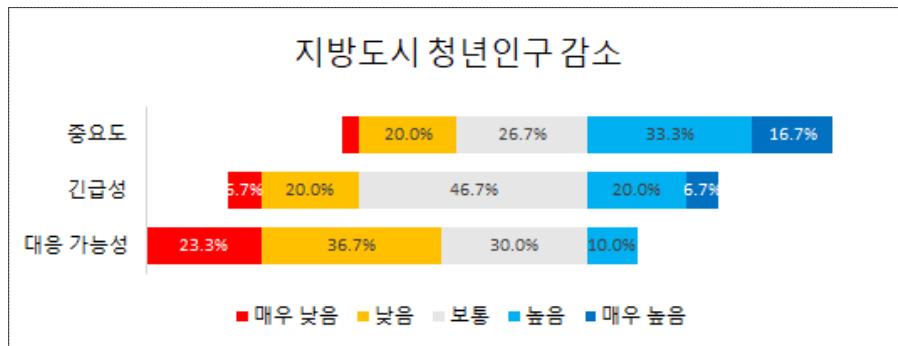
긴급성, 대응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높음+매우 높음)은 각 36.7%pt, 23.3%pt, 23.3%p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출처: 연구진 작성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의 대응 가능성에 대한 부정 응답이 가장 높은 것(90.0%pt, 보통+낮음+매우 낮음)으로 나타난 “지방도시 청년 인구 감소”는 중요도, 긴급성에서도 부정 응답(중요도 50.0%pt, 긴급성 73.3%pt, 보통+낮음+매우 낮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견조사에 응답한 관련 전문가들의 “지방 도시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의 긴급성, 대응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높음+매우 높음)은 각 26.7%pt, 10.0%p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6] 지방도시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출처: 연구진 작성

###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종합

전문가들은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에서 중요한 사회변화 현안으로 "도심 집중으로 인한 원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 "1·2인 가구와 소형 주택 밀집지역 증가", "지방의 빈집 증가"를 지목하였으며, 이 중 "도심 집중으로 인한 원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가 긴급성과 중요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긴급성이 높은 현안으로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도시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원도심 무질서도 증가", "도심 집중으로 인한 원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기술적, 물리적 도시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현안으로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1·2인 가구와 소형 주택 밀집지역 증가", "도심 집중으로 인한 원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가 포함되었다. 반면, "도시-비도시 간 주거 및 교통 격차 심화", "야간 유동인구 감소", "비대면 활동 증가" 등은 중요도와 긴급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며, "지방도시 청년인구 감소" 등과 같은 현안은 대응 가능성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전문가 의견은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이 도심 공동화, 스마트 도시 관리, 소형 주택 밀집 등 현안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외의 사회변화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12] 유형별 긍정·부정 응답에 따른 CPTED 사업 개선 고려사항 (단위: %pt)

구분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비고
긍정 응답 (높음+ 매우 높음 응답)	도심 집중, 원도심 공동화	90.0	스마트 도시관리	83.3
	1인 가구, 소형주택 증가	83.3	기반시설 무질서화	노후화, 76.7
	지방 빈집 증가	83.3	도심 집중, 원도심 공동화	76.7
부정 응답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응답)	도시-비도시 주거, 교통 격차 심화	83.3	야간 유동인구 감소	93.3
	야간 유동인구 감소	76.7	도시-비도시 주거, 교통 격차 심화	80.0
	비대면 활동 증가	63.3	비대면 활동 증가	76.7
CPTED 개선시 우선적 고려				
90.0 개선시 중장기적 고려				
80.0				

출처: 연구진 작성

### 3.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 도출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성 약화,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의 공동화 및 빈집 증가, 스마트 도시관리 필요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축 부문에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소득 불평등 및 저성장, 사물인터넷과 ICT 기반 수요 맞춤 경제의 확대가 주요 변화 현안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부문에서는 외국인의 증가, 디지털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도시와 지역사회의 불균형과 쇠퇴에 대응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범죄 부문에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증가, 지역 간 생활수준 격차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비대면 생활패턴 강화로 인한 개인주의 심화와 공동체 성 약화, 스마트·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운영관리 체계 증가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사업 추진 방향의 변화를 요구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주요 원칙인 접근통제, 감시강화, 영역성 강화에 더해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속가능성 개념의 추가가 필요하며, 이는 1세대 CPTED에서 3세대 CPTED로의 개념 발전과도 연결된다. 이에 따라 본 절의 소결로서 사회변화에 대응한 주요 현안은 ①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성 약화, ②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와 빈집 증가, ③ 범죄예방시설과 연계된 스마트 도시관리로 제시한다.

#### 1)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의 약화 대응 필요

국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대응해야 할 공통의 사회변화 이슈 중 건축, 도시, 범죄 부문에서 공통사항으로 나타난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는 전문가 대상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대응 중요도와 긴급성 및 대응 가능성에 관한 의견조사에서도 높은 긍정 응답률을 나타냈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소규모 주택(오피스텔, 다 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증가와 지역 내 그러한 소형 주택 조성지역의 집중 현상 역시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를 강조한다. 1인 가구 증가는 또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개인화·비대면 활동 강화의 문화 정착으로 지역 공동 체성 약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대응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 범죄에 취약하며 불안감이 높은 여성 및 고령자 1인 가구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 마련 필요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성 약화는 여성 및 고령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범죄 예방 환경조성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는 폭력 및 성범죄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여성은 저층 주거지에서 더 큰 범죄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증가는 범죄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1인 가구와 소형 주택 증가는 대응의 중요도(83.3%)와 가능성(76.7%)이 높은 현안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성 및 고령자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통제와 감시강화 중심의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공동체성이 약하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1인 가구는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전략 적용의 한계 존재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성 약화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원칙인 접근통제, 감시강화, 영역성 확보, 활동성 강화, 유지관리 개념의 적용에 일부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약화된 지역 공동체성은 자연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활동성 강화와 영역성 확보를 위한 조치와 사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감시강화 조치를 확대하고 접근통제 강화 중심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동시에, 종합적 범죄예방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영역성 확보와 활동성 강화를 위한 특화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집중적인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필요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성 약화에 대응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은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소형주택에 집중된 전략 강화를 필요로 하며, 특히 노후 저층 주거지는 여성 및 고령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두려움을 완화하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접근통제와 감시강화 중심의 예방 전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범죄예방 환경조성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청과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분석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한 환경설계 원칙과 기법을 재정비하여 사회적 변화에 따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의 공동화 및 빈집의 증가

도심 집중과 원도심 공동화, 지역사회의 빈집 증가는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대응의 중요도와 긴급성, 대응 가능성에서 모두 높은 긍정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인구감소와 함께 더욱 양극화되는 수도권과 지방도시, 도시와 비 도시 지역 간의 생활인프라 조성 격차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도시와 지역사회의 인프라 노후화 및 유지관리 미흡은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의 공동화와 빈집의 증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공동화 현상이 심한 지방도시 기성시가지는 전반적인 환경개선과 구체적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 필요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의 시설 노후화와 공동화는 지역사회의 유지관리 비용 증대, 안전 사고 발생 우려를 야기하며 국가·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통한 전반적 환경개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농림부 신활력증진사업 등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전반적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은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며 지역민의 생활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는 바, 범죄 두려움과 범죄예방의 사업 내용이 강조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추진은 구체적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분석과 사업계획 보다는 일괄적이며 대중적인 지역의 조도 개선 및 감시역량 강화 등으로 추진되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 대상의 시설 노후화, 공동화는 보다 구체적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접근통제와 감시강화는 물론이고 기성시가지의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역성 강화와 활동성 증대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 지방 도시의 빈집, 주거·상업 혼재지역 대상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필요

특히 지역사회의 빈집은 접근통제와 감시강화, 영역성 강화의 조치가 조합되어 지역민의 범죄 두려움 감소와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발전하고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기성시가지에서 나타나는 주거·상업의 무분별한 혼재지역 역시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우선 대상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은 지방 도시의 빈집과 주거·상업 혼재지역 대상의 특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법무부와 경찰청의 관련 사업 내용 검토를 통해 빈집과 주거·상업 혼재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 내용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 3)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서의 스마트 도시관리 적용 필요는 앞서 수행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대응 긴급성과 대응 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긍정 응답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범죄예방에 있어 스마트·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실제 유의미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이 확인(이정민·강태임, 2023)되었으며, 범죄 기록의 빅데이터 처리와 범죄 예측을 통한 범죄발생 빈도 감소 가능성에 대한 연구(김원, 2020)도 수행되었다. 스마트 도시관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적용은 본 절에서 도출하는 1인 가구의 증가, 기성시가지 빙집 증가 등의 사회변화 역시 향후 또 다른 사회변화 대응 이슈로 변모할 상황에도 적극 대응하며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효과적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 적용 필요

인구, 경제·사회, 문화의 변화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대응해야 할 주요 현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연계와 대응은 각 현안 대응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미 AI를 활용한 지능형 범죄예방·감시 모듈이 개발되어 기존 CCTV 관제요원의 범죄예방 역량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스마트 기술 적용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개선은 크게 진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근통제와 감시강화 원칙에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범죄예방 환경조성은 향후 영역성과 활동성 강화, 유지관리에도 연계되어 종합적 범죄예방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 □ 다분야 연계 및 사전 예방으로서의 스마트 기술 적용 확대 필요

스마트 기술 적용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은 진정한 의미의 범죄발생 사전 예방 환경조성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신규 개발 공동주택단지는 물론이고 고밀 저층주거지에도 지능형 CPTED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최우철 외, 2023), 스마트 조명시스템의 발전은 이미 범죄예방 수단으로서 유의미함이 확인(이정민·강태임, 2023)되었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스마트 기술 적용 범죄예방 환경조성 방안은 아직까지 범죄예방 환경조성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법무부와 경찰청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의 검토와 내용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 스마트 기술 적용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제3장 주요 현안별 제도 및 사업 현황 분석

1. 분석의 개요
  2. 국내 범죄예방 관련 제도, 정책 및 사업 분석
  3. 소결
- 

## 1. 분석의 개요

###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국내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범죄예방 제도와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범죄예방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범죄예방 제도와 정책, 사업을 면밀히 진단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내 CPTED 관련 법 제·개정 현황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개념은 1990년대 전후로 도입된 이후, 2000년대 초반 관련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범죄예방 관련 법은 2003년도 「주택법」에 안전관리 책임자의 방범교육, 안전교육에 관한 항목이 추가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거나 범죄예방 및 방범에 관한 내용을 사업,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여러 법령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4년, 「건축법」에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 할 수 있도록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서 적용 대상 건축물을 명시하였다. 2015년에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이 정해졌다. CPTED 관련 법령은 「범죄 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제외하면 모두 다른 법령과 연계되어 제·개정되었다.

[표 3-1] 국내 CPTED 관련 법령 현황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연월	관련조항	주요 내용
주택법	2003년 12월	제49조제1항	안전관리책임자의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항목 추가*
주택법 시행규칙	2003년 12월	제28조제1항	안전관리책임자의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항목 추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2004년 07월	제6조제10항	지하식 또는 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는 방범 설비 (모니터 수, 촬영자료 보관기관)에 대한 기준이 추가
택지개발촉진법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07년 01월(제정)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재정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 기준이 포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舊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09월(제정)	제2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방범, 방재 포함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 법	2011년 05월	제9조제13항의2, 제30조의3	재정비촉진사업의 계획 수립 시 사업 시행 기간 동안 범죄 예방대책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07월 2018년 06월	제19조제1항제8호의3	2011년 7월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추가 이후, 2018년 6월 같은 조항에 방범 추가
국토기본법 시행령	2012년 05월	제5조제2항제3호의2	도시 군기본계획에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초중등교육법	2012년 01월	제30조의8	범죄예방을 위한 학생안전 범죄예방 대책 수립 명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2012년 02월(제정)	제6조제3호, 제24조	보행자길 영상정보처리 및 보안등 설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2월(본조신설) 2020년 12월(개정) 2013년 12월(개정)	제28조의2제2호(2012년2월, 본조신설) 제130조제2항(2020년12월, 개정) 제52조제1항제5호(2013년12월, 개정)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업 시행기간동안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 대책 수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년 12월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	도시공원 조성 계획 수립단계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013년 09월	제9조제3호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건축법	2014년 05월	제53조의2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의무 준수
건축법 시행령	2014년 11월(본조신설) 2018년 12월(개정)	제63조의2(2014년 11월, 본조신설) 제63조의6(2018년 12월, 개정)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적용대상 확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2015년 05월(제정)		일정한 용도 및 규모 건축물 설계 범죄예방 건축기준 준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한 특례법	2017년 02월(제정)	제4조제7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5 조제5항, 제30조제1항제5호, 제37조제 3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제2호	빈집정비계획 수립 조건 빈집 정비 및 철거 기준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수립

주: \*[시행 2016. 6. 30.]까지는 관련 항목이 있었으나 이후 삭제

\*\*[시행 2016. 1. 25.]까지는 관련 항목이 있었으나 이후 삭제

출처: 손동필 외. (2022, p.46), 이형복. (2020, p.20)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022년 11월에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관계 기관의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이 훈령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를 중심으로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가 개최되었고 이를 거쳐 2023년 3월 30일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sup>10)</sup>

1차 기본계획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되어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CPTED 사업을 추진함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되었다. ‘통합관리를 통한 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① CPTED 관련 제도개선, ② CPTED 사업 통합관리 기반 구축, ③ 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④ CPTED 인식 제고를 4대 추진 전략으로 수립하였다(법무부, 2023, p.1).

-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수립 현황

국내에서 CPTED에 관한 정책적 연구는 「방범설계를 위한 지침」(국토교통부, 1992)으로 시작되었으나, 환경 범죄학, 공공 정책학 측면의 실질적 연구는 2005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발표로 시작되었다(유광흠 외, 2014. p32).

2005년 이후로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신도시 개발,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이 포함된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및 설계 지침 수립 사례가 증가하였다. 경찰청, 교육부, 국토교통부에서 범죄예방관련 가이드라인 및 설계 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통합 주체가 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제2기 신도시의 지구 단위계획의 범죄예방 상세계획 및 시행지침을 수립하였다.

또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 디자인’을 위해 마을단위 범죄예방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 적용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지역경찰서, 지역주민,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사각지대 최소화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 폭력예방 및 안심디자인’을 위해 여성 공중화장실의 응급시 연락체계와 필요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추진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

10)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에는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 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업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협조요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가 주관하여 각 중앙부처와 경찰청으로 구성되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 관련 사업 추진 및 평가,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조정의 기능을 갖는다.

[표 3-2] 중앙부처 수립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현황

수립연도	수립주체	가이드라인 및 지침	주요내용
1992	국토교통부 (舊 건설교통부)	방범설계를 위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실무자들이 설계에 반영토록 범죄예방 지침을 마련</li> </ul>
2005	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셉테드의 개념 및 원리소개</li> <li>- 미국, 영국, 호주 등 제도 및 적용사례 소개</li> <li>-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건물용도별 적용 방안 소개</li> <li>- 일반적인 지침으로 정리되어 있음</li> <li>- 전국최초로 부천시 3개 시범지역이 범죄예방 시범사업에 선정</li> </ul>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의 환경상세계획 (2장 안전한도시조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문 시행지침 중 '안전도시' 조성 계획에 반영</li> <li>-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지, 공업용지에 대한 개략적인 지침 제시(감시 및 접근통제 중심 전략)</li> </ul>
2013	교육부	학교 셉테드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각지대에 안전시설(CCTV) 계획하고 개방 공간으로 계획</li> <li>- 학생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프로그램</li> <li>- 외벽 도색 및 인공감벽, 샌드백, 이벤트 무대 등 설치를 통한 학교 분위기 개선</li> </ul>
2013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토, 영역성 확보, 접근 통제, 활동성 확보, 조경, 조명 가이드라인 제시</li> <li>- 공동주택 단지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주차장, 조경, 승강기 계단, 문 창호, 설비 세부기준 제시</li> <li>-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와 규정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8월 폐지</li> </ul>
2005 2013 2022	경찰청,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2기 신도시 자체	제2기 신도시(판교, 동탄, 광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 동탄 신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013) 1장제13,15,18,20조, 3장 제3조: 단지 내 생활도로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방범설계방안 제시</li> <li>- 판교신도시 범죄예방 시행지침 1장 제4조, 광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장 제42조: 경찰청의 '범죄 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2005)'을 바탕으로 건축물, 조경, 조명 등에 대한 범죄예방계획 제시</li> </ul>

출처: 이은혜 외(2008, p.129), 손동필 외(2022, pp.48~49)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013년도부터 건축물, 도시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 단위의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지침 수립이 증가하였다. 2013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지자체 특성에 적합한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이 수립되었다. 현재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광역시도 단위에서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이 수립되었다.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는 공공디자인 계획의 일부로서 범죄예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CPTED 관련 가이드라인·지침 내용이 매우 상이하며, 적용 대상과 범위 역시 작게는 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부터 넓게는 해당 지역 전체를 CPTED 적용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CPTED 5대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디자인 방안, 설계 시 고려사항, 체크리스트,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3-3] 지자체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현황

수립연도	수립주체	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	주요내용
2013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셉테드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안전과 안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행 및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적용</li> <li>-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안전지도(범죄 발생공간과 범죄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공간 표시) 작성</li> </ul>
201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에서 도시까지 넓은 범위에서의 적용 대상</li> <li>- 유해환경요소 및 유해/ 일반구역 구분</li> <li>- 가이드라인 점수화 및 체크리스트</li> </ul>
201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li> <li>- 설계지침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li> <li>- 그림 및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상세 설명 부재</li> </ul>
201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포함</li> <li>- 넓은 범위의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 전체범죄 예방 마스터 플랜 수립</li> <li>- 각 영역별로 특화된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li> </ul>
201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및 건축물 영역을 구분하여 디자인 방법을 제안</li> <li>- 국토부 고시사항과 경찰청 지침을 참고한 기초적 개념과 디자인 방향 제시</li> </ul>
202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로 구분하여 공통사항 가이드라인과 각각의 특수사항 가이드라인으로 제시</li> <li>- 주거지역의 경우, 세부공간으로 구분하여 설계 중점사항 제시</li> </ul>
201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 업무 중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포함</li> <li>- 범죄예방환경설계 원칙 제시하는 수준</li> </ul>
201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기준으로 구성</li> <li>- 각 공간에 대하여 강조되는 셉테드 5대 원리 비중을 제시하고 적용시뮬레이션 이미지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임</li> <li>- 설계 시 중점 검토사항 및 고려사항 제시</li> </ul>
2020	경기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과제를 특화기획, 거버넌스, 셉테드사업, 셉테드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설정</li> <li>- 셉테드 5대원칙에 더해 '명료성 강화'를 포함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간별 설계지침 제안</li> <li>- 체크리스트 부재</li> </ul>
2015	충청남도	충청남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대상 공간별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안</li> <li>- 적용 대상 공간별 체크리스트 제시</li> </ul>
2019	충청북도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셉테드 5원칙을 중심으로 설계기준을 대상 시설별로 분류하여 정리</li> <li>- 체크리스트나 사례제시 등 포함되지 않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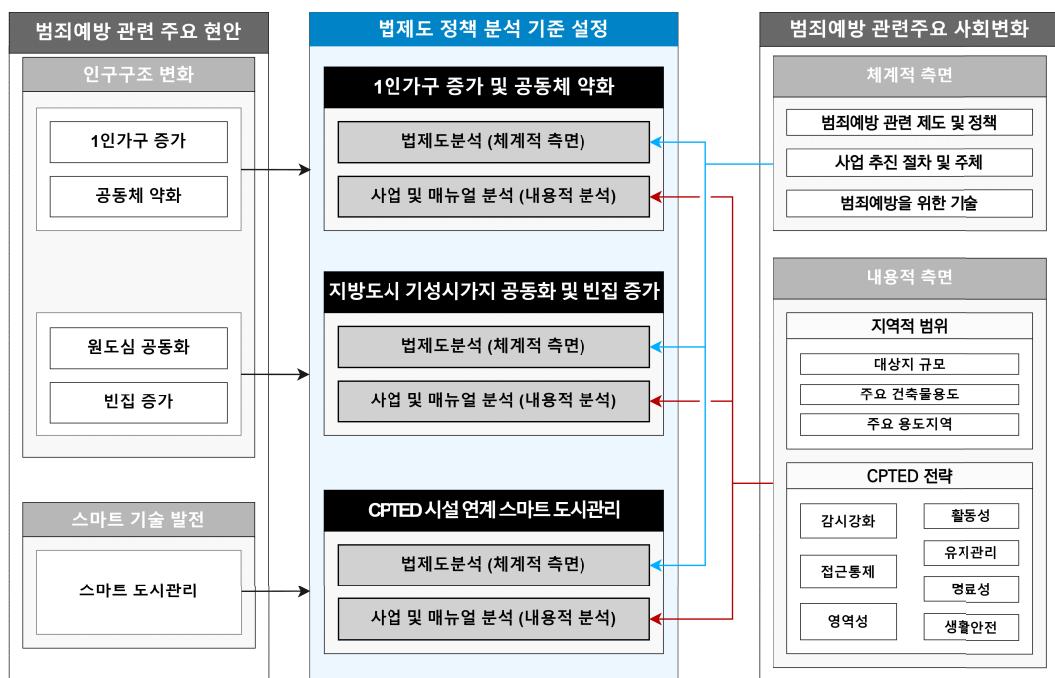
수립연도	수립주체	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	주요내용
2019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예방디자인을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설정</li> <li>- 범죄예방디자인 5대 원칙 영역의 대략적 체크리스트를 통해 디자인 점검 도구로 활용</li> </ul>
2021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예방환경설계를 공공건축 디자인의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음</li> <li>- 공간 유형별 가이드라인, 주민소통 방안 제시</li> <li>- 관련 사업으로 정리하여 우선순위사업을 선정함</li> </ul>
20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예방 도시환경과 시법사업 기본계획으로 구분</li> <li>- 셉테드 5대 원칙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수립</li> <li>-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법 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여 환경개선 방안 및 디자인 사례를 제시함</li> </ul>

출처: 정상필, 김진욱. (2022, pp.82-10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이처럼 국내 범죄예방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간의 편차가 크고 사후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범죄예방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사업 분석을 통해 국내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앞서 도출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을 고려하여 국내 법·제도와 정책·사업을 분석하였다. 또한, 4장에서 다루어질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분석틀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2) 분석의 틀

본 분석은 앞서 도출한 범죄예방·환경조성 관련 주요 사회환경 변화 요인인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 약화,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빈집 증가, CPTED 시설 연계 스마트 도시관리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및 정책, 사업 및 매뉴얼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각 주요 사회환경 변화 요인별 범죄예방환경조성 관련 사업을 ① 체계적 측면과 ②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림 3-1] 분석의 틀

출처: 연구진 작성

### □ (체계적 측면)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에 관한 국내 법, 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CPTED의 학문적,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예방 관련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수립되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여러 사업이 추진되었다.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법·제도에 범죄예방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법·제도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범죄예방 관련 조항이나 내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법·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여 범죄 관련 조항과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한 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범죄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오래전부터 강조 되어온 만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초기에는 CPTED 전문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기준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CPTED 관련 내용을 통합하는 새로운 흐름이 생긴 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범죄예방환경개선 관련 훈령과 기본계획을 살펴봄으로써 추진체계, 정책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한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서 스마트 도시관리는 앞서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스마트 도시관리 기술과 범죄 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효과적인 연계 방향 제시를 위해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 현황 및 개·제정 흐름을 검토하였다. 다음은 관련 국가 종합계획과 지자체에서 수립된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의 현황 및 흐름을 범죄 및 안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스마트 도시관리 연계 사업에서의 CPTED 연계 현황을 검토하였다.

[표 3-4] 국내 법·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의 틀

구분	분석 대상	분석 요소
	국내 CPTED 관련 법 제·개정 현황	법령, 시행규칙, 고시 등 제·개정 연월, 관련조항, 주요 내용
CPTED 관련	국내 CPTED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별 CPTED 전문 조례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통합 조례 조례 제정 기초단체 수, 적용 대상
	기본계획 수립 및 훈령 현황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회 규정 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CPTED 관련 협의체 구성 및 방법 CPTED 정책 방향 및 전략 현황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법 제도	법령, 지자체 조례, 국가 종합계획 및 지자체 기본계획, 관련 가이드라인 등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정책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연계 사업 현황 CPTED 연계 현황

출처 : 연구진 작성

## □ (내용적 측면)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에 관한 국내 범죄예방 관련 사업 및 매뉴얼 분석

국내 CPTED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사업도 진행됐다. 국내에서 시행된 CPTED 사업은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였다.<sup>11)</sup> 두 기관은 범죄예방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로서 국내 최초로 CPTED 관련 제도 및 정책 도입을 주관하였다. 법무부의 경우, 실질적 물리적 환경 계획보다는 CPTED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연구, 그리고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주로 CPTED 시행에 앞서 성과지표 개발, 범죄예방 효과, 범죄영향 요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수행된 CPTED 사업은 범죄예방 목적의 독립적인 사업이 추진되거나보다는 주로 다른 부처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sup>12)</sup>은 사업 구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중점사업과 CPTED 연계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sup>13)</sup> 그러나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간의 편차가 크고 사후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한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본 절에서는 시행된 주요 CPTED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은 크게 사업과 매뉴얼의 내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업 내용에 대한 분석은 주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시행한 기관인 경찰청, 법무부 주관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 특성, 적용된 CPTED 전략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21~2022년에 경찰청에서 수행한 CPTED 관련 사업 대상지 49건, 2021~2023년에 법무부에서 수행된 CPTED 관련 사업 대상지 23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sup>14)</sup> CPTED 관련 매뉴얼의 세부 내용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발표된 매뉴얼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중앙부처 10개, 지자체 16개를 살펴보았다.<sup>15)</sup>

분석의 범위는 크게 ① 공간적 범위, ②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먼저, 지역

11)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와 기타 공간기관(공기업, 대학, 연구원 등)에서 수행된 CPTED 관련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법무부 26건, 경찰청 16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12)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인정사업, 뉴빌리지(신규)로 사업 구분

13) 본 사업들의 경우,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과 경찰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죄예방 컨설팅'과 연계 가능하다(국토교통부, 2024)

14) 국내에서 시행된 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은 CPTED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마련된 시점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수백 건이 시행되었지만, 각각의 사례는 통합적으로 수집되지 않아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72곳 지자체에서 수행된 사례만을 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5) 지자체 분석 대상은 광역시·도 범위로 설정하였다.

적 범위는 대상지의 규모, 대상지 주요 용도지역, 주요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사업에 적용된 CPTED 전략, 그리고 각 전략이 적용되는 공간범위를 설정하였다. CPTED 전략을 ① 감시강화, ② 접근통제, ③ 영역성, ④ 활동성 강화, ⑤ 유지관리, ⑥ 명료성, ⑦ 생활안전 총 7가지 전략으로 설정하였고, 공간범위는 CPTED 전략이 적용되는 공간의 스케일에 따라 건축물(점), 가로(선), 블록(면)으로 설정하였다.

본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각각의 건축물의 주요 용도, 대상지 내 포함된 주요시설 등의 지역적 특성을 분류하였다. 두 번째로 사업과 매뉴얼의 내용을 7가지 CPTED 전략으로 분류하고 적용되는 3가지 공간 범위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로 CPTED 사업이 이루어진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과 적용된 CPTED 전략을 각각 분석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용된 CPTED 전략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매뉴얼에서 제시된 CPTED 전략과 적용된 공간범위를 분석하고 공간범위에 따른 CPTED 전략에 관한 경향을 분석하였다.

###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에 대한 국내 범죄예방 관련 사업 및 매뉴얼 분석

#### CPTED 사업 대상 지역의 특성 분류

##### 지역적 범위

- 대상지 규모
- 대상지 주요 용도지역
- 주요 건축물 용도

##### 내용적 범위

- 적용 CPTED 전략
- 전략 적용 공간 범위

주요 공간 3가지 : 건축물(점), 가로(선), 블록(면)

주요 전략 7가지 : 감시강화,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 강화, 유지관리, 명료성, 생활안전

#### CPTED 사업 및 매뉴얼 분석

- 사업 분석 : 경찰청('21~'22년도 사업 대상지 49곳), 법무부('21~'23년도 사업 대상지 23곳) 사업 분석
- 매뉴얼 분석 : 중앙부처 10개, 지자체 16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분석

#### 사업 지역별, CPTED 전략별 경향 비교 분석

[그림 3-2] 사업 및 매뉴얼 분석 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 2. 국내 범죄예방 관련 제도, 정책 및 사업 분석

### 1)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 약화 관련 제도 및 사업에서의 CPTED

#### □ 제도 및 정책

##### • 1인 가구 및 공동체성 관련 법제도

1인 가구 대상 범죄예방 관련 법령은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았다. 국내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부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3). 국내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는 1인가구는 전체 가구 41.0%로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통계청, 2023).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1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100세대 미만) 및 오피스텔은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세대 창호재는 별표 1의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2. 세대 출입문은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를 권장한다.
3. 건축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4. 건축물의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고,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 등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측면이나 뒤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
6. 전기 · 가스 · 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외부에서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9. 건축물의 출입구,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를 권장한다.
10.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 설치를 권장한다.
11. 세대 창문에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12.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적용을 권장한다.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적용되는 범죄예방 관련 내용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3조를 통해서 단독주택(다가

구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제11조를 통해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접근통제, 감시강화, 생활안전 관련 건축기준을 내포하고 있다. 접근통제 관련하여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창호 및 출입문 설치 기준, 외벽을 통한 침입 방어 계획, 건축물 내부 침입 방지를 위한 검침 기기 외부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감시강화 관련하여 자연적 감시강화를 위한 담장 및 계단실 계획,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명, 반사경 설치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생활안전을 고려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하도록 개폐 가능 구조의 창문 방법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1인 가구 및 공동체성 관련 조례

이번에는 각 지자체별 1인가구 지원 조례에 포함된 범죄예방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각 지역별로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지원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다.<sup>16)</sup>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는 1인가구 지원 조례에서 CPTED 관련 조항을 가장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대전, 경기도 등 일부 광역시와 도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PTED 관련 조항이 다루어지지 않거나 1인가구 관련 조례 및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는 특히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관련 하위 조례를 마련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안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광역시 차원에서 살펴보면 부산, 인천, 대전광역시의 조례에서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세부 조항을 통해 CPTED 관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1인가구 관련 조항이 있지만, CPTED 조항이 아직 다루어지지 않거나 1인가구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대구, 광주, 울산). 다만, 대구와 울산의 일부 각 자치구에서 CPTED 관련 지원사업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단위에서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생활안전물품 지원 등의 조항을 통해 CPTED 기반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생활안전물품 제공 등 구체적인 안전 지원사업을 통해 1인가구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경북, 강원, 제주는 여전히 1인가구 지원을 위한 CPTED 조항이 부재하거나 관련 조례가 미비한 상태이다.

---

16) 도, 특별시, 광역시 범위에서 살펴봄

[표 3-5] 1인 가구 대상 조례 내 CPTED 내용 정리

지자체	개정 연월	조례명	주요 내용
특별시 서울	24.05.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9.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광역시 부산	23.02.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대구	-	-	-
인천	22.02.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7. 범죄·폭력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광주	24.08.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
대전	24.03.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울산	-	-	-
도 경기	23.08.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충북	24.05.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충남	22.12.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2.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전북	-	-	-
전남	20.05.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8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2.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경북	-	-	-
경남	19.12.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2.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강원	-	-	-
제주	-	-	-

출처: 각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관련 사업 및 매뉴얼 분석

- 1인 가구 및 공동체성 관련 주요 CPTED 사업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CPTED 관련 사업은 대체로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하고 있었으며,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주거환경 장치, 안전물품의 제공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1인 가구 관련 범죄예방 사업은 자체 조례에 기반하여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으로서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1인 가구 대상 CPTED 관련 사업

지자체	관련 사업(일자)	주요 내용
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신청(21.05.)	-여성 1인 가구 및 1인 점포 안심홈세트 및 안심점포 무선 비상벨 지원
광역시 부산	부산광역시 청년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 (23.10.)	-청년층 범죄예방 주거환경 마련 사업(스마트 초인종, 홈 CCTV, 잠금장치 제공)
	부산광역시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24.06.)	1인가구, 여성 등 범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스토킹·주거침입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24.03.)	-기장군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방범 주거환경 장치 제공(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
대구	대구 서구, 중구, 세이프-홈 안심물품 지원 (22.08.)	-여성 1인, 한부모, 범죄피해가구 등 주거안전 취약 40가구 범죄예방 안전물품 제공
	대구 동구, 안심홈 23종세트 지원사업 (22.08.)	-주거안전취약계층 안심 홈 세트 지원(스마트 홈캠, 휴대용 비상벨, 디지털 도어락)
인천	인천광역시 여성안심드림 사업(24.05.)	-인천광역시 여성 1인가구와 1인 점포에 범죄예방 안심 장비 제공
광주	광주 남구, 1인 가구 안심 홈 4종 세트 지원(23.04.)	-1인 가구(여성, 청년, 중년, 장년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용 CCTV와 문 열림 센서 등 안심 홈 4종 세트를 지원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신청(22.08.)	-유성구 거주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제공
도 경기	경기도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24.05.)	-성범죄, 주거 침입 등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1인 가구 여성에게 창문 잠금장치, 문 열림 센터 등의 안전 용품 지원 사업
	경기도 여주시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24.07.)	-여성 1인가구, 한부모 모자가정, 주거침입,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피해 여성 가구 대상 범죄 안전 용품 지원 사업
	경기도 안양시 여성1인가구 안시패키지 지원 사업(24.06.)	-안양시 거주 여성 1인가구, 저소득한부모(모자)가족 대상 범죄 안전 용품 지원 사업
충북	충북 청주시 여성1인가구 안홈세트 지원사업(24.06.)	-청주시 거주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 안전 용품 지원 사업
충남	충남 천안 청년 1인가구 안심캠 설치 지원사업 (24.06.)	-청년층 대상 1년간 시시티브이(CCTV), 문열림 센서, 비상버튼 설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안심홈세트 지원사업(24.02.)	-순천시 거주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 안전 용품 지원 사업

출처: 각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1인 가구 및 공동체성 관련 사업 적용의 대상지 특성 및 CPTED 전략

첫 번째 현안인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의 약화와 관련하여 국내 범죄예방 관련 사업과 매뉴얼 현황을 살펴보았다. 최근 법무부 및 경찰청에서 시행된 CPTED 관련 사업 대상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다. 총 66개 대상지 중 37개 지역이 주거지역이며, 20개 지역이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지역에서 CPTED 사업이 시행되어 전체 86.36%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주요 지역 용도

	주거	주상혼합	상업	기타
노후주거지	빈도(N)	21	12	0
	비율(%)	56.76%	60.00%	0.00%
비노후주거지	빈도(N)	16	8	7
	비율(%)	43.24%	40.00%	100.00%
전체	빈도(N)	37	20	7
	비율(%)	100.00%	100.00%	100.00%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주거를 포함하는 대상지(주거지역, 주거 상업 혼합지역)내의 주택유형은 대부분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주거 및 주거 상업 혼합지역의 57.89%(33지역)가 노후화된 주거지로 나타났다.<sup>17)</sup> 1인 가구의 상당수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 가구 밀집지역이 주요 사업 대상지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8]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중 주거, 주거 및 상업 혼합지역 내 주요 주택유형

	주거지역		주거 상업 혼합지역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공동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근생	공동주택+근생
빈도(N)	26	4	14	1
비율(%)	57.78%	8.89%	31.11%	2.22%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다음은 주거지역과 주거 상업 혼합지역에서 주요 주택 유형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인 사업 대상지에 적용된 CPTED 전략을 분석한 결과이다(표 3-9). 분석 결과, 두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감시강화 전략이 가장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략은 범죄 예방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본적 요건으로,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감시강화를 위한 구체

17) 주거 및 주거 상업 혼합지역에서 공동주택이 포함된 지역은 5곳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으로 나타남.

적인 기법으로는 조명, CCTV, 비상벨, 안내판과 조명이 결합된 시설물 등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 3-9]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중 주거, 주거 및 상업 혼합지역 내 주요 주택유형별 CPTED 전략

구분		감시강화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	유지관리	명료성	생활안전
총합	주거지역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78	14	50	7	28	54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공동	9	3	8	1	6	6
	주거 상업 혼합지역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근생	63	14	59	2	21	39
		공동주택+근생	2	0	0	0	0	1
사업당 적용 빈도 평균	주거지역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2.98	0.43	1.89	0.22	1.03	2.14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공동	2.25	0.75	2.00	0.25	1.50	1.50
	주거 상업 혼합지역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근생	4.50	1.00	4.21	0.14	1.50	2.79
		공동주택+근생	2.00	0.00	0.00	0.00	1.00	0.00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주거지역과 주거 및 상업 혼합지역 간의 차이점은 감시강화 전략 이후 두 번째로 많이 적용된 CPTED 전략에서 드러났다. 주거지역에서는 명료성 강화와 영역성 강화가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났지만, 주거 및 상업 혼합지역에서는 영역성 강화 전략의 비중이 명료성 강화보다 높았다. 이는 주거와 상업 기능이 혼재된 환경에서 영역성 강화를 통해 경계의 명확성을 높이고 각 공간의 용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역성 강화를 위해 주로 사용된 기법으로는 안내판, 조명, 노면 정비, 로고젝터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물리적 공간 경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각 공간의 목적과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 상업 혼합지역에서는 이처럼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서로 성격이 다른 공간 간의 혼선과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무명 공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CPTED 전략의 주요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명료성 강화 전략에서는 안내판과 로고젝터를 활용하여 주택 유형 및 상업 지역의 특성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기법은 주로 정보 제공을 통한 공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며, 범죄 예방뿐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과 편의를 증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음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 단위에서 분석한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전략 적용 현황이다. 분석 결과, 가장 빈번히 적용된 전략은 접근통제였다. 접근통제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방지하고 주거지의 안전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전략으로, 차폐시설과 가시형 배관덮개 등의 기법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건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외부의 위협을 줄이고 거주자의 안전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표 3-10]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중 주거, 주거 및 상업 혼합지역 내 적용 공간적 범위별 CPTED 전략

구분	감시강화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	유지관리	명료성	생활안전
총합	건축물 단위 (점)	16	26	9	0	1	8
	가로 단위 (선)	145	3	94	3	46	91
	블록 단위 (면)	24	4	28	8	14	23
사업당 적용 빈도 평균	건축물 단위 (점)	0.29	0.46	0.16	0.00	0.02	0.14
	가로 단위 (선)	2.63	0.05	1.79	0.05	0.88	1.68
	블록 단위 (면)	0.43	0.07	0.50	0.14	0.27	0.41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접근통제 다음으로 많이 적용된 전략은 감시강화, 영역성, 명료성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감시강화는 주거지 내 가시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명, 안내판과 결합된 조명, 비상벨 등의 기법이 활용된다. 이 기법들은 잠재적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거주자들에게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영역성 강화 전략은 주거 공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거주자에게 심리적 소유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명료성 강화 전략은 안내판이나 로고젝터를 통해 건물과 주변 시설물의 경계를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 을 줄이고 거주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처럼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에 적용된 CPTED 전략은 접근통제와 감시강화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에 영역성과 명료성 강화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는 1인 가구의 주거 유형에서 외부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거주자 스스로의 안전 인식 을 높이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 CPTED 매뉴얼에서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 약화 관련 CPTED 전략

CPTED 매뉴얼에서는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안전을 위해 감시강화와 접근통제 전략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CPTED 관련 매뉴얼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감시강화는 총 252회 제시되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접근 통제는 156회로 그 뒤를 이었다(표 3-11). 그 외에도 영역성(46회), 활동성(11회), 유지 관리(13회), 명료성(5회), 생활안전(4회) 등의 요소가 순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국내 CPTED 매뉴얼 유형별 건축물 단위에서의 CPTED 전략

		감시강화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	유지관리	명료성	생활안전
총합	CPTED 매뉴얼	252	156	46	11	13	5	4
	공공디자인 통합 매뉴얼	20	9	8	0	0	1	0
각 매뉴얼당 제시 빈도 평균	CPTED 매뉴얼	13.26	8.21	2.42	0.58	0.68	0.26	0.21
	공공디자인 통합 매뉴얼	2.86	1.29	1.14	0.00	0.00	0.14	0.00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감시강화는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대세 주택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주거지 내 가시권을 확보하고 CCTV, 조명, 사각지대 없는 설계 등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입구와 통로에 조명과 안내판을 배치해 경계를 명확히 하고, 주요 출입 동선과 주차장, 필로티 공간, 엘리베이터 홀 등에 CCTV와 조명을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경비실과 감시 시스템을 통해 단지 내 주요 동선을 감시하며, 주변 조경도 자연적 감시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범죄 가능성을 줄이고 거주자의 안전감을 높인다.

접근통제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방지하고 주거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출입구에 CCTV와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경계 구역에 투시형 울타리와 낮은 담장을 설치하여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을 명확히 구분한다. 주차장에는 진입차단시설과 비상벨을 설치하고, 방문자와 거주자 주차장을 구분해 외부 차량의 접근을 제한한다. 또한, 외벽의 가스배관 등 설비는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방범용 덮개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침입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문과 창문에는 보조자물쇠와 방범창을 갖춰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

영역성 및 명료성 강화는 주거 공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거주자에게 심리적 소유감을 부여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공원이나 골목길의 자투리 공간에 조경을 통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구분하고, 주요 진출입부에 바닥포장과 조명을 설치하여 해당 공간이 거주자에게 속한 영역임을 인식하게 한다. 명료성 강화는 안내판이나 로고젝터를 통해 건물과 주변 시설물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구분하고, 야간에도 인식이 용이하도록 조명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사용자 편의를 동시에 높인다.

## 2)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빈집 증가 관련 제도 및 사업

### □ 관련 제도 및 정책

#### •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및 빈집 관련 법제도

두 번째 현안인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의 공동화 및 빈집 증가에 관해서는 법령을 살펴보면 원도심에서의 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사업 수행 시 안전 및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범죄예방 관련 시설 설비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토 및 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의2에 의해서 도종합계획 수립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2를 통해서 도시군기본계획에 방재 및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호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5. 30.>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 ①도시 · 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8. 6. 12., 2024. 2. 6.>

8의3. 방재 ·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

[전문개정 2013. 9. 10.]

두 번째로 기존 도시공간 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동안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5호를 통해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을 사업시행계

획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30조를 통해서 정비구역 내 주변 안전을 위해 순찰강화, 순찰초소 설치 및 관리 등의 사항을 경찰 및 소방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3호의2를 통해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기간동안 범죄예방대책을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30조의3을 통해서 순찰강화, 순찰초소 설치 등을 범죄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① 시장·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 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0. 12. 22.>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세번째로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와 실태조사를 법령으로 규정하였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통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보안등을 우범지역,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행자길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제1항제3호를 통해서는 5년 기간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범죄 및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23. 3. 14.>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3. 14.>

④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안전조치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네 번째로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기준을 규정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도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필요한 사항을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서 ‘제6장 재해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기준’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원칙에 따른 분야별 계획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예방환경설계 5원칙 중 자연적 감시(기계적 장비로 보완), 접근통제, 활동성 강화를 일반원칙으로 규정하여 가로조경, 조명, 자연적 접근통제 규정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빈집 관련 법령에 범죄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구도심 쇠퇴와 함께 빈집의 지속적 증가는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를 높이고,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빈집 관리와 정비 과정에서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범죄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빈집과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알 수 있다. 제4조 제7항과 제43조의2 제1항에서는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해 빈집정비계획

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11조제1항제1호와 제37조제3항에서는 빈집 철거 기준으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빈집정비 사업시행 기간동안 사업시행구역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 등의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빈집 철거,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정비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환경정비를 통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⑦ 관할 시·도경찰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2.>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⑤ 시·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22.>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7. 20.>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사업시행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제37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3조의4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서 같다)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2. 빈집밀집구역으로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아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및 빈집 조례

이번에는 각 지자체별 범죄예방 관련 조례와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포함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각 지역별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지원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다.<sup>18)</sup>

#### - 지자체별 범죄예방 관련 조례 현황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기준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모든 광역시 자치단체에서는 CPTED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CPTED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경기 안산시, 용인시는 CPTED 관련 조례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9)</sup>



[그림 3-3] CPTED 관련 조례 내용

출처: 연구진 작성

지자체 CPTED 조례에서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 사업, 신도시 및 재개발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적용 대상·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CPTED 적용 대

18) 도, 특별시, 광역시 범위에서 살펴봄

19) 안산시와 용인시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에 관한 조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수립되어 있음.

상·범위를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① 건축 또는 공간조성 사업, ② 운영 건축물 또는 공간, ③ 재정 지원(전부, 일부)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④ 신도시, 도심재개발 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을 지자체 CPTED 적용 대상·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CPTED 적용 대상·범위를 공간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농어촌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 사업 이외에 CPTED 적용 대상·범위로 심의대상 사업, 경관사업, 안심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추진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가로시설물 설치를 위한 가로환경개선사업 등을 제시하는 지자체도 확인되었다. 다만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sup>20)</sup>에서 CPTED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 조례 형태로 제정하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CPTED만을 위한 조례는 축소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 - 지자체별 빈집 관련 조례 내 범죄예방 관련 조항

빈집 관련 조례는 여러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로 다뤄질 만큼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례에 범죄예방 관련 조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들은 빈집이 범죄나 안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조례들 가운데서도 가장 구체적인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붕괴·화재 등의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험이 없도록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빈집이 범죄나 탈선 장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점검과 차단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이 직접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주민 안전과 공동관리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조례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과 유사하게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의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점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

20)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2016년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으로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빈집을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건축심의 시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 설계 계획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빈집을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민 안전과 공동체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구체성 면에서는 서울이나 대구에 비해 다소 포괄적인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⑤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불교·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13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불교·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건축심의 내용)** ①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18.>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②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를 요청받은 구청장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대구광역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5조의2(빙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철거가 필요한 빙집에 대하여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빙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제14조(건축심의 내용)**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5.11. >

3. 안전 및 범죄 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제29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5.11. >

1. 관리사무소·경비실 및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부산광역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14조(건축심의)**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2. 17. >

3.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 설계 계획에 관한 사항

**제21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 관련 사업 및 매뉴얼 분석

-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빙집 증가 관련 사업 적용의 대상지 특성 및 CPTED 전략

두 번째 현안인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의 공동화 및 빙집 증가와 관련하여 관련 사업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CPTED 관련 사업 대상지는 전체 77.82%가 원도심인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특히, 도시규모가 클수록 원도시 대상 사업 대상지 비중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기성시가지 공동화 현상은 도시공간(가로 및 블록 단위)에서의 범죄 발생 증가 및 범죄 불안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23)</sup>

[표 3-12]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지역

	수도권	광역시/지방대도시	지방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전체	빈도	13	18	29	66
	비율	19.70%	27.27%	43.94%	100.00%
원도심	빈도	11	15	19	45
	원도심/전체지역(%)	84.62%	83.33%	65.52%	68.18%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1) 농어촌 지역은 제외

22) 원도심 비율은 수도권이 84.62%, 광역시/지방대도시는 83.33%, 지방중소도시는 65.52%으로 나타남.

23) 앞서 1장에서의 범죄 발생 현황 비교분석 결과에서의 야외 및 주차장 범죄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

CPTED 사업이 적용된 원도심의 용도별 분포를 보면, 주거지역(67.57%)과 주거/상업 혼합지역(60.00%)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비원도심 지역에서는 주거지역(32.43%)과 주거/상업 혼합지역(40.0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CPTED 사업은 원도심 내 주거지역과 주거/상업 혼합지역,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상업지역에서의 CPTED 사업은 원도심에 집중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3]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주요 지역 용도

구분	주거	주상복합	상업	기타
원도심	빈도(N)	25	12	7
	비율(%)	67.57%	60.00%	100.00%
비원도심	빈도(N)	12	8	0
	비율(%)	32.43%	40.00%	0.00%
전체	빈도(N)	37	20	7
	비율(%)	100.00%	100.00%	100.00%

출처 : 건축공간연구원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이와 같이 CPTED 사업은 지방도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거지역과 주거/상업 혼합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도시 규모가 클수록 원도심에서의 CPTED 사업 비중이 높아지며, 해당 지역의 범죄예방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에서의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전략은 지역 전반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가로와 블록 단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가로 단위에서의 CPTED 전략을 살펴보면, 감시강화 전략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어서 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유지관리 전략이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중 원도심 내 적용 공간적 범위별 CPTED 전략

구분	감시강화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	유지관리	명료성	생활안전
총합	건축물 단위 (점)	4	14	4	0	0	4
	가로 단위 (선)	125	0	64	3	33	75
	블록 단위 (면)	15	1	10	6	9	10
사업당 적용 빈도 평균	건축물 단위 (점)	0.09	0.32	0.09	0.00	0.00	0.09
	가로 단위 (선)	2.84	0.00	1.45	0.07	0.75	1.70
	블록 단위 (면)	0.34	0.02	0.23	0.14	0.20	0.23

출처 : 건축공간연구원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구체적으로 가로 단위에서 감시강화 전략을 위해, 조명, 바닥표지병 및 벽부등(조명과 명료성을 동시에 강화), CCTV, 반사경, 비상벨 등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요 통행로와 도로 주변에서의 가시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인다. 가로 단위에서 영역성 및 명료성 강화는 바닥표지병 및 벽부등 등을 통해 공간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거나 안내판, 노면 정비, 로고젝터, LED 벽화 등을 통해 특정 영역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해당 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주민들의 공간 소속감을 증진하고, 구역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전략은 직접적인 노면 정비와 벽화, 담장 등의 가로에 면한 물리적 요소 정비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가로공간이 관리가 이루어져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블록 단위에서의 CPTED 전략에서는 가로 단위보다 다양한 전략이 고르게 적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블록 단위에서는 감시강화 전략이 가장 널리 적용되며, 영역성, 명료성 강화 및 유지관리 또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감시강화 전략은 CCTV, 조명 설치 등의 기계적 감시를 주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수목 정비를 통한 자연적 감시 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성 및 명료성 강화는 주로 안내판 설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특정 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구분을 명확히 하여 방문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준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전략은 공원 조성 및 정비, 주차장 정비, 휴식공간 조성, 텃밭 조성, 벤치 설치 등을 포함한 환경 개선 활동 위주로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긍정적인 공간 경험을 가지도록 지원하고, 공간 이용 빈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CPTED 매뉴얼에서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빈집 증가 관련 CPTED 전략

CPTED 매뉴얼에서 제시된 CPTED 전략은 가로 단위와 블록 단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가로 단위에서는 감시강화, 영역성, 명료성이 주요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블록 단위에서는 감시강화, 영역성, 활동성, 유지관리가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로 단위의 감시강화 전략은 특히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자연적 감시와 시야 확보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보행로와 건물 사이에 시각적 장벽을 최소화하고, 협소한 통행로나 골목길에는 조명시설, CCTV, 비상벨을 설치하여 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조명은 낮은 조도의 조명을 여러 곳에 설치해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눈부심을 줄여

[표 3-15] 국내 CPTED 매뉴얼 유형별 가로 및 블록 단위에서의 CPTED 전략

			감시강화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	유지관리	명료성	생활안전
총합	CPTED	가로 단위	116	27	50	10	6	13	7
	매뉴얼	블록 단위	40	18	34	27	15	2	1
	공공디자인	가로 단위	43	4	19	2	4	5	4
	통합 매뉴얼	블록 단위	25	7	17	14	11	6	3
각 매뉴얼당 제시 빈도 평균	CPTED	가로 단위	6.11	1.42	2.63	0.53	0.32	0.68	0.05
	매뉴얼	블록 단위	2.11	0.95	1.79	1.42	0.79	0.11	0.37
	공공디자인	가로 단위	6.14	0.57	2.71	0.29	0.57	0.71	0.57
	통합 매뉴얼	블록 단위	3.57	1.00	2.43	2.00	1.57	0.86	0.43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제시하였다. 교차로나 막다른 골목에는 반사경을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제거하며, 방범 CCTV와 비상벨을 통해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가로 단위에서의 영역성 확보는 공공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동주택의 담장이나 경계는 투시형이나 낮은 담장을 활용해 시야 확보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투시형 펜스나 울타리를 설치하여 경계를 설정하면서도 개방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출입로와 통로에는 명확한 경계선을 마련하고, 주택마다 분명히 보이는 주소 표지를 설치해 방문자와 주민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을 입구에는 지역의 영역성을 나타내는 안내판이나 상징물 설치를 통해 외부인에게 경계를 인식시키고, 주민에게 소속감과 안전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명료성 강화 전략 또한 가로 단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입구, 통로, 표지판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잡한 골목길의 전봇대나 담장, 출입문 주변에는 명료한 안내표지판이나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길찾기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방범 CCTV나 비상벨 주변에는 충분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해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블록 단위에서는 가로 단위와 달리 더 넓은 구역에서의 감시강화가 요구되며, 주거지와 공공 공간의 상호 감시를 촉진하고 범죄 취약 지점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주차장과 같은 공공 공간에는 CCTV와 함께 볼록거울을 설치하여 감시 범위를 확장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하였다.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휴식 및 놀이 공간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주요 출입구 근처에 배치하여 보호자가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빈집이나 방치된 공간은 휴게 공간이나 감시 초소로 활용하여 잠재적 범죄 기회를 차단하며, 공원과 같은 공공 장소는 순환형 구조로 설계해 자연스럽게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블록 단위에서의 영역성 확보는 주민의 소유감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공공과 사적 영역을 더욱 확실히 구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예를 들어, 주택과 상가 간에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상업지에서 주거지로 진입하는 공간에는 바닥 스텁핑이나 안내 표지판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하였다. 편의점이나 마트와 같은 편의시설에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에서 진입하는 입구는 바닥 패턴이나 상징물, 조경, 조명을 활용하여 경계감을 조성하였다.

활동성 전략은 블록 단위에서 커뮤니티 활성화와 자연적 감시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단지 내 휴게 및 운동 공간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여 이웃 간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어린이 놀이터,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은 접근성이 높은 곳에 배치하여 주민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공간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빈집이나 유휴 공간은 주민 휴게 공간이나 감시초소로 정비하여 잠재적 범죄 위험을 줄이고, 나대지나 공터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 텃밭이나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전략은 블록 단위에서 시설과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주민의 안전감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로 제시되었다. 단지 내 조경과 수목은 주기적인 가지치기와 관리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방범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이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 항상 작동 가능하도록 하였다. 쓰레기 보관 시설은 위생적으로 관리되며,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사인과 보안등을 설치해 야간에도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건물 외벽에 부착된 벽보나 광고물은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낙서나 쓰레기 등을 방지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공공 청소함이나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주민이 직접 관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주인의식을 높이고 공용 공간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제도 및 사업

#### □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제도 및 정책

-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법령

국내 스마트도시의 법적 체계는 세계 최초로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유비쿼터스도시법)」이 제정되며 시작되었다. 유비쿼터스도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제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이후, 기존 법률을 2017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로 개편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도시까지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였다.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에는 스마트도시서비스 12개를 정의하며, ‘방범·방재’는 그 중 하나에 속한다.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행정
2. 교통
3. 보건 · 의료 · 복지
4. 환경 · 에너지 · 수자원
5. 방범 · 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 · 관광 · 스포츠
9. 물류
10. 근로 · 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제목개정 2017. 9. 19.]

-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지자체 조례

2024년 7월 11일 기준, 총 80개의 지자체(시군구 포함)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수립하였다. 다만, 지자체별 스마트도시 조례에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세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기 평택, 그리고 충북 충주에는 별도의 스마트도시 조례 속 범죄 예방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조항에서 범죄예방은 도시환경의 안전을 위한 고려가 필요한 항목 중 하나로, 기상, 화재 안전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었다.

[표 3-16]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 내용 정리

지자체	개정연월	조례명	주요 내용
부산	19.01.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도시'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li> <li>'스마트 안전도시'란 재난·안전과 관련된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li> <li>'범죄안전'이란 범죄행위와 관련된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을 말한다.</li> </ol> <p>*제10조(적용분야 등) ①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의 적용분야는 기상안전, 범죄안전, 보행안전,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p> <p>② 스마트 안전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별적 또는 융합하여 도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라우드 시스템</li> <li>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li> <li>빅데이터 분석</li> <li>인공지능</li> <li>드론</li> <li>기반 플랫폼</li> <li>모바일·웹 기반 시스템</li> <li>유·무선 방송 시스템</li> <li>고정·이동형 화상회의 시스템</li> <li>영상감시시스템</li> <li>각종 센서 시스템</li> <li>그 밖에 활용이 가능한 첨단기술</li> </ol>
경기도 평택	24.02.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p>*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시장은 제3조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0조에 따른 도시정비 구역 내 범죄예방 시설의 설치</p>
충북 충주	23.08.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p>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시장은 제3조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0조에 따른 도시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 시설의 설치</p>
충남	24.04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p>*제14조(기능)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치안 정보서비스</li> </ol>

출처: 각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국가 종합계획 및 지자체 기본계획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목표로 5년마다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9년 제1차 U-City 종합계획(2009-2013) 발표 이후, 2013년 제2차 U-City 종합계획(2014-2018), 2019년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2024년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이 발표되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는 지방 중

소도시에 취약한 도시서비스 보완을 위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후·쇠퇴도시에 스마트풀, 화재감지시스템 등 지역수요에 맞춘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 2024, p.24).

2024년 7월 11일 기준, 총 65개의 자자체에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sup>24)</sup>하였다. 자자체 스마트도시계획에서 범죄(방범)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장 환경 분석의 방범·방재 항목에서 범죄발생 현황을 포함한다. 또한, 정보화 현황분석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현황과 CCTV 현황, 지능형 교통정보 시설물 현황, 로고젝터 현황,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포함한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출을 위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방범·방재 관련 대표 필요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선호를 도출하여, 해당 자자체의 하위 지역별(예. 동 단위) 수요를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부서 인터뷰를 실시하며 정보통신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등에서 범죄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4장 부문별 계획에서 해당 자자체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분야별로 소개한다(아래 그림). 5장 집행관리에서는 각 서비스별 추진 로드맵과 소요 예산, 재원조달 방안, 추진체계를 포함한다.

2.3.4.10. 스마트 안심밸																																																															
[표4-134] 스마트 안심밸																																																															
서비스명	스마트 안심밸																																																														
	별주 방범·방재																																																														
도입 필요성	최근 급증한 1인가구 및 여성, 노인 등 범죄 취약 가구를 노린 범죄에 즉각 대응 솔루션 필요																																																														
서비스 개요	1인가구, 범죄 위험 가구 등을 위한 범죄 예방 내용 시스템으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안심밸을 누르면 경찰이 신고자 위치를 파악해 충동하는 서비스																																																														
서비스 구성	<table border="1"> <tr> <td>서비스 구성</td> <td> <p>스마트 안심밸 시스템은 주거환경 모니터링, 주거환경 감시, 주거환경 통제 기능을 제공합니다.</p> </td> <td>주요 기능</td> <td>온상 통화 버튼: 주거에서 아이고, 스마트 누락버튼, 경찰 범행 통해 경찰상사상황, 도시통합운영센터 통화</td> </tr> </table>	서비스 구성	<p>스마트 안심밸 시스템은 주거환경 모니터링, 주거환경 감시, 주거환경 통제 기능을 제공합니다.</p>	주요 기능	온상 통화 버튼: 주거에서 아이고, 스마트 누락버튼, 경찰 범행 통해 경찰상사상황, 도시통합운영센터 통화																																																										
서비스 구성	<p>스마트 안심밸 시스템은 주거환경 모니터링, 주거환경 감시, 주거환경 통제 기능을 제공합니다.</p>	주요 기능	온상 통화 버튼: 주거에서 아이고, 스마트 누락버튼, 경찰 범행 통해 경찰상사상황, 도시통합운영센터 통화																																																												
도출근거	<table border="1"> <tr> <td>시민 설문조사</td> <td>리昂법(원탁토론회)</td> <td>부서인티뷰, 면담</td> </tr> <tr> <td col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명시의 방범·방재에서 개인데이터 할 문제점은 살피자간 범죄, 주민 지역 방지하고 업무, 동향을 살피는 3종, 소화기 등, 소화기 등 순으로 서비스 선호도가 높게 조사됨</li> </ul> </td> </tr> <tr> <td>기간</td> <td>2024년~2026년</td> <td>추진 유형</td> <td>중기</td> <td>개발 유형</td> <td>신규</td> <td>추진주체 (주관/협조)</td> <td>정보통신과</td> </tr> <tr> <td>사업비</td> <td>60백만원</td> <td>국비</td> <td>-</td> <td>도비</td> <td>-</td> <td>시비</td> <td>60백만원</td> </tr> <tr> <td>구분</td> <td>구성기준</td> <td>수량</td> <td>단기(천원)</td> <td>금액(천원)</td> <td></td> <td></td> <td></td> </tr> <tr> <td>산출내역</td> <td>HW 컨트롤플러스, 안심밸, 경광사리밸, 안내표지판</td> <td>30대</td> <td>20,000</td> <td>60,000</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총계</td> <td></td> <td></td> <td>60,000</td> <td></td> <td></td> <td></td> </tr> <tr> <td>성과지표 (KPI)</td> <td>스마트 안심밸 설치율</td> <td>축정방법 및 실현방안</td> <td>목표(계획)</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당초 설치목표대비 구축수정</td> <td></td> <td>100%(2026)</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시민 설문조사	리昂법(원탁토론회)	부서인티뷰,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명시의 방범·방재에서 개인데이터 할 문제점은 살피자간 범죄, 주민 지역 방지하고 업무, 동향을 살피는 3종, 소화기 등, 소화기 등 순으로 서비스 선호도가 높게 조사됨</li> </ul>			기간	2024년~2026년	추진 유형	중기	개발 유형	신규	추진주체 (주관/협조)	정보통신과	사업비	60백만원	국비	-	도비	-	시비	60백만원	구분	구성기준	수량	단기(천원)	금액(천원)				산출내역	HW 컨트롤플러스, 안심밸, 경광사리밸, 안내표지판	30대	20,000	60,000					총계			60,000				성과지표 (KPI)	스마트 안심밸 설치율	축정방법 및 실현방안	목표(계획)						당초 설치목표대비 구축수정		100%(2026)				
시민 설문조사	리昂법(원탁토론회)	부서인티뷰,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명시의 방범·방재에서 개인데이터 할 문제점은 살피자간 범죄, 주민 지역 방지하고 업무, 동향을 살피는 3종, 소화기 등, 소화기 등 순으로 서비스 선호도가 높게 조사됨</li> </ul>																																																															
기간	2024년~2026년	추진 유형	중기	개발 유형	신규	추진주체 (주관/협조)	정보통신과																																																								
사업비	60백만원	국비	-	도비	-	시비	60백만원																																																								
구분	구성기준	수량	단기(천원)	금액(천원)																																																											
산출내역	HW 컨트롤플러스, 안심밸, 경광사리밸, 안내표지판	30대	20,000	60,000																																																											
	총계			60,000																																																											
성과지표 (KPI)	스마트 안심밸 설치율	축정방법 및 실현방안	목표(계획)																																																												
	당초 설치목표대비 구축수정		100%(2026)																																																												

2.3.4.10.1. 적용사례	
[표4-135] 서비스 적용사례(스마트 안심밸)	
경기 안심밸	경기 안심밸 신고 버튼
	<p>경기 안심밸은 고장이나 이동형으로 구불되어 고장되었을 때 1인 가구나 1인 경찰 내에 버치며 버튼을 즉시 사전에 등록된 위치정보를 경찰서로 전달한다. 이동형은 외출 시 대화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과 휴대폰으로 연결돼 버튼을 누르면 경이 차종으로 휴대폰 위치를 경찰서로 알림</p>
2.3.4.10.2. 설치위치	
[표4-136] 서비스 설치위치(스마트 안심밸)	
설치기준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무주의 구간 설치 검토</li> <li>여성발인 치안점검간 설치 검토</li> <li>지역지도 맵은 지역 설치 검토</li> <li>여성안전방법 설치위치는 주로 이동경로 중심으로 재배치 검토</li> </ul>
기 설치	
설치예정	
<p>설치 예정 지역은 경기도 내 주요 도로와 주거지역에 걸친 네트워크로 표시된다. 주요 설치 예정 지역은 30%로 표기된다.</p>	

2.3.4.10.3.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T 기반 가구내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대응시스템 개발</li> <li>안전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스마트 통합운영 서비스</li> </ul>	
2.3.4.10.4. 향후계획	
2026년 스마트 안심밸 30개소 구축	

[그림 3-4] 광명시 스마트도시계획 방범 관련 스마트도시서비스 소개

출처: 광명시 스마트도시계획. (2022). 광명시. pp.294-295.

24) 스마트도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사업 및 매뉴얼 분석

### •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사업 및 매뉴얼

2019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지자체에 대한 스마트도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스마트도시 정부 지원사업 추진 지자체는 2018년 기준 45개에서 2023년 기준 147개 지자체로 대폭 확대되었다. 교통·환경·에너지·방범·방재·보건·의료·복지 등 60여 개 세부 분야에서 스마트솔루션 400여 개가 구축되었다. 범죄와 관련된 방범 분야의 경우 관제 기반 안전 점검, 드론 안전사고 모니터링, 스마트 화재 감지, 음성인식 영상보안관제, 위험물질 모니터링, 건설현장 안전관리, 스마트 폴과 같은 솔루션이 적용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4). 스마트도시 정책사업<sup>25)</sup>은 다양한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국가시범도시, 지역거점·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 챌린지,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 매뉴얼 내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설계기법을 담고 있지만, 스마트 도시관리와 연계한 별도 범죄예방·환경설계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 3-17] 스마트도시 정책사업별 범죄예방 관련 요소 및 주요내용

사업명	범죄예방 관련 요소	주요 내용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드론 순찰	드론을 활용한 야간 및 등하교길 감시, 노인·여성 등 비상시 긴급호출 출동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 횡단보도	감지 센서 및 지능형 CCTV 활용, 보행자 검지 및 음성 서비스 제공, 운전자 서행운전 및 정지선 준수 유도, 우회전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
	사각지대 스마트 알리미	골목길 내 사각지대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안전 확보, 노란색 교통시설물 설치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사각지대 사고다발 지점 선정
	스마트 폴	기존 분산 설치된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CCTV 등)을 하나의 풀로 통합, 보행 공간 침해 및 복합시설 설치지점 선정
	스마트 방범초소(야간)	지능형 CCTV, 비상벨, LED 조명, 경고방송 스피커, 이상음원감지시스템, 로고젝터 설치 등 방범 기능
	스마트 안심 트리	지능형 CCTV, 비상벨, LED 조명, 경고방송 스피커, 로고젝터 설치 등 방범 기능
	스마트 안전 가로등	- (스마트 노드) 기존 가로등 센서 장착, 무선통신·센서 등 IoT 기능 부여 - (지능형 CCTV) 지능형 방범 CCTV 유관기관 영상 정보 제공, 통합플랫폼 연계 - (방범 기능) 비상벨, 긴급상황 알림 경광등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	혼잡도, 유동인구 분석, 실종아동·노인 찾기 등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5대 연계 서비스	112 긴급 영상 서비스, 112 긴급 출동 서비스, 119 긴급 출동지원 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재난안전 상황 긴급대응 지원 서비스
	추가 연계 서비스	민간보안 및 공공안전 지원서비스, 가스 등 위험시설물 보호 서비스, IoT 기반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내비게이션 주차정보 제공서비스, 교통사고 영상 지원서비스

출처: 스마트시티 종합포털(<https://smartcity.go.kr/>, 검색일: 2024.7.14.)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5) 스마트시티 종합포털(<https://smartcity.go.kr/>)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위와 같은 사업들의 사업계획서를 공유한다.

-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CPTED 전략

세 번째 현안인 ③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에 관한 사업 및 매뉴얼 분석 결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 제시되었다. 단 세 개의 사업 대상지에서만 스마트 기술이 CPTED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활용된 스마트 기술 CPTED는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폴, 스마트 비콘 등을 적용한 감시강화 전략이 적용되었다. 범죄예방 관련 매뉴얼에서는 총 28개의 스마트 기술 연계 CPTED 전략을 제시하였고, 주로 건축물 단위에서 감시강화 전략(지능형 CCTV, 스마트 조명, 스마트 폴 등)으로 제시되었다.

[표 3-18] 적용 공간적 범위별 스마트 기술이 활용된 CPTED 전략

	감시강화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강화	유지관리	명료성강화	생활안전
건축물 단위	12	5	2	0	0	0	0
가로 단위	4	0	4	1	0	1	1
블록 단위	1	0	1	0	0	1	0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건축물 단위에서는 감시강화 전략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다음으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전략 순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가로 단위에서는 감시강화와 영역성 강화 전략이 주로 제시되었으며, 블록 단위에서는 감시강화, 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전략이 각각 1개 제시되었다.

CCTV는 배회자 자동감지, 은폐자 열상감지 등이 가능한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이나 통합 관제센터와 연결된 비상벨을 CCTV 지주에 설치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비상벨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여 비상시 양방향 통신을 통해 범죄예방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비명소리 등의 이상음원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휴대폰의 간편한 조작으로 112자동 신고되고 보호자의 전화번호로 위치가 전송되는 비콘 시스템(beacon system)<sup>26)</sup> 도입을 제시하였다. 조명은 센서를 연동하여 자동으로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IoT 스마트 조명 등이 제시되었다. 접근통제 전략으로 출입통제 시설을 통해서 평시에는 잠겨있고 비상시에만 자동 개폐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부인이 건물 내부로의 침입을 막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귀가 시 위치를 기록하고 경로 이탈 시 통합관제센터로 알림이 가는 귀가 모니터링 서비스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순찰제를 제시되었다.

26) 위치 전송이 자동으로 되는 블루투스 기반 근접 무선통신망 시스템

### 3. 소결

#### 1) 분석 종합

본 장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인 ①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 약화, ②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빈집 증가, ③ CPTED 시설 연계 스마트 도시관리에 대해 국내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체계적 측면(법·제도 및 정책 현황)과 내용적 측면(사업 및 매뉴얼)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슈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 약화

- (체계적 측면)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의 약화 대응을 위한 공동체성 강화 지원 확대 및 제도적 실효성 제고

1인 가구의 증가와 공동체성 약화는 범죄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적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서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제시하였고, 일부 지자체는 「1인 가구 지원 조례」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은 권고사항에 그쳤고 건축물 단위에서의 기준만이 마련되어 있어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 조례는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조례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일부 지자체는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 지원 등 세부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구체화가 시급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되 1인 가구 대상 범죄예방 관련 사업의 효과 표준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1인 가구 지원 조례의 표준화를 통해 지역 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넓은 범위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 커뮤니티 센터 운영, 안전망 구축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사회적 연결고리를 강화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내용적 측면)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성 약화의 대응을 위한 건축물 중심의 전략과 공동체강화 전략 필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서는 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CPTED 전략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에서는 감시강화와 접근통제에 집중되어 있다. 활동성 강화, 공동체 활동 등의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서는 접근통제와 감시강화가 주요 전략으로 적용되었다. 외부인이 주택 내부로 접근이 어렵게 하는 시설물 설치, 공동현관이나 공용 공간으로의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이 그 예이다. 건축물 주변의 시야를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명시설, 반사경, CCTV 등을 설치하는 감시강화 전략도 강조되었다. 그러나 공동체성 약화에 대한 대응은 물리적 환경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활동성 강화전략 또한 필요할 것이다.

#### □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빈집 증가

- (체계적 측면)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빈집 증가 대응 관련 CPTED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연계사업 활성화 필요

지방 도시의 기성시가지 공동화와 빈집 증가는 도시 쇠퇴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 및 도시 개발 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기존 도시공간 정비 사업 시행 기간에도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안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였고,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등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각 지자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범죄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빈집이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거 및 관리 조치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법·제도만으로는 지방 도시의 기성시가지 공동화와 빈집 증가로 인한 범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별로 빈집 정비 조례의 내용과 실효성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령 및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 농어촌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CPTED 전략을 적용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빈집 관리와

범죄예방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안전하고 활력 있는 지방 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내용적 측면)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빈집 증가 대응을 위한 활동성 강화 및 유지관리 전략 강화 필요

지방 도시의 기성시가지에서 공동화 현상과 빈집 증가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CPTED 사업은 원도심 주거지역과 주거/상업 혼합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업 분석에 따르면, 원도심에서 주로 적용된 CPTED 전략은 감시강화, 영역성 및 명료성 강화였다. 특히, 가로 단위에서는 주요 출입구와 교차로에 CCTV, 비상벨, 조명을 설치하여 자연적 감시 및 기계적 감시를 강화하였고, 반사경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영역성 확보를 위해 바닥 표지병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게 하였다. 반면, CPTED 매뉴얼에서는 가로 단위와 블록 단위별 전략을 구분하여 활동성과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매뉴얼에 따르면, 빈집이 많은 블록 단위에서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의 자연적 감시를 유도하고, 공공 및 사적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높이도록 제안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CPTED 사업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매뉴얼에서 강조하는 활동성과 유지관리 측면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는 데 더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성 강화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빈집을 전환하거나 주변 경관을 정비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 CPTED 시설 연계 스마트 도시관리

- (체계적 측면) CPTED 시설 연계 스마트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는 방범·방재의 범주로서 일부 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에서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지 않은 한계로 화재감지시스템, 고보조명 등 범죄예방을 위한 단순 시설물 설치의 사항만이 포함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진행형인 국내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 구축의 한계로 별도의 연동되는 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 매뉴얼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주안점으로 앞서 제시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공

동체성의 약화, 지방 원도심의 공동화와 빈집의 증가 이슈는 향후 개선·특화된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스마트 도시관리가 본격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와 정책은 단순 범죄예방 시설물의 설치 등의 단편적 사항만을 담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법과 조례에서 적극적 범죄예방 환경조성과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의 연동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스마트 도시관리 적용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 방안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수행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내용적 측면) 스마트 도시관리 기술과 연계한 CPTED 시설 반영의 한계

스마트 도시관리 기술과 CPTED 시설의 연계는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법·제도적 한계, 디자인 측면의 문제, 사업 내용의 연계성 부족, 그리고 추진체계의 협력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CPTED 사업에서 활용되는 스마트 기술은 CCTV,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폴 등 감시강화 전략에 국한되어 있으며, 사업 대상지에서도 극소 수만이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도시관리와 CPTED 연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매뉴얼 부재로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범죄예방 효과가 한정적이다.

스마트 기술을 통한 지능형 범죄예방은 중앙 관제 시스템과 범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합적인 치안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에서 스마트 기술과의 연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비용과 기술적 한계,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스마트 기술 적용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CPTED 사업 부서와 스마트 도시 사업 부서 간의 협력이 부족해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스마트 도시 관리와 CPTED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연구개발(R&D)을 통한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고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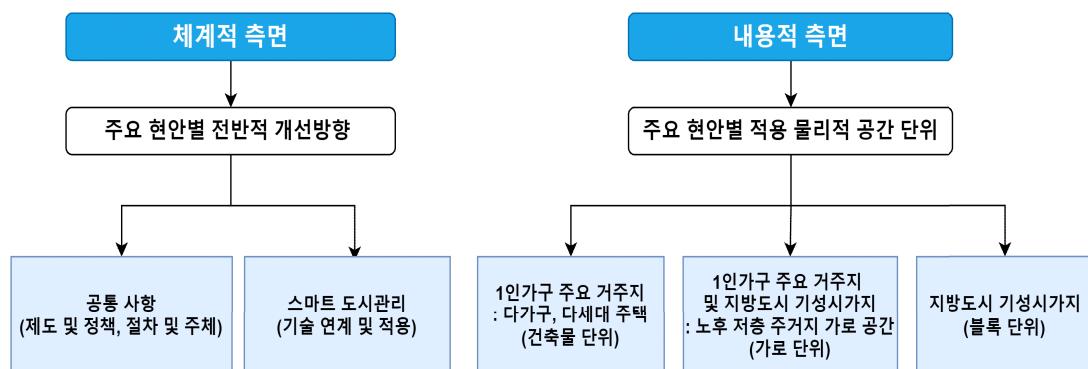
## 2) 시사점

체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각 주요 현안별로 제도 및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사회환경 변화를 범죄예방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분석 결과, 도출되는 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이 각 주요 현안별로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은 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만,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범죄예방 현안에 대한 잠재력과 중요성은 강조되는 것에 비해 관련 제도 및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고 관련 기술의 도입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현안에 대해서는 제도 및 정책, 사업 추진 절차 및 주체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술의 사업 연계 방안까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주요 현안별로 적용 또는 제시되는 CPTED 전략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대안의 적절한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은 물리적인 환경을 다룬다는 점에서 비물리적인 각 주요 사회환경 변화 현안을 물리적 환경으로 치환될 필요가 있다. 먼저,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 약화와 관련해서는 1인 가구 주요 거주지와 주택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이 현안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가로 단위에서의 CPTED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유형인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이며, 이 주택유형으로 주로 형성된 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다.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빙집 증가와 관련해서는 블록과 가로 단위에서의 CPTED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간에서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대상지는 주로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블록 단위에서 결정되며 블록 내에 포함된 가로까지 포함한다.

정리하면 체계적 측면에서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① 전반적인 제도 및 정책적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며, ② 스마트 기술의 도입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적 방향은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주요 현안과 관련된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①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중심의 건축물 단위, ②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좁은 이면도로 중심의 가로 단위, ③ 지방도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블록 단위에서의 CPTED 전략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3-5] 주요 현안별 제도 및 사업 분석 결과 종합  
출처: 연구진 작성

---

# 제4장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 우선순위 분석

- 
1. 분석의 개요
  2. 분석 결과
  3. 소결
- 

### 1. 분석의 개요

#### 1) 배경 및 목적

##### □ 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 중 하나로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 및 매뉴얼이 지속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이에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고 있으며, 해당 전략은 적절한 상황 및 공간에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과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 시 해당 전략을 적용하고 나아가 사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측면에서의 개선 역시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추진체계와 설계전략(내용적 측면)에 대한 관계자 인식 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분석의 목적

본 장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개선 방향은 앞서 2장에서 도출한 주요 현안과 3장에서 분석한 제도 및 사업, 매뉴얼의 내용을 종합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사업 개선방향의 우선순위는 범죄예방 분야 관계자(전문가, 공무원, 경찰, 설계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며, 조사 결과를 통해 정책적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분석의 틀

### □ 분석 자료 수집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방향 우선순위는 범죄예방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관계자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조사기간은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하였다. 범죄예방 관계자 설문조사 대상은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관계자 그룹은 ① 전문가(대학교수, 연구원 등), ② 범죄예방 담당 지자체 공무원, ③ 경찰(CPO), ④ 민간 설계업체 실무자(범죄예방 환경설계 경험자)이며, 전체 표본은 55명이다.

[표 4-1] 응답자 기초 현황

구분	응답 수(명)	비율(%)
전체	55	100.0
성별	남성	40
	여성	15
연령	20대	5
	30대	19
소속	40대	20
	50대	10
경력	60대 이상	1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17
	공무원(지자체 공무원 등)	24
	경찰(CPO 등)	8
	실무자(민간설계업체 담당자 등)	6
	1년 미만	15
	1년 이상 3년 미만	17
	3년 이상 5년 미만	3
	5년 이상 10년 미만	7
	10년 이상 20년 미만	11
	20년 이상	2

출처: 연구진 작성

## □ 분석 방법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방향 우선순위 분석은 2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사업의 체계적 측면(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사업 추진 절차 및 주체, 사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부분)은 Q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사업의 내용적 측면(공간 단위별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설계전략)은 AHP 방식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표 4-2]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분석의 틀 및 분석 방법론

구분	2장 분석 결과(주요 현안 3가지)		
	1인가구 증가 (제도 및 정책)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공동체성 약화 (제도 및 정책)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3장 분석 결과	체계적 측면 (제도 및 정책)	Q 방법론	
	내용적 측면 (매뉴얼 및 사업)		AHP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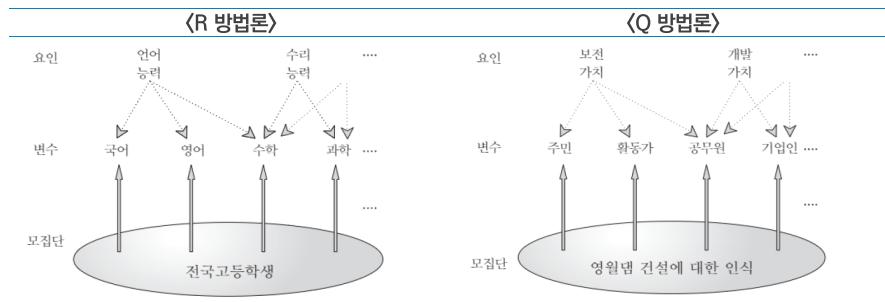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현재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나 절차 등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 즉 사업 추진의 체계적 측면은 개인 또는 집단의 주관성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Q 방법론은 주관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본 장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체계적 측면의 개선방향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한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설계 전략 등 내용적 측면은 이론으로 정립된 기본원리를 근거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된 내용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서 3장에서 도출한 주요 현안 관련 사업의 추진 전략에 대해 AHP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 • Q 방법론을 활용한 사업의 체계적 측면 개선 사항 우선순위 분석

본 장에서는 사회변화를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 사항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 방법론은 19953년 통계학자인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이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기존 경험적 실증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간의 주관성을 탐구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이다(김홍규, 2008, pp.1-2; 한국 주관성연구학회, 2014, pp.40-41). Q 방법론은 R 방법론이라 불리는 요인분석과 기술적 뿐만 아니라 표본을 수집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에서는 R 방법론과 큰 차이가 있다(진상현, 2006, p.124). 기존 R 방법론은 표본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개인차에 의해 나타나는 자극(변수)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반면 Q 방법론은 한 개인이 생각하는 변수의 차이 측 개인 내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으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것(R 방법론)이 아닌 주관적 영역인 자결적 반응(operant response)이 중요한 개념이다(김홍규, 2008, pp.80-81). 이러한 Q 방법론의 특징은 자아(self)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심리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분야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이 중요한 정책학 분야에서도 유용하다(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14, p.35, p.41).



[그림 4-1] R 방법론 및 Q 방법론 개념 예시

출처: 진상현(2006,pp.126-1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 체계의 개선 사항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개념 및 전략은 이론으로서 정립된 사항이며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제도 및 정책, 사업 추진 절차 및 주체, 관련 기술 등을 포함하는 추진체계는 범죄예방 관계자에 따라 집단별, 개인별 생각하는 중요도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성 탐색에 유용한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 사항에 대해 관계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 유형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Q방법론 관련 주요 용어 및 개념은 아래와 같다.

#### Q 방법론 관련 주요 용어 및 개념

- Q 항목(Q item)

응답자가 분류하는 물체(item), 항목으로 자극 항목(stimulus item)이라고도 하며, 카드 위에 진술문이 인쇄된 형태의 Q 항목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Q 항목은 응답자가 손으로 직접 옮겨 분류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며, 응답자 의견이 표현될 수 있도록 Q 항목이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Q 항목은 진술문 이외 사진, 그림, 광고문, 상품 등의 자극물(stimulus)이면 가능하며, 컴퓨터를 통한 드래깅 방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 Q 모집단(Q population) 및 Q 표본(Q sample)

Q 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전체 집합체를 의미하며, Q 표본은 Q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이다.

- Q 분류(Q sorting) 및 Q 소트(Q sort)

Q 표본을 분류하여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을 Q 분류(Q sorting)이라 하며, Q 소트(Q sort)는 Q 분류의 결과로 한 개인의 주관성을 나타내는 모형(model)을 의미한다.

- P 모집단(P population) 및 P 표본(P sample)

P 모집단은 Q 분류를 할 수 있는 응답자의 집합체이며, P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하여 Q 분류에 참여하는 응답자를 P 표본이라 한다.

출처 : 김홍규(2008, p.89.)

Q 방법론의 응답 형태는 연구자가 설정한 주요 진술문을 응답자가 인식하는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일반적 응답 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는 Q 방법론의 주요 특징으로 어떠한 항목에 대해 응답자가 찬성이나 반대, 또는 긍정이나 부정의 응답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각 항목(진술문)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항목을 어떻게 배열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응답 방식은 항목 개수에 따라 분포의 범위와 높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설정한 배치에 따라 응답자는 강제적으로 진술문을 배열할 수밖에 없다(김홍규, 2008, pp.122-12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응답 방식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분야의 집단별 사업의 추진체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아래 [그림 4-2]과 같이 28개의 진술문을 7점 척도로 배열하도록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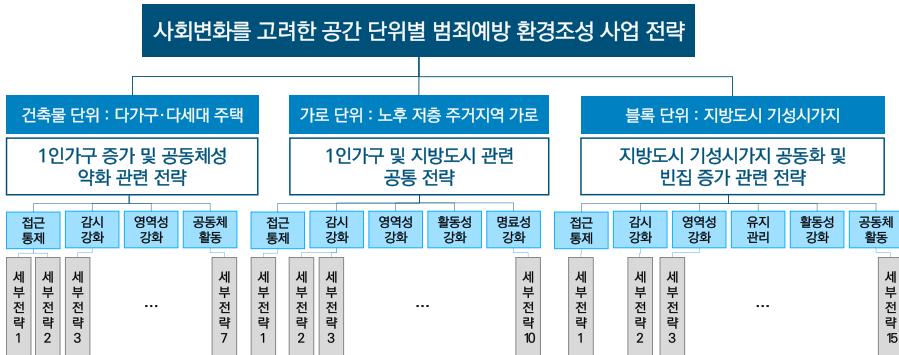
[그림 4-2] Q 방법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응답 형태

출처: 연구진 작성

- AHP 방식을 활용한 사업의 내용적 측면 중요도 분석

사회변화를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내용적 측면(전략)은 AHP 방식을 활용하였다. 앞서 3장에서 구분한 주요 현안별 공간 단위와 각 공간 단위별 세부 전략을 도출하고 관계자 인식 조사를 통해 공간 단위, 주요 원리, 세부 전략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가장 상위 위계는 사회변화 주요 현안 관련 공간 단위로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다가구·다세대 주택(건축물 단위), 인구가 감소하고 쇠퇴하는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지역(블록 단위), 그리고 두 현안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노후 저층 주거지역 가로 공간(가로 단위)이다. 다음 위계는 각 공간 단위별 CPTED 주요 원리이며, 마지막 위계는 3장에서 매뉴얼 및 사업 분석으로 도출한 각 원리별 세부 전략이다. 이를 구조화하면 아래 그림 4-3과 같다.

공간 단위별 세부 전략은 단순한 항목이 아닌 구체적 상황 및 공간에 따른 범죄예방의 전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형태로 기존 AHP 방식으로 각 항목에 대한 위계별



[그림 4-3] 사회변화를 고려한 공간 단위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전략 (내용적 측면)

출처: 연구진 작성

쌍대비교를 할 경우 응답의 난이도, 설문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HP 방식과 동일하게 문항의 위계는 구분하였으나, 아래 그림 4-4와 같이 위계별 쌍대 비교가 아닌 각 위계의 전체 항목에 대한 단순 중요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A2.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공간인 <u>다가구·다세대 주택</u> 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CPTED 요소별 추진 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접근통제	감시강화	영역성 강화	공동체 활동	합계
_____%	_____%	_____%	_____%	=100%

A2-1.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공간인 <u>다가구·다세대 주택</u> 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접근통제 전략 중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별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접근통제 전략	중요도
적정 성능을 갖춘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주택 내부로 접근이 어렵게 하는 <u>개별 세대 침입 제한 전략</u> 이 중요하다. (공동현관 및 개별세대 방범시설, 방범창, 배관덮개, 특수형광물질 등)	_____%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현관이나 공동공간으로 출입하는 것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심택배함 설치, 경첨기 외부 설치, 공동출입구 외부에 설치된 우편함 등)	_____%
합계	=100%

[그림 4-4] 공간 단위별 세부 전략 설문 문항 예시

출처: 연구진 작성

## □ 분석 내용

본 장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의 체계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구분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사업의 체계 및 내용은 앞선 2장과 3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표 4-3과 같이 분류하였다. 우선 주요 현안 중 스마트 도시관리 부분은 다른 2가지 현안과 달리 사업의 도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아직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 측면에서의 개선 사항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체계적 측면은 3가지 주요 현안 공통으

로 적용되는 부분이 다수로 체계적 측면의 개선 사항은 사업의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내용적 측면은 3장의 매뉴얼 및 사업 분석 결과를 통해 주요 현안과 관련된 설계전략의 주요 공간 단위를 3가지로 도출하였다. 스마트 도시관리는 사업 및 매뉴얼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으며, 관련 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미흡하여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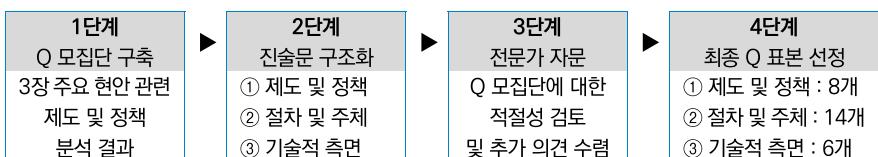
[표 4-3]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분석의 틀 및 구성 항목

구분	2장 분석 결과(주요 현안 3가지)		
	1인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 약화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빈집 증가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적 측면 (제도 및 정책)	공통부분(제도 및 정책 부분, 추진 절차 및 주체 부분)		-
3장 분석 결과	-	-	기술 연계 부분
내용적 측면 (매뉴얼 및 사업)	가로 단위 전략 (노후 저층 주거지역 가로) 건축물 단위 전략 (다가구·다세대주택)		-
	블록 단위 전략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출처: 연구진 작성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 사항 (체계적 측면)

본 연구에서는 3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Q 모집단을 구축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Q 표본(Q 방법론 진술문: 설문 문항)을 최종 추출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교수, 연구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실무자 등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하였다. Q 표본인 진술문 구성 시 구조화 방식과 비구조화 방식을 혼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추진체계를 ① 사업 관련 제도 및 정책적 측면, ② 사업 추진 절차 및 주체 측면, ③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적 측면 3가지로 구조화하였다. Q 표본의 개수는 연구의 특성, 진술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40개에서 60개가 적절한 수라고 판단하며 자극의 정도에 따라서 30개 미만도 가능하다(김홍규, 2008, p.97). 본 연구의 Q 표본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사업 추진의 절차 및 주체,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진술문으로 구성된 비교적 자극의 복잡도가 높으며 난이도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28개로 구성하였다.



[그림 4-5]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체계 개선사항(체계적 측면) 도출 과정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4]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 문항

구분	번호	질문
정책 및 제도	1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위상(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같이 범죄예방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관련이 있는 조례에 통합하여 다양한 제도에 범죄예방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3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 인력,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중요하다.
	4	범죄예방 환경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CPTED 인증제도(CPTED 제품 및 디자인 인증 등)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환경조성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사업 선정 시 가점 제공 등)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및 정책 실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7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범죄예방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안전(교통, 방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8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다양한 부처의 지역단위 환경개선 사업(국토부 : 도시재생사업, 해수부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농림부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교육부 :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9	물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범죄 특성을 종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범죄발생이 높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범죄발생은 적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지방도시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대상지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하고 이를 처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사업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 및 주체	14	차기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이후 CPTED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15	여러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에 흩어져 있는 CPTED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16	지역 내 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주민, 업체, 전문가 등 주체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17	중앙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8	자치단체의 사업 담당부서와 유관 부서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19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20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 단계(대상지 선정, 대상지 진단 및 처방, 방범시설물 설치 위치 선정 등)에서 경찰의 역할(적절한 관여, 개입, 지원 등)이 중요하다.
	21	지자체 담당자의 정기적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역량 강화는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2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컨설팅 지원은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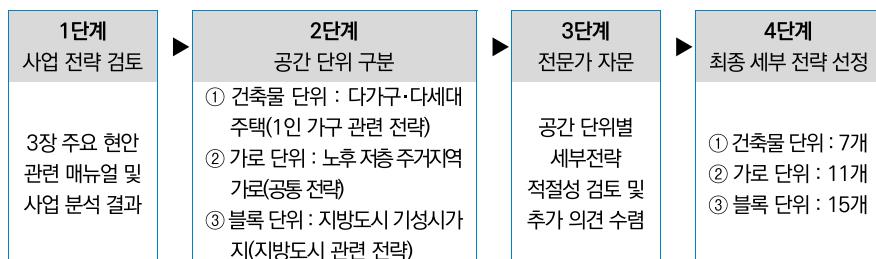
구분	번호	진술문
관련 기술	23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4	유동인구가 적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드론, 무인 로봇, IoT 등)을 활용하여 감시 및 순찰 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5	기존 시설물의 범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AI, IoT,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
	26	다양화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통한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범죄 예방 환경설계 고도화가 중요하다.
	27	범죄예방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
	28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출처: 연구진 작성

- 공간 단위별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전략 (내용적 측면)

3장 분석 결과 사회변화와 관련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대상 공간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공간인 다가구·다세대 주택,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쇠퇴하고 있는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역, 그리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정리하면 ① 건축물 단위 : 다가구·다세대 주택, ② 가로 단위 : 노후 저층주거지역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 ③ 블록 단위 :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로 공간 단위가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공간 단위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략에 대해 관계자 인식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각 공간 단위의 주요 전략 및 세부 내용은 3장에서 분석한 법무부 및 경찰청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내용과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 제시한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을 분석하여 정리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도출하였다. 건축물 단위의 주요 전략 문항은 7개이며, 가로 단위는 11개, 블록 단위는 15개이다.



[그림 4-6] 공간 단위별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내용적 측면) 도출 과정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5] 공간 단위별 CPTED 원리 및 세부 전략

CPTED 원리	번호	세부 전략
<b>건축물 단위 : 다가구다세대 주택</b>		
접근 통제	1	적정 성능을 갖춘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주택 내부로 접근이 어렵게 하는 개별 세대 침입 제한 전략이 중요하다. (공동현관 및 개별세대 방범시설, 방범창, 배관덮개, 특수형광 물질 등)
	2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현관이나 공용공간으로 출입하는 것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심택배함 설치, 검침기 외부 설치, 공용출입구 외부에 설치된 우편함 등)
감시 강화	3	건축물 또는 출입구 주변은 장애물로 인해 시야가 가리지 않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감시 강화 전략이 중요하다. (적정 간격의 수목 식재, 적절한 위치에 반사경, 조명시설, 미러시트, CCTV 등 설치)
	4	필로티 구조 1층 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은 외부로부터 자연적 감시가 강화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투시형 담장, 안심거울, 반사띠 등 설치)
영역성 강화	5	주택 출입구는 주변 공간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영역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바닥 단차 구분, 재료나 색채 구분 등)
공동체 활동	6	1인 가구가 야간 귀가 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자치활동 또는 공공의 지원을 통한 안심 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 앱 등)
	7	1인 가구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에게 스스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물품 지원이 중요하다. (여성안심키트 등)
<b>가로 단위 : 노후 저층 주거지역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b>		
접근 통제	1	범죄자가 숨거나 범죄(또는 도주)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사이의 이격 공간(외부로부터 감시가 어려운 공간)의 접근을 통제하는 전략은 중요하다. (이격공간 차폐시설 등 설치)
	2	주택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감시가 가능하도록 담장은 허물거나 투시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시 강화	3	야간 주변 주거지의 빛공해는 최소화하고 적절한 시야확보를 위해 벽부등, 불리드 조명 등 (높은 조도보다는 낮은 조도의 조명을 여러 개 설치, 광원의 균일도, 광원색 등 고려 필요)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4	주거지 진출입부와 주요 교차점 부근 또는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기계적 감시를 강화하고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이 포함된 통합형 모듈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역성 강화	5	복잡한 구조의 골목길은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교차점, 굽이진 골목길 등에 적절한 조명과 시야학보를 위한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야간 적절한 조명시설, 안내 사인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닥표지병, 고보조명, 안내표지판 등)
활동성 강화	7	노후화된 담장, 벽면, 계단, 도로 등의 정비 및 도색(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및 색상 적용)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8	가로변 화단 정비 또는 식재 공간 조성(보행 공간 충분히 확보가능할 경우)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활동성 강화	9	주요 보행로와 연계하여 벤치 등 휴게시설이나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와 함께 활동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명료성 강화	10	주간과 야간 방범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디자인 적용과 적절한 조명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좁은 골목길이 많은 저층 주거지는 112신고 표지판과 함께 현재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안내 표시판(주소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CPTED 원리	번호	세부 전략
<b>블록 단위 : 지방도시 기성 시가지</b>		
접근 통제	1	빈집은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적절한 안내사인 및 방범시설물 (CCTV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시 강화	2	어린이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은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역성 강화	3	주거지 내 막다른 골목은 외부인이 잘못 들어오지 않도록 주거지역 및 막다른 골목이라는 노면표지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주거지역 내 규칙과 에티켓(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분리수거 일정, 흡연 금지, 주찰금지, 소음 금지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픽토그램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 관리	5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외지인이 주거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방지하기 위해 주거 및 상업지역 경계부에 마을 지도(게시판), 안내표지판, 지주형 게이트 등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6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피할 수 있는 안심지킴이집(여성, 아동 등), 안심 상점(편의점)은 방범거점 시설물로서 충분한 방범시설물 설치와 함께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지역 내 쓰레기 무단 배출 및 투기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장소를 마련하고 클린 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8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고 무질서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가로 시설물(안내 표지판, 전신주 래핑 상태 등)의 정비를 통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9	노후화된 방범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10	학교 인접 주택가는 지역 내 무질서도 관리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주차 된 차량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11	지역의 경관개선 및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수목 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활동성 강화	12	지역 내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휴게 및 운동 시설 설치, 편의 공간을 조성하여 활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공간(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율방범 대 거점 공간,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체 활동	14	여성 1인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이 중요하다.
	15	CPTED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방범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중요하다. (CPTED에 대한 이해, 안전지도 제작, 주요 사례, 주민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

출처: 연구진 작성

## 2. 분석 결과

### 1)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체계적 측면 개선 사항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의 체계적 측면 개선 사항을, 표 4-6과 같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개선 사항과 스마트 기술 관련 개선 사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Q 방법론을 활용해 정책 개선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유형별로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주요 현안별로 도출된 공통 개선 사항과 관련 기술 개선 사항에 대해 중요도와 유형별, 집단별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표 4-6] 체계적 측면 개선사항

2장 분析 결과(주요 현안 3가지)			
구분	1인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 약화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빈집 증가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3장 분석 결과 내용	체계 (제도 및 정책)	공통 사항(제도 및 정책 부분, 추진 절차 및 주체 부분)	관련 기술 사항
	-	-	-
	가로 단위 전략 (노후 저층 주거지역 가로)		
	건축물 단위 전략 (다가구다세대 주택)	블록 단위 전략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

출처: 연구진 작성

#### □ Q 방법론 분석 결과 : 개인별 주관성에 따른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 PQMetho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응답 결과인 Q 소트(Q sort)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PCA) 방법을 적용하였다. 주성분 분석 결과 요인의 선별 기준이 되는 고유값(Eigenvalues)이 높은 10개를 추출하였으며, 모두 일반적으로 요인의 개수 판별 시 활용하는 기준 값인 1을 초과하였다(박한솔·성종상, 2019, p.122; 안이수, 2020, p.3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적절한 해석을 위해 고유값이 3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최종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요인 6개의 설명력은 54.11%로 나타났다.

6개의 유형별 관계자 현황은 아래 표 4-7과 같다. 유형1은 15명으로 구분되었으며,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유형2는 14명이며, 공무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다. 유형 3은 전문가 중심의 유형이며, 유형4는 실무자 중심이나 모든 집단이 비교적 고루 분포한 유형이며, 유형5와 6은 공무원 중심의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Q 방법론 분석 결과는 표준화 값(Z-score)이 절댓값 1보다 클 경우 해당 유형을 설명하는 진술문이다.

[표 4-7] 유형별 관계자 현황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전문가	40.0%	28.6%	55.6%	12.5%	20.0%	0.0%
공무원	40.0%	50.0%	22.2%	25.0%	60.0%	100.0%
경찰	13.3%	14.3%	22.2%	25.0%	0.0%	0.0%
실무자	6.7%	7.1%	0.0%	37.5%	2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연구진 작성

- 제1유형 :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의 통합적 접근 중요

제1유형은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유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 예방 전략과 함께 생활안전을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대상지 선정 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며, 범죄예방을 포함한 생활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적절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유형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응답하였다. 제1 유형을 종합하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지역 단위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업 추진 시 스마트 기술 적용과 다양한 생활안전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표 4-8] 제1유형 :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의 통합적 접근

번호	진술문	Z-score
9	물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범죄 특성을 종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858
7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범죄예방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안전(교통, 방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1.749
12	대상지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하고 이를 처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674
16	지역 내 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주민, 업체, 전문가 등 주체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1.106
23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007

출처: 연구진 작성

- 제2유형 : 법적 기반 및 제도 강화 중요

제2유형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경찰, 실무자로 구성된 유형이다. 해당 유형은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의 위상 강화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등 체계

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였다. 이와 함께 제1유형과 동일하게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였다. 제2유형을 종합하면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표 4-9] 제2유형 : 법적 기반 및 제도 강화 중시

번호	진술문	Z-score
1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위상(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402
3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 인력,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중요하다.	1.715
9	물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범죄 특성을 종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219

출처: 연구진 작성

- 제3유형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균형적 역할 중요

제3유형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단위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생활안전을 고려한 사업추진과 사업 이후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제3유형을 종합하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수립과 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역할이 중요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균형적 역할을 중시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표 4-10] 제3유형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균형적 역할 중요

번호	진술문	Z-score
6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및 정책 실행을 위해 (광역)자치 단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1.643
7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범죄예방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안전(교통, 방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1.381
17	중앙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286
14	차기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이후 CPTED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1.101

출처: 연구진 작성

- 제4유형 : 유지관리 및 지속가능성 중요

제4유형은 실무자 비율이 높으나 비교적 다른 유형 대비 관계자 집단이 고루 분포된 유형이다. 해당 유형은 중장기 계획 마련, 근거법령 마련, 스마트 도시관리와 연계 등을 통해 사후 유지관리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대상지 선정이 중요한 부분이라 인식하였다. 제4유형을 종합하면 범죄예방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형이다.

[표 4-11] 제4유형 : 유지관리 및 지속가능성 중요

번호	진술문	Z-score
13	사업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204
3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 인력,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중요하다.	1.948
28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1.293
9	물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범죄 특성을 종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206

출처: 연구진 작성

- 제5유형 : 대도시 및 지방도시의 맞춤형 접근 중요

제5유형은 공무원의 비중이 60%이며, 전문가와 실무자가 각각 20%로 구성되었다. 해당 유형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대도시 상업지역과 범죄발생은 적으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지방도시 노후 주거지역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인식하였다.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유지관리 및 근거법령 마련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제5유형을 종합하면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효과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제도 마련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중시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표 4-12] 제5유형 : 대도시 및 지방도시의 맞춤형 접근 중요

번호	진술문	Z-score
10	범죄발생이 높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729
11	범죄발생은 적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지방도시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432
4	범죄예방 환경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CPTED 인증제도(CPTED 제품 및 디자인 인증 등)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415
23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345
14	차기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이후 CPTED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1.066
3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 인력,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중요하다.	1.014

출처: 연구진 작성

- 제6유형 :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중요

제6유형은 다른 유형과 달리 공무원 한 집단으로만 구성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의 교육과 범죄예방에 대한 역량강화를 중시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 마련, 연계 사업 추진, 협업체계 구축, 제도 마련 및 계획 수립 등을 지자체 단위에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인식하였다. 제6유형을 종합하면 지자체 단위에서 유기적인 협업, 연계 추진을 통한 효율적·효과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인식하며, 이를 위한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중시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표 4-13] 제6유형 :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중요

번호	진술문	Z-score
21	지자체 담당자의 정기적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역량 강화는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1.690
3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 인력,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중요하다.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농어촌 활성화 사업 등) 추진 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사업 선정 시 가점 제공 등)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520
5	지역 내 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주민, 업체, 전문가 등 주체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1.277
16	범죄예방 환경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CPTED 인증제도(CPTED 제품 및 디자인 인증 등)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268
4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및 정책 실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1.221
6	출처: 연구진 작성	1.183

#### □ 주요 현안 공통 사항 : 제도 및 정책 부분, 추진 절차 및 주체 부분

앞서 Q방법론을 활용하여 개인의 주관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항목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변화 주요 현안 관련 사업의 체계적 측면 개선사항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절차 및 주체와 관련된 사항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 상대적 중요도 높은 항목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체계적 측면에서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인 항목은 근거법 마련으로, 전체 응답자의 69.1%가 동의했으며, 그중 36.4%는 매우 동의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범죄예방 관계자들이 법적 근거의 마련이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인 항목은 사업 대상지 선정의 중요성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선정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 기간, 행정 처리 과정의 복잡성,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부적절한 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관계자가 대상지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범죄예방 관계자들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생활안전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확장된 개념의 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주로 노후화된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추진되며, 이러한 지역은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 화재 등 다양한 생활안전 요소에서도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사업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두 개념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평가 및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범죄 발생률이 높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지역 참여 주체 간의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표 4-14] 상대적 중요도 높은 사업의 체계적 측면 공통 사항 (상위 30% 항목)

번호	진술문	동의 응답 비율	매우 동의 응답 비율
3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 인력,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중요하다.	69.1%	36.4%
9	물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범죄 특성을 종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67.3%	14.6%
7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범죄예방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안전(교통, 방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60.0%	14.6%
14	차기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이후 CPTED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58.2%	3.6%
11	범죄발생은 적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지방도시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56.4%	7.3%
16	지역 내 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주민, 업체, 전문가 등 주체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52.7%	1.8%
13	사업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43.6%	14.6%

주 : 동의 응답 비율 = 매우 동의 응답 비율 + 동의 응답 비율 + 약간 동의 응답 비율

출처: 연구진 작성

- 집단별 중요도 비교

범죄예방 관계자 집단별 진술문의 동의 응답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각 집단 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진술문이 있는 반면, 집단별로 차이가 두드러지는 진술문도 확인되었다. 이는 Q 방법론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개인별 인식 차이뿐만 아니라, 집단별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근거법령 관련 진술문에서 경찰 집단은 동의율이 87.5%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

으며, 전문가(76.5%)와 공무원(66.7%) 역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러나 실무자 집단에서는 동의율이 33.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실무자 집단이 민간 설계업체로서 예산 및 인력 배분,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 같은 정책적 요소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 중요성을 덜 인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상지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82.4%)과 실무자 집단(83.3%) 모두 매우 높게 동의했으며, 다른 집단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집단에서 이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안전을 고려한 사업 추진과 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 진술문 역시 모든 집단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공통으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대상지 선정 시 범죄 발생률이 낮으나 불안감이 높은 노후 지역에 대한 고려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집단에서 동의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은 실무자 집단에서, 중장기 계획 마련에 대한 중요성은 공무원 및 실무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이는 각 집단이 사업 추진의 특정 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집단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조율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집단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5] 집단별 상대적 중요도 높은 사업의 체계적 측면 공통 사항 (상위 30% 항목)

번호	진술문	동의 응답 비율(%)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3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 인력,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중요하다.	69.1	76.5	66.7	87.5
9	물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범죄 특성을 종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67.3	82.4	54.2	62.5
7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범죄예방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 안전(교통, 병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60.0	64.7	62.5	50.0
14	차기 사업의 자속적인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이후 CPTED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58.2	70.6	54.2	50.0
11	범죄발생은 적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지방도시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56.4	64.7	50.0	0.0
16	지역 내 지자체, 지자경찰위원회, 경찰, 주민,업체, 전문가 등 주체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52.7	52.9	54.2	75.0
13	사업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43.6	52.9	37.5	50.0

주 : 동의 응답 비율 = 매우 동의 응답 비율 + 동의 응답 비율 + 약간 동의 응답 비율

출처: 연구진 작성

## □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 관리 : 관련 기술 사항

### •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기술 사항 중요도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기술은 제도, 정책, 절차 및 주체와 관련된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동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진술문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스마트 기술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동의 응답 비율은 49.1%, 매우 동의 응답 비율은 7.3%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기술이 범죄예방에 있어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은 있지만, 다른 항목들에 비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기술 관련 진술문들은 동의 응답 비율이 50% 미만에 머물렀고, 매우 동의 응답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연계한 범죄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감하였으나, 현실적인 제약이나 기존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더 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범죄예방에서 스마트 기술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예산 확보, 유지관리 체계 등의 사전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더 시급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스마트 기술의 도입이 범죄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기술 도입에 앞서 제도적 기반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6] 사업의 체계적 측면 기술 부분

번호	진술문	동의 응답 비율	매우 동의 응답 비율
23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9.1%	7.3%
28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43.6%	0.0%
27	범죄예방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	38.2%	5.5%
26	다양화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통한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고도화가 중요하다.	34.6%	3.6%
24	유동인구가 적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드론, 무인 로봇, IoT 등)을 활용하여 감시 및 순찰 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0.9%	3.6%
25	기존 시설물의 범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AI, IoT,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	29.1%	1.8%

주 : 동의 응답 비율 = 매우 동의 응답 비율 + 동의 응답 비율 + 약간 동의 응답 비율

출처: 연구진 작성

- 집단별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기술 사항 중요도

범죄예방 관계자 집단별 스마트 기술 적용에 대한 동의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측 및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집단(62.5%)이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이는 공무원들이 스마트 기술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경찰 집단(25.0%)은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한 범죄예방 및 대응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으며, 기술보다는 인력이나 기준의 전통적인 대응 방식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공무원 집단은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한 사후 평가와 유지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무원(54.2%)은 스마트 기술이 지속적으로 범죄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다른 집단들은 이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였다. 한편, 경찰 집단은 스마트 기술 적용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보았으며, 제도적 개선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경찰은 범죄예방에서 스마트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법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표 4-17] 상대적 중요도 높은 사업의 체계적 측면 공통 사항 (상위 30% 항목)

번호	진술문	동의 응답 비율(%)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23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9.1	41.2	62.5	25.0	37.5
28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사후평가 및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43.6	35.3	54.2	37.5	25.0
27	범죄예방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 다양화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R&D)	38.2	29.4	41.7	50.0	25.0
26	을 통한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고도화가 중요하다.	34.6	47.1	25.0	37.5	25.0
24	유동인구가 적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드론, 무인 로봇, IoT 등)을 활용하여 감시 및 순찰 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0.9	23.5	37.5	37.5	12.5
25	기존 시설물의 범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AI, IoT,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	29.1	35.3	29.2	25.0	12.5

주 : 동의 응답 비율 = 매우 동의 응답 비율 + 동의 응답 비율 + 약간 동의 응답 비율

출처: 연구진 작성

##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내용적 측면 개선 사항

앞서 다른 체계적 측면의 개선 사항과 마찬가지로, 2장과 3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내용적 측면을 아래 표 4-18과 같이 세 가지 공간 단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세 가지 공간 단위별로 CPTED 원리를 적용하고, 각 원리에 따른 세부 전략의 상대적 중요도를 위계별로 분석하였다.

[표 4-18] 내용적 측면 개선 사항

2장 분석 결과(주요 현안 3가지)			
구분	1인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 약화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빈집 증가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 (제도 및 정책)	공통 사항(제도 및 정책 부분, 추진 절차 및 주체 부분)	-	관련 기술 사항
3장 분석 결과	내용 (매뉴얼 및 사업)	가로 단위 전략 (노후 저층 주거지역 가로) 건축물 단위 전략 (다가구다세대 주택)	블록 단위 전략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출처: 연구진 작성

###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공간 단위별 중요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공간 단위인 건축물, 가로, 블록 단위별 중요도에 대한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가로 단위가 41.51점, 건축물 단위가 30.5점, 블록 단위가 28.44점으로 나타났다. 관계자 집단별로 살펴보면, 4개 집단 모두 가로 단위에서의 사업 추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무자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공무원, 경찰, 실무자 3개 집단은 건축물 단위가 두 번째로 중요한 공간이라 응답한 반면, 전문가 집단은 블록 단위(32.59점)로 건축물 단위(26.94점)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라 응답하였다.

[표 4-19]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공간 단위별 중요도 (100점 만점)

구분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건축물 단위 : 다가구·다세대주택	30.05	26.94	32.08	28.13	33.33
가로 단위 : 노후 저층 주거지역 골목길	41.51	40.47	41.25	43.13	43.33
블록 단위 : 지방도시 기성 시가지	28.44	32.59	26.67	28.76	23.3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연구진 작성

## □ 건축물 단위 :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별 중요도

### •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CPTED 원리별 중요도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CPTED 원리는 접근통제, 감시강화, 영역성 강화, 활동성 강화 4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각 원리별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감시강화(33.55점) 및 접근통제(30.64점)가 중요한 원리로 도출되었다. 관계자 집단별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도 점수의 크기 차이는 있으나, 2가지 원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전문가와 실무자 집단은 건축물 단위에서 접근통제를, 공무원 및 경찰 집단은 감시강화를 가장 중요한 원리로 응답하였다. 한편 영역성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점수는 각각 17.82점, 18.00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집단별 두 원리에 대한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접근통제가 가장 중요한 원리라 응답한 집단은 전문가 집단이며, 감시강화는 경찰 집단, 영역성 강화는 실무자 집단, 공동체 활동은 공무원 집단으로 CPTED 원리별 관계자 집단의 인식차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건축물 단위 : 다가구·다세대 주택 CPTED 원리별 중요도 (100점 만점)

구분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접근통제	30.64	37.06	24.42	31.25	32.50
감시강화	33.55	30.88	35.00	39.38	27.50
영역성 강화	17.82	15.59	19.17	15.63	21.67
공동체 활동	18.00	16.47	20.42	13.75	18.3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연구진 작성

### •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세부 전략별 중요도

(접근통제 전략)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접근통제 관련 세부 전략은 외부인의 개별 세대 내부로 접근, 침입을 차단하는 전략과 공동현관 또는 공용공간으로 출입을 제한, 차단하는 전략 2가지이다. 관계자는 외부인의 개별세대 침입 제한 전략의 중요도를 49.36점, 공용공간 출입제한 전략의 중요도를 50.64점으로 응답하여 차이가 거의 없었다. 관계자 집단별 살펴보면 전문가 집단은 개별 세대 접근통제 전략의 중요도가 56.47점으로 공용 공간으로 출입제한 전략이 43.53점으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 경찰, 실무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외부인의 공용공간 출입제한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21] 건축물 단위 접근통제 전략별 중요도

구분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적정 성능을 갖춘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주택 내부로 접근이 어렵게 하는 개별 세대 침입 제한 전략이 중요하다. (공동현관 및 개별세대 방범 시설, 방범창, 배관덮개, 특수형광물질 등)	49.36	56.47	46.46	45.00	46.67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현관이나 공용공간으로 출입하는 것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심택배함 설치, 검침기 외부 설치, 공용 출입구 외부에 설치된 우편함 등)	50.64	43.53	53.54	55.00	53.3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연구진 작성

(감시강화 전략)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감시강화 전략은 2가지이며, 건축물이나 출입구 주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주차장의 자연적 감시강화 전략보다 중요한 전략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과 경찰 집단은 건축물 주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전략의 중요성이 66.52점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주차장의 자연적 감시강화 전략(33.75 점)보다 중요도가 큰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문가와 실무자 집단 역시 사각지대 최소화 전략의 중요도가 더 큰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실무자 집단은 건축물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감시 강화전략과 주차장의 자연 감시강화 전략의 중요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건축물 단위 감시강화 전략별 중요도

구분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건축물 또는 출입구 주변은 장애물로 인해 시야가 가리지 않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감시 강화 전략이 중요하다. (적정 간격의 수목 식재, 적절한 위치에 반사경, 조명시설, 미러시트, CCTV 등 설치)	61.64	56.47	66.25	66.25	51.67
필로티 구조 1층 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은 외부로부터 자연적 감시가 강화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투시형 담장, 안심거울, 반사띠 등 설치)	38.36	43.53	33.75	33.75	48.3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연구진 작성

(공동체 활동 전략)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공동체 활동 전략은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의 범죄 예방을 위한 서비스 및 물품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전략은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관계

자 설문조사 결과 공동체 활동 전략 중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이 교육 및 홍보, 물품 지원의 전략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계자 집단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공무원 집단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졌고 경찰 집단의 편차가 가장 적었다.

[표 4-23] 건축물 단위 공동체 활동 전략별 중요도

구분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1인 가구가 야간 귀가 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자치활동 또는 공공의 지원을 통한 안심 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 앱 등)	58.45	57.35	61.25	53.75	56.67
1인 가구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에게 스스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물품 지원이 중요하다. (여성안심키트 등)	41.55	42.65	38.75	46.25	43.3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연구진 작성

#### □ 가로 단위 : 노후 저층주거지역 좁은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의 전략별 중요도

- 노후 저층주거지역 가로의 CPTED 원리별 중요도

노후 저층주거지역 가로의 CPTED 주요 원리는 접근통제, 감시강화, 영역성 강화, 활동성 강화, 명료성 강화이며,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감시강화의 전략이 34.91점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접근통제 전략은 18.27점, 영역성 강화는 17.64점이며, 다음은 활동성 강화, 명료성 강화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집단별 중요도도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실무자 집단만 명료성 강화 전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24] 가로 단위 CPTED 원리별 중요도

구분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접근통제	18.27	16.76	19.17	17.50	20.00
감시강화	34.91	34.41	32.71	43.75	33.33
영역성 강화	17.64	19.71	17.50	12.50	19.17
활동성 강화	14.78	14.12	15.00	13.13	18.00
명료성 강화	14.40	15.00	15.63	13.13	9.5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연구진 작성

- 노후 저층주거지역 가로의 세부 전략별 중요도

(감시강화 전략)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좁은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의 감시강화 전략은 4 가지(담장 가시성 확보, 적절한 조명설치, 주요 지점에 통합형 CCTV(보안등, 비상벨, 안내사인 포함) 설치, 골목길 조명설치 및 반사경 설치)이다. 4가지의 감시강화 전략 중 중요도가 높은 전략은 주요 지점에 통합형 CCTV 설치로 중요도 점수는 35.90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적절한 조명설치 반사경 설치, 담장 가시성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자 집단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전략은 동일하게 통합형 CCTV 설치로 나타났으며, 경찰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전문가 집단은 통합형 CCTV 설치만큼 적절한 조명설치가 중요한 전략으로 응답하였으며, 실무자 집단은 타 집단 대비 담장의 가시성 확보 전략의 중요성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표 4-25] 가로 단위 감시강화 전략별 중요도

구분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주택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감시가 가능하도록 담장은 허물거나 투시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17.27	15.29	18.54	12.50	24.17
야간 주변 주거지의 빛공해는 최소화하고 적절한 시야확보를 위해 벽부등, 블라드 조명 등(높은 조도보다는 낮은 조도의 조명을 여러 개 설치, 광원의 균일도, 광원색 등 고려 필요)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26.09	31.18	23.96	25.00	21.67
주거지 진출입부와 주요 교차점 부근 또는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기계적 감시를 강화하고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이 포함된 통합형 모듈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35.90	32.65	35.63	46.25	32.50
복잡한 구조의 골목길은 사각지대가 최소화도록 교차점, 굽이진 골목길 등에 적절한 조명과 시야학보를 위한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20.73	20.88	21.88	16.25	21.67
<b>합계</b>	<b>100.00</b>	<b>100.00</b>	<b>100.00</b>	<b>100.00</b>	<b>100.00</b>

출처: 연구진 작성

(영역성 강화 전략) 노후 저층주거지역 가로 단위에서의 영역성 강화 전략 중 조명 또는 안내판을 통한 영역성 확보 전략이 가장 높았으며, 담장 및 도로 정비를 통해 가로 경관 개선과 영역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공무원, 경찰 집단에서도 두 전략이 중요도가 높았으며, 점수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실무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조명시설 및 안내사인 설치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영역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도가 다른 전략 대비 높았으며, 영역성 확보를 위한 가로변 화단 정비 또는 식재 공간 조성 전략과 담장 및 가로 정비 전략의 중요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26] 가로 단위 영역성 강화 전략별 중요도

구분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야간 적절한 조명시설, 안내 사인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닥표지병, 고보조명, 안내표지판 등)	36.78	34.88	37.50	36.25	40.00
노후화된 담장, 벽면, 계단, 도로 등의 정비 및 도색(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및 색상 적용)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35.24	36.35	35.42	35.63	30.83
가로변 확단 정비 또는 식재 공간 조성(보행 공간 충분히 확보가능할 경우)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27.98	28.76	27.08	28.16	29.17
<b>합계</b>	<b>100.00</b>	<b>100.00</b>	<b>100.00</b>	<b>100.00</b>	<b>100.00</b>

출처: 연구진 작성

(명료성 강화 전략) 가로 단위에서의 명료성 강화 전략은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및 조명·안내 표지판 설치와 위치안내 표지판 설치 2가지이며, 시설물의 위치 안내 및 시인성 강화 전략의 중요도가 58.27점으로 신고표지판 및 위치안내 표지판 설치에 대한 전략(41.73점)보다 높았다. 관계자 집단별 결과를 살펴보면 4개 집단 모두 동일하게 첫 번째 전략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실무자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27] 가로 단위 명료성 강화 전략별 중요도

구분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주간과 야간 방범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디자인 적용과 적절한 조명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58.27	61.18	57.50	58.13	53.33
좁은 골목길이 많은 저층 주거지는 112신고 표지판과 함께 현재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 안내 표시판(주소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41.73	38.82	42.50	41.88	46.67
<b>합계</b>	<b>100.00</b>	<b>100.00</b>	<b>100.00</b>	<b>100.00</b>	<b>100.00</b>

출처: 연구진 작성

## □ 블록 단위 :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별 중요도

### •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CPTED 원리별 중요도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CPTED 원리는 접근통제, 감시강화, 영역성 강화, 유지관리, 활동성 강화, 공동체 활동으로 6가지이다. 중요도 설문 결과 유지관리가 블록 단위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다음은 감시강화가 19.84점으로 중요도가 높았으며, 영역성 강화, 접근통제 활동성 강화, 공동체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8]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CPTED 원리별 중요도

구분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접근통제	15.47	13.29	17.08	16.25	14.17
감시강화	19.84	16.24	21.88	26.25	13.33
영역성 강화	15.93	18.29	13.33	13.13	23.33
유지관리	22.11	25.94	22.08	16.88	18.33
활동성 강화	14.18	13.82	14.58	11.88	16.67
공동체 활동	12.47	12.41	11.04	15.63	14.17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연구진 작성

관계자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문가 및 공무원 집단은 유지관리(25.94점, 22.08점)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한 반면, 경찰은 감시강화(26.25점), 실무자는 영역성 강화(23.33점)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전문가 및 실무자 집단에 비해 공무원 및 경찰 집단은 블록 단위에서 감시강화 전략보다 영역성 강화 전략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공무원 집단은 공동체 활동 전략의 중요도를, 경찰은 활동성 강화 전략의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였다.

### •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세부 전략별 중요도

(영역성 강화 전략)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영역성 강화 전략은 주거지의 영역성 강화 전략, 주거지역 내 규칙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한 영역성 강화 전략, 주거지역 경계부 강화 전략, 방범거점시설 설치를 통한 영역성 강화 전략 4가지이다.

가장 중요한 영역성 강화전략은 안심지킴이집, 안심 상점 등 방범거점 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한 공간이라는 영역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 집단의 중요도 점수는 18.13점으로 영역성 강화

전략 4가지 중 가장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안심지킴이집이나 안심상점 등 방범 거점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나, 경찰 입장에서는 해당 시설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 현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방범 거점시설 설치를 통해 영역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성 강화 전략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된다.

[표 4-29]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영역성 강화 전략별 중요도

구분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주거지 내 막다른 골목은 외부인이 잘못 들어오지 않도록 주거지역 및 막다른 골목이라는 노면 표지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3.45	20.88	23.33	30.00	22.50
주거지역 내 규칙과 에티켓(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분리수거 일정, 흡연 금지, 주차금지, 소음 금지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픽토그램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2.36	20.00	22.29	26.88	23.33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외지인이 주거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방지하기 위해 주거 및 상업지역 경계부에 마을 지도(게시판), 안내표지판, 지주형 게이트 등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4.64	24.71	25.21	25.00	21.67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피할 수 있는 안심지킴이집(여성, 아동 등), 안심 상점(편의점)은 방범거점 시설물로서 충분한 방범시설물 설치와 함께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9.55	34.41	29.17	18.13	32.50
<b>합계</b>	<b>100.00</b>	<b>100.00</b>	<b>100.00</b>	<b>100.00</b>	<b>100.00</b>

출처: 연구진 작성

(유지관리 전략)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유지관리 전략은 표 4-30과 같이 5개 전략으로 도출되었다. 쓰레기 관리 전략, 노후 시설물 정비 전략, 시설물 유지관리 전략, 불법주차 관리 전략, 수목 관리 전략 5가지 중 노후 방범시설물의 정상 기능 작동을 위한 유지관리 전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다음은 22.73점의 가로시설물의 정비 전략이며, 쓰레기 관리 전략, 불법주차 관리전략, 수목관리 전략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예방 관계자 4개 집단 모두 노후 시설물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지속적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응답하였으며, 경찰 집단의 중요도 점수가 30.00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전문가, 공무원, 실무자 집단의 전략 중요도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경찰 집단은 상대적으로 불법주차 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크고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비의 중요성은 낮게 나타났다.

[표 4-30]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유지관리 전략별 중요도

구분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지역 내 쓰레기 무단 배출 및 투기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장소를 마련하고 클린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19.09	20.88	17.92	18.75	19.17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고 무질서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가로 시설물(안내 표지판, 전신주 래핑 상태 등)의 정비를 통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22.73	24.41	23.54	16.25	23.33
노후화된 방법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26.55	27.06	25.00	30.00	26.67
학교 인접 주택가는 지역 내 무질서도 관리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18.00	15.88	18.54	20.00	19.17
지역의 경관개선 및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수목 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13.64	11.76	15.00	15.00	11.67
<b>합계</b>	<b>100.00</b>	<b>100.00</b>	<b>100.00</b>	<b>100.00</b>	<b>100.00</b>

출처: 연구진 작성

(활동성 강화 전략)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활동성 강화전략은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활동성 강화 전략과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시설) 마련 전략 2가지이다. 활동성 강화 전략 2가지의 편차를 크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휴게 및 편의 시설(공간)을 설치하여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고 활동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더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특히 실무자 집단은 유휴공간 활용 전략이 다른 집단 대비 중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활동성 강화 전략별 중요도

구분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지역 내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휴게 및 운동 시설 설치, 편의공간을 조성하여 활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56.09	53.53	56.04	56.25	63.33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공간(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율방범대 거점 공간,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43.91	46.47	43.96	43.75	36.67
<b>합계</b>	<b>100.00</b>	<b>100.00</b>	<b>100.00</b>	<b>100.00</b>	<b>100.00</b>

출처: 연구진 작성

(공동체 활동 전략)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공동체 활동 전략은 자율 방범 활동과 범죄 예방 관련 교육에 대한 전략 2가지이다. 공동체 활동 전략 역시 두 전략의 중요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교육 프로그램(46.27점)보다 자율 방범 활동(53.73점)의 중요성이 더 높았다. 전문가와 실무자 집단에서는 자율 방범 활동의 중요성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공무원과 경찰 집단은 두 전략간 중요도 점수의 편차가 작게 나타났다.

[표 4-32]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공동체 활동 전략별 중요도

구분	전체	전문가	공무원	경찰	실무자
여성 1인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이 중요하다.	53.73	57.65	49.79	51.25	61.67
CPTED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방범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중요하다. (CPTED에 대한 이해, 안전지도 제작, 주요 사례, 주민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	46.27	42.35	50.21	48.75	38.3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연구진 작성

### 3. 소결

#### 1)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체계적 측면 주요 시사점

##### □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상호보완적 관계인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의 통합적 접근 강화에 대한 논의 필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범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업으로 접근 가능하다. 범죄 안전은 생활안전 분야에서 교통 및 화재 안전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 매뉴얼이나 사업 추진 시에 이미 범죄예방과 함께 교통 안전, 화재 안전 등 다양한 생활안전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유형 분류 없이 전체 응답자 중 생활안전을 고려한 사업 추진의 중요성(진술문 7번)에 대해 매우 동의 응답 비율이 14.55%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동의 응답자보다 동의 응답자가 2.2배 높게 나타났다. Q 방법론 분석 결과에서도 유형 1과 3에서 생활안전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 많은 관계자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유형 4, 6은 중요도가 높지 않게 나타나 생활안전의 통합적 접근에 대해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안전 측면에서 범죄 안전, 교통 안전, 화재 안전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특히 관련 기관 간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상호보완성을 높이고 지역의 생활안전 전반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 □ 스마트 도시관리와 연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 유지관리 체계 마련 필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그리고 유지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스마트 도시관리와의 연계를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1차 국가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었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나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지관리 또한 불명확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예산, 인력 부족 등의 문제와 함께 관리 주체의 모호성에서 기인한

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도시관리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사후 평가는 지자체 단위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중장기 계획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적절히 보완 및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도시관리와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는 범죄예방 사업의 유지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스마트 센서와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유지관리 시스템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스마트 도시관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핵심 전략인 감시 강화, 접근 통제, 영역성 확보 등의 요소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능형 CCTV, 스마트 센서, IoT 기술 등을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상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정교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 도시관리와 연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은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사업의 평가, 모니터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과 스마트 기술 연계 방안 모색 필요

스마트 기술은 범죄예방 분야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도시 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은 범죄예방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스마트 CCTV 등 시설물 일부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도시 관련 법령에서 방범 분야를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범죄의 사전 예방 보다는 사후 대응 측면에서 스마트 도시관리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 앞서 2장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스마트 도시관리와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본 장의 설문 결과에서는 스마트 기술 관련 진술문(진술문 23~28번)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스마트 도시관리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효율적·효과적인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 제도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스마트 기술 관련 진술문의 시급성이 낮아 중요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부 이견이 있는 유형이

있으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직까지는 스마트 기술과 범죄예방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미미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스마트 기술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균형적 역할 설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 중심의 사업 추진 필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많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를 총괄 및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였다. 이에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의 체계적인 관리를 포함하고 주무부처로 법무부를 지정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 기본계획 수립, 평가지표 개발, 협의회 규정 마련 등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해 중앙정부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Q 방법론을 통한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중앙부처의 권한 강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마련에 대해 중요도가 낮은 응답비율이 많았으며,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서 중요도가 낮은 유형(유형5)이 도출되었다. 이는 현행 제도 및 정책 여건상 중앙정부가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지자체 사업 추진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적인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특성상 지역 단위에서의 다양한 주체간 협업체계가 중요하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 지역 경찰 및 지자체 담당자,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실행력이 강화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Q 방법론 분석 결과에서도 지역 내 관련 주체별 협업체계의 중요성(진술문 16번)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 지역 단위에서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 □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및 법적 기반 강화 필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기반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중요성은 응답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와 이에 따른 정책적 일관성 부족에서 기인한다.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저해되고, 예산 확보, 사업 기간의 적절성, 인력 배치 등에서 구조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또한 협업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근거 법령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Q 방법론 분석 결과에서도 법적 근거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시사한다. 현재 국정과제로 범죄예방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정책적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진 만큼,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해서는 관계자들 간의 인식이 대체로 일치했으나, 조례나 인증 제도와 같은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 조례의 위상 강화와 관련해 유형 2에서는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반면, 다른 유형에서는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증제도에 대한 중요성은 공무원 비중이 높은 유형 5, 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개인별, 집단별 상이한 의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의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사회변화에 맞춰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내용적 측면 주요 시사점

###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전략의 우선순위를 확인함으로써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가능

본 장에서는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설계 전략 우선순위를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은 공간 단위를 건축물 단위(다가구·다세대 주택), 가로 단위(노후 저층 주거지역 가로), 블록 단위(지방도시 원도심) 3가지로 구분하고, 각 공간 단위별 CPTED 원리와 세부 전략의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모든 공간 단위에서 공통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된 전략은 감시 강화로 실제 사업 추진 시 공간 단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감시 강화 전략을 우선적 적용의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 예방 분야의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중요하다고 응답한 전략은 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공간 단위별 주요 전략은 사업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CPTED 원리와 세부 전략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표 전략으로 정리된 것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세부 사항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개발하고, 기존 사업 사례와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장의 설문조사 결과는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책 결정자와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 □ 관계자 집단별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전략의 중요도 차이가 일부 확인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공유를 통한 적절한 전략 선택 필요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의 중요도에 대한 관계자 집단별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전문가, 실무자 등 각 집단은 범죄예방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경험이 상이하여 전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경찰 집단은 모든 공간 단위에서 감시 강화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반면, 전문가 집단은 건축물 단위에서의 접근 통제, 블록 단위에서의 유지관리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또한 공무원 집단은 1인 가구 대상 공동체 활동 전략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한 반면, 실무자 집단은 영역성 강화와 활동성 강화 전략의 중요도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단일한 해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각 집단의 전문성과 경험을 반영한 전략 선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의견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로써 지역 특성과 사업 목표에 맞춘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및 사업 설계 시 각 집단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해관계자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은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 집단별 전략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은 해당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

관계자 집단별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의 우선순위 차이는 각 집단이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 다르게 인식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집단이 경험한 범죄 유형, 정책 시행 방식, 그리고 현장에서의 대응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전략의 중요성을 다르게 평가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경찰과 공무원 집단은 주로 범죄 예방 전략이 정책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기 때문에, 예산 및 행정적 제약 하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전문가와 실무자 집단은 해당 전략이 이론이나 학술적으로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하더라도, 실제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간, 예산, 행정절차,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등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며, 정책 시행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 간에 인식 차이가 생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서 각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와 유지관리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각 전략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범죄 예방에 있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요소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감시 강화, 접근 통제, 유지관리 등 상호보완적인 전략들이 각기 다른 공간 단위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들은 각 집단의 인식 차이를 고려하여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협력적 의사결정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제5장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1.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합적 생활안전 관리 전략 마련
2.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사회환경 변화 대응형 범죄예방 전략 마련
3. 지역별 사회적 변화에 고려한 맞춤형 사업 주체 설정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4.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된 주요 사회적 변화 이슈와 3장 제도 및 정책 분석, 4장에서의 우선순위 도출 결과를 종합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을 아래 그림 5-1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1]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 방향 도출 과정  
출처: 연구진 작성

## 1.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합적 생활안전 관리 전략 마련

### □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아우르는 통합적 환경조성 필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단순히 범죄 발생 건수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안전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에서 1인 가구의 증가 및 공동체성의 약화, 지방 도시의 공동화 현상 및 빈집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고, 안전 이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생활안전과 연계한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범죄 예방은 교통, 화재 등 생활안전 측면에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생활안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대응은 범죄율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화재 예방 및 대응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전반의 생활안전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환경 지속성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생활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정교한 관리 및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 사회변화와 생활안전을 반영한 범죄예방 전략의 우선순위 재조정 및 균형적 실행 필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전략이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시강화 전략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감시강화 전략은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한 전략이지만, 접근통제, 활동성 강화 등의 다른 전략들도 균형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장과 4장의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감시강화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전략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사업에서는 감시강화와 명료성, 영역성 강화 전략이 다수 적용되었지만, 접근통제와 활동성 강화 전략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감시

강화 전략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으나, 접근통제와 활동성 강화 전략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매뉴얼과 실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각 전략의 중요도를 고려한 지원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시강화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범죄예방 전략이 종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 지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생활안전까지 고려한 정책적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 1인 가구 밀집 지역 및 지방도시 특성에 맞춘 감시강화와 생활안전 통합 전략의 필요

범죄예방에서 감시강화 전략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지역과 공간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1인 가구가 밀집된 노후 저층주거지나 지방도시의 기성시가지는 그 지역적 특성상 더욱 세밀하고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

1인 가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은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통제 전략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건물 개별 단위에서 접근통제를 강화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자연스러운 감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출입 통제 장치와 지능형 CCTV 시스템을 활용해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물 주변 환경을 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는 감시강화 전략 외에도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강화, 그리고 명료성 강화 전략을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 이 지역은 낙후된 주거환경이 많아 외부인의 불법 침입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주거지 전반에 걸친 활동성을 강화하고, 자연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후 저층 주거지역과 지방도시 기성시가지는 노후된 건축물 및 인프라가 많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는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건물 안전성, 교통안전, 화재 예방 등 생활안전 요소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관리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CCTV와 스마트 센서를 설치하여 범죄와 생활안전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주거 환경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범죄 예방 효과와 생활안전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야 한다. 중앙정부는 범죄예방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스마트 도시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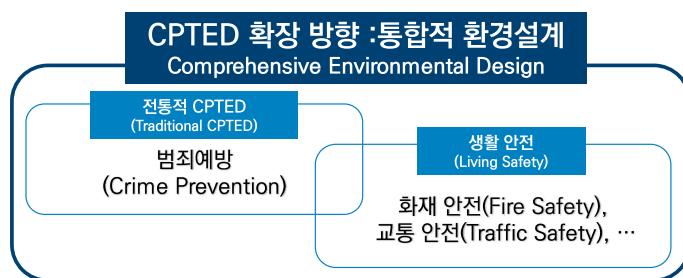
□ 1인 가구 증가 및 지방도시 인구 변화에 따른 공동체성 및 생활안전 요소를 포함한 사업 내용 확장 필요

1인 가구의 증가와 지방도시의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지역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도시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며 노후화된 주거환경에서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어, 물리적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요소를 통해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종합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설문조사에서도 감시강화와 접근통제가 범죄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으나, 동시에 활동성 강화와 공동체 활동 같은 비물리적 요소의 중요성도 확인되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특히 고립감이 범죄 불안감을 증대시키며, 외부와의 교류가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동체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자치경찰과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생활안전과 범죄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비물리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확충 및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주민 참여형 사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 생활안전을 고려한 CPTED 개념의 확장 방향

출처: 연구진 작성

## 2.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사회환경 변화 대응형 범죄 예방 전략 마련

### □ 범죄예방 분야에서의 스마트 기술 활용: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한 효율적 범죄예방 방안 모색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관리 체계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중요한 요소임을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확인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스마트 도시관리를 위한 관련 주체들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며, 법제도가 분산되어 있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서 스마트 도시관리 연계 및 기술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 기술의 중요성은 법적, 정책적 수준에서 언급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체계와 세부 사업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며, 스마트 도시관리와 범죄예방 전략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범죄예방 모델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 스마트 도시와 범죄예방의 통합적 접근: 스마트 도시관리와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종합적 전략 필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도시 관리와 연계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물리적 설계에 그치지 않고, 블록 단위에서 주변 환경과 통합된 설계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관리는 범죄 예방을 넘어 교통 안전, 재난 관리 등 생활안전 전반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스마트 통합 모듈, 센서, IoT 등 최신 기술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범죄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 기술과 전략적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생활안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 □ 스마트 도시와 생활안전의 연계: 스마트 도시 관리와 범죄예방의 통합을 통한 생활안전 향상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의 통합적 접근은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현재 스마트 도시 관리 시스템은 교통, 화재, 재난 등 다양한 생활안전 분야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112 신고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즉각적인 치안 대응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과의 연계가 제한적이다.

스마트 도시관리 시스템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 확장하여 범죄와 생활안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하면,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지표가 향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능형 CCTV, 센서 네트워크, IoT 기술을 활용해 범죄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범죄 예방을 넘어 교통 사고, 화재 등의 생활 안전 이슈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게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 적용하여 지역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스마트 기술 고도화: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 및 기술 연구 개발 필요

스마트 기술을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스마트 CCTV, 스마트 센서, IoT 기술이 일부 사업에 적용되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스마트 기술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고도화가 필요하다.

스마트 기술이 고도화되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도 정교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능형 센서는 단순히 물리적 감시를 넘어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징후를 포착하고 대응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범죄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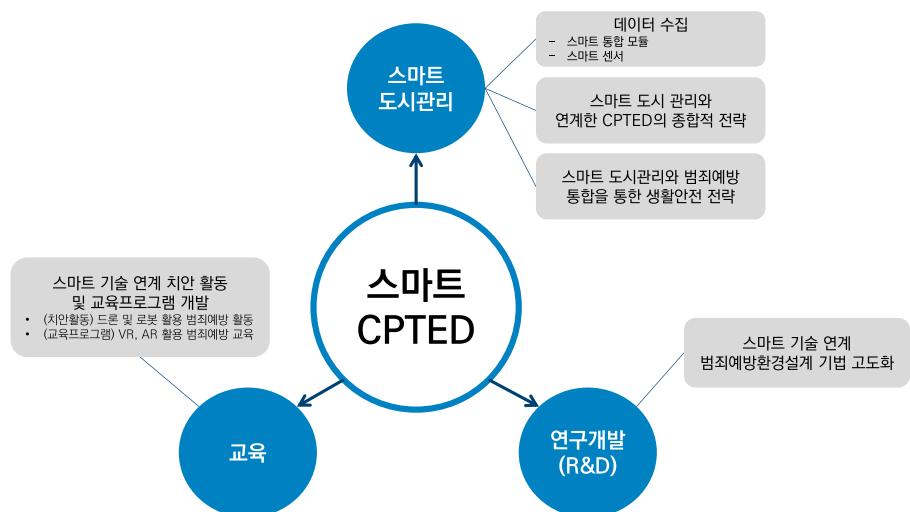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마트 치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생활안전 요소와 통합된 종합적 범죄예방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 스마트 기술 연계 치안 활동 및 교육 개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활동과 치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한 순찰 시스템은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며,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지능형 감시 시스템은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감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을 활용한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상황을 모의하여 경찰 및 방범 요원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방범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효율적 감시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안전 전반에 걸친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3]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사회환경 변화 대응형 범죄예방 전략  
출처: 연구진 작성

### 3. 지역별 사회적 변화에 고려한 맞춤형 사업 주체 설정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역할 강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지역별 여건과 사회적 이슈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인 지방 중소도시와 1인 가구가 집중된 대도시 주거지역은 서로 다른 사회적 변화와 범죄 예방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주로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중앙정부는 「제1차 국가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정책적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의 사회적 변화와 범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기획 및 실행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구조도 강화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내 범죄 취약 지점을 진단하고 방범 시설물을 운영하며, 지역 단위에서 방범 활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주체이다. 중앙정부는 정책적 방향성과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의 변화에 맞는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업 체계 강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경찰, 주민, 지역기관 연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의 협업 체계가 필수적이다.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은 범죄예방이 물리적 공간 설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역 주민, 경찰, 지역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예방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의 연계와 경찰, 지역기관, 주민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아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 이 협의체는 범죄 취약 지점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발적 방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주민 참여는 자율적인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견고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범죄 예방의 주체가 되어 지역 내 방범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또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의 협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광역 지자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기초 지자체는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경찰, 지역 기관,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는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 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 □ 주민참여 확대 및 생활안전 통합적 대응을 통한 자율적 방범체계 구축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서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이다. 주민들이 범죄 예방 활동에 직접 참여할 경우, 자발적 방범 활동이 촉진되며, 지역 내 감시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범죄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민 참여는 자율적 방범체계 구축의 핵심이다. 지역별 방범 순찰대 운영, 취약 지역 감시 활동,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예방 교육은 주민들의 방범 의식을 높이고 범죄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자발적인 감시 체계가 활성화된다.

또한,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은 상호 연계된 문제로, 범죄예방 활동과 생활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교통사고 예방, 화재 대응, 재난 관리 등의 생활안전 문제와 범죄예방 대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 시설과 방범 시설을 통합 설치하고, CCTV와 화재 예방 시스템을 연계 운영하여 범죄와 생활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활안전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 지역의 사회적 변화와 범죄 문제에 맞춘 맞춤형 대응을 통해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동시에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4.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일관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규정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법적 구속력의 부족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와 같은 변화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법적 기반이 강화되지 않으면 예산과 인력 확보는 물론,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 기반이 미비하면 재정적 지원이나 성과 평가,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발성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범죄예방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 경찰, 주민,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지자체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하에 범죄예방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 □ 사회변화에 따른 지자체 주도형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나 지방 도시의 원도심 공동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중앙 정부의 획일적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범죄예방 전략을 유연하게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적 체계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으로, 지역주민들의 범죄 인식과 불안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범죄예방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는 정책적 방향

성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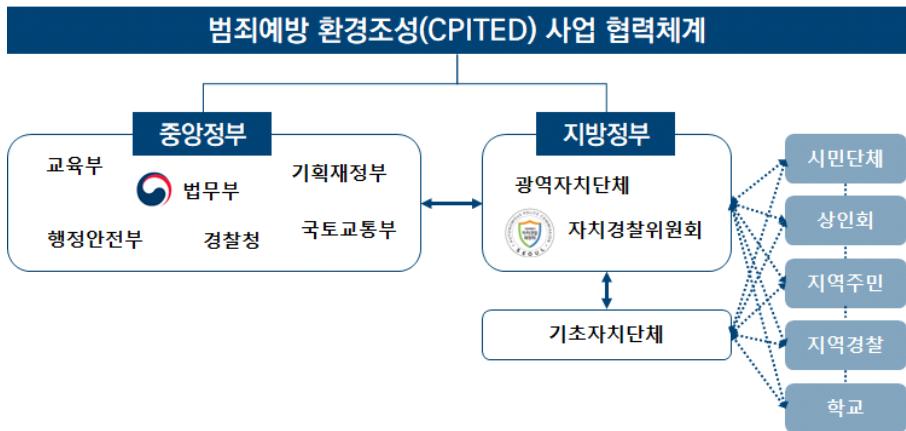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내 범죄 취약 공간을 진단하고, 방범시설 운영과 지역 단위의 방범 활동을 관리하며, 주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각 지역의 사회적 변화에 맞춘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현재 범죄예방환경개선 협의회의 구성은 중앙정부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 없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회 규정을 개선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문제 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지자체는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범 시설과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력 모델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림 5-4]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 범죄예방환경개선 협의회 개선안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5-5]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안

출처: 연구진 작성

#### □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범죄예방·생활안전 통합적 사업체계 구축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분야이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통합적 사업체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나, 1인 가구 증가, 지방 도시의 공동화 등과 같은 변화는 보다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범죄예방 전략은 CCTV 설치나 방범시설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 화재 대응, 재난 관리 등 생활안전과 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죄예방 사업을 생활안전과 결합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위험 예측 시스템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화재 등 다양한 생활안전 이슈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안전을 향상시키고,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지표를 개선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이러한 통합적 사업체계 구축의 중심에 서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통합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

# 제6장 결론

- 
- 1. 연구 요약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 

##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이며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먼저,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경제·사회적 요인, 문화적 변화, 기술 발전, 환경·에너지 변화, 산업 변화 등 6개 주요 분야의 사회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관련 법령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건축·도시공간의 물리적 특성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기존 CPTED 전략과 스마트 도시관리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Q방법론과 AHP를 활용하여 주요 현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발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2장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공동체성 약화,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의 공동화 현상, 빈집 증가 등이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스마트 도시관리와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국한되지 않고 사

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종합적인 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3장에서는 국내외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CPTED 원칙을 기반으로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한 통합적 정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 분석을 통해 기존 법적·제도적 틀을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범죄예방 전략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변화에 대응한 통합적 생활안전 관리 전략**: 범죄예방을 넘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안전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교통, 화재 등 생활안전 측면에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2.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사회환경 변화 대응형 범죄예방 전략**: 지능형 CCTV, IoT 기술 등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3. **지역별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 주체 설정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자체 중심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 주민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4.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으며,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회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체계적 측면(제도 및 정책)과 내용적 측면(사업 및 매뉴얼)에서의 현황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범죄 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범죄예방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지역별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의 한계다. 본 연구는 전국적 차원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다루었으나, 개별 지역의 고유한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범죄 발생 양상과 사회적 변화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지역별 특성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역사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 기술의 실증적 검토 부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한 범죄예방 전략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부족했다. 스마트 CCTV,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잠재력이 크지만, 그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사례 연구가 부족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스마트 기술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한계다. 본 연구는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교통사고, 화재, 재난 등 생활 안전과 범죄예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함께 고려한 정책과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분야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법적·제도적 기반의 한계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구체적인 법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제정 및 개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각 기관 간 협력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주민 참여의 한계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주민들이 범죄예방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춘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이 부족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부족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 스마트 기술의 실증적 적용, 법적 기반 강화 및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고서·논문]

College of Policing. <https://profdev.college.police.uk>(접속일: 2024.01.31.)

Home Office. (2023).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 Anti-social behaviour powers Statutory guidance for frontline professionals.

<http://www.g2b.go.kr:8101/ep/tbid/tbidFwd.do>(검색일: 2024. 01.31)

NPO법인 가나가와현 방범 시큐리티 협회. 가나가와현 보안·아파트 인정 제도 (神奈川県セキュリティ・アパート認定制度) <http://www.sssak.org/index.html>(검색일: 24.02.05.)

NPO법인 도쿄도 시큐리티촉진협력회. 도쿄 방범 우량 입대주택 인정 제도 (東京防犯優良賃貸住宅認定制度) <https://bouhanyc.tosekyo.org/>(검색일: 24.02.07.)

NPSA 홈페이지. <https://www.npsa.gov.uk/security-considerations-assessment-sca> (접속일: 2024.02.01.)

Police.UK. <https://www.police.uk/pu/your-area/?search=1>(접속일: 2024.01.31.)

UK Government (2021). Beating Crime Plan: Fewer victims, peaceful neighbourhood, safe country.

가나가와현 방범 협회 연합회. 가나가와현 방범우량マンション 인정제도 (神奈川県防犯優良マンション認定制度) <http://www.kanagawa-bouhan.jp/>(검색일: 24.02.13.)

강석진. (2023). K-CPTED로의 발전 방향. 건축과 도시공간, 50(Summer). 건축공간연구원. 6-13.

경기도. (2020).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경기도.

경상남도. (2019).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보고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2021).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경상북도

경찰청(2023). '22년 지자체 셀티드 관련 조례 현황. 경찰청

- 경찰청. (2005).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경찰청.
- 광주광역시. (2015).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 국토교통부. (2021).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2021-2025).
- 김원. (2020). 빅데이터 처리 기반의 범죄 예방 스마트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1), 75-80.
- 김원종. (2020). 1인 가구와 범죄. *법경제학연구*, 17(1), 137-160.
- 김영현, 이여경, 아주경, 백선경, 윤호선. (2022).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나라장터 입찰정보 검색.
- 대구광역시. (2014).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2020).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대전광역시.
- 대한민국 대통령실. (2022). 120대 국정과제.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kurashi/anzen/anshin/yuryo\\_seido.html](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kurashi/anzen/anshin/yuryo_seido.html)(검색일: 24.01.31.)
- 도쿄방범협회연합회. 도쿄방범우량맨션·주차장 등록제도.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kurashi/anzen/anshin/yuryo\\_seido.html](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kurashi/anzen/anshin/yuryo_seido.html)(검색일: 24.01.26.)
- 박한솔, & 성종상. (2019). Q 방법론을 이용한 일본식 건물군의 근대문화유산 가치에 관한 인식 연구-서울시 후암동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7(6), 115-128.
- 박형민, 서주연. (2015).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 박형민, 조성현, 김선희. (2016).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I):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 박형민, 황지태, 황정인, 황의갑, 박경돈. (2009).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2.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 (2023).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법무부
- 부산광역시. (2013). 부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부산광역시.
-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 서민진, 강석진. (2023). 공간회귀분석을 통한 여대생 밀집지역의 노상범죄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43(2), 232-235.
- 서울특별시. (2013). 주민중심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2019).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세종특별자치시.
- 손동필, 성은영, 임보영, 허재석. (2022).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법무부.
- 손동필, 유광흠, 조영진, 현태환, 박유나. (2017). 도농복합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건축공간연구원*
- 손동필, 유광흠, 조영진, 현태환, 박유나. (2018). 대도시 쇠퇴상업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건축공간연구원*

- 손동필, 유광흠, 조영진, 현태환, 박유나.(2018). 공장밀집지역 배후 주거지의 범죄예방환경 설계 가이드라인. 건축공간연구원
- 손동필, 임보영, 허재석. (2022). 어촌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건축공간연구원.
- 손동필, 현태환, 박유나. (2020). 1인가구 밀집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건축공간연구원.
- 손동필, 현태환, 박유나. (2021). 노상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건축공간연구원.
-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2022). 체감안전도. [https://www.bigdata-policing.kr/product/view?product\\_id=PRDT\\_15](https://www.bigdata-policing.kr/product/view?product_id=PRDT_15)(검색일: 2024.5.3.)
-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2022). 신고 빈발지 데이터. [https://www.bigdata-policing.kr/product/view?product\\_id=PRDT\\_500](https://www.bigdata-policing.kr/product/view?product_id=PRDT_500)(검색일: 2024.5.3.)
- 시가현 방범설비사 협회. 방범 우량 단독주택 인정 제도 (防犯優良戸建住宅認定制度) <https://www.shiga-csse.org/>(검색일: 24.02.08.)
- 신의기, 박경래, 정영오, 김결, 박현호, 흥경구. (200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아이치현 주택 방범 협의회. 아이치현 방범 주택 인정제도 (防犯住宅認定制度) <http://aichibouhan.com/>(검색일: 24.02.05.)
- 안이수. (2020). 대구광역시 이미지에 관한 유형화 연구. 대구경북연구, 19(3), 25-43.
- 아마나시현 방범설비사업회. 아마나시현 방범우량 공동주택 인정제도 (山梨県防犯優良共同住宅認定規定) <https://www.pref.yamanashi.jp/index.html>(검색일: 24.01.30.)
- 염윤호. (2020). 공간패널모형을 활용한 절도 및 폭력범죄와 사회구조적 변인 간의 관계 분석. 형사정책연구, 31(3), 201-232.
-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접속일: 2024.01.31.)
- 오사카부 방범협회 연합회. 오사카부 방범 모델 주차장 등록제도 (大阪府防犯モデル駐車場登録制度) <https://daibouren.jp/>(검색일: 24.02.05.)
- 오사카부 방범협회 연합회. 오사카부 방범모델 맨션 등록제도 (大阪府防犯モデルマンション登録制度) <https://daibouren.jp/>(검색일: 24.02.05.)
- 오세연, 김학범. (2021).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시기에 따른 분기별 범죄특성 비교분석.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7(4), 674-683.
- 울산광역시. (2013). 울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설계 적용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 유광흠, 조영진, 강석진, 김상문, 이경훈, 김철중, 손동필, & 양선순. (2014).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기수. (2021). 코로나 19 시기 범죄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23(1), 167-187.
- 이길제, 김지혜, 이재춘, 조윤지. (2022).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방향. 국토정책 Brief. No.886. 국토연구원. p.2.
- 이정민, 강태임. (2023). 스마트조명시스템 기반 범죄예방 디자인 방안 연구-금남로 공원 개선사례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9(4), 337-349.

- 이지현, 한기성, 이경훈. (2022). 성별에 따른 저층 주거지역 가로환경요소의 범죄두려움 연구. *한국 셉테드학회지*, 13(2), 39-72.
- 이형복. (2011). CPTED를 통한 대전의 범죄예방 정책방안II –주거지역 및 초등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대전발전연구원*.
- 이형복. (2020).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 인천광역시. (2013).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인천광역시*.
- 일본 가나가와현. 가나가와현 범죄없는 안전·안심 마을 조성 추진 조례 (神奈川県犯罪のない安全・安心ちづくり推進条例).
- 일본 건축기본법 (建築基準法), 일본 국회(법률), 제1장 제12조
- 일본 건축기본법 (建築基準法), 일본 국회(법률), 제1장 제13조
- 일본 건축기본법 (建築基準法), 일본 국회(법률), 제1장 제15조
- 일본 건축기본법 (建築基準法), 일본 국회(법률), 제1장 제18조
- 일본 건축기본법 (建築基準法), 일본 국회(법률), 제1장 제19조
- 일본 건축기본법 (建築基準法), 일본 국회(법률), 제1장 제8조
- 일본 경찰청(警察庁). (2014). 「安全・安心まちづくり推進要綱」の改正について (通達)
- 일본 경찰청(警察庁),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2018). 安全で安心まちづくり.
- 일본 공동주택에 관련된 방범상의 유의사항 (共同住宅に係る防犯上の留意事項), 일본 경찰청.
- 일본 공영주택 등의 정비기준(公営住宅等の基準),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업법.
- 일본 교토부. 교토부 범죄가 없는 안심·안전한 마을 만들기 조례의 개요 (京都府犯罪のない安心・安全なまちづくり条例の概要).
- 일본 도로, 공원, 주차장·주륜장 등 및 공중 변소에 관한 방범기준 (道路、公園、駐車・駐輪場等及び公衆便所に係る防犯基準), 일본 경찰청.
- 일본 도로, 공원, 주차장·주륜장 등의 정비·관리에 관련된 방범상의 유의 사항 (道路、公園、駐車場・駐輪場等の整備・管理に係る防犯上の留意事項), 일본 경찰청.
- 일본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국회(법률), 제1장 제11조
- 일본 도쿄도. 도쿄도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 (東京都安全安心まちづくり条例).
- 일본 미야기현. 범죄없는 미야기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 (犯罪のないみやぎ安全・安心まちづくり条例).
- 일본 방범을 배려한 공동주택 설계지침, 일본 국토교통성.
- 일본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 범죄없는 안전·안심 마을 조성 추진 조례 (青森県犯罪のない安全・安心まちづくり推進条例).
- 일본 아이치현. 아이치현 안전한 마을 만들기 조례 (愛知県安全なまちづくり条例).
- 일본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추진 요강 (安全・安心まちづくりの推進について), 일본 경찰청.
- 일본 야마나시현. 야마나시현 안전·안심 지역개발 조례 (山梨県安全・安心なまちづくり条例).

일본 장기우량 주택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長期優良住宅の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국회  
(법률) 제 1장 제2조

일본 장기우량 주택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長期優良住宅の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국회  
(법률), 제 4장 제18조

일본 학교 안전의 확보를 향한 대책에 대한 지원 등의 추진 (学校安全の確保に向けた対策に対する支  
援等の推進について), 일본 경찰청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현 안전·안심 마을 조성 조례 (福岡県安全・安心まちづくり条例).

일본 히로시마현, 히로시마 안전한 도시 조성 추진 조례 (ひろしま安全なまちづくり推進条例).

일본방범설비협회, 방범우량맨션 표준 인정 기준 (防犯優良マンション標準認定基準).  
[https://www.npa.go.jp/safetylife/seianki26/theme\\_c/c\\_b\\_1.html](https://www.npa.go.jp/safetylife/seianki26/theme_c/c_b_1.html)(검색일: 24.01.26.)

일본방범설비협회, 우량 방범 기기 인정 제도 (優良防犯機器認定制) <https://www.ssaj.or.jp/rbss/index.html>(검색일: 24.01.26.)

임보영, 허재석. (2023).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함께 만드는 K-CPTED 실증 방안. 건축  
과 도시공간, 50(Summer). 건축공간연구원, 28-35.

장리브가, 윤철재. (2022). 일본의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보급과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셉테드학  
회지, 13(3), 161-184.

장현석. (2022). 외국인 비율이 동단위 범죄수준에 미치는 영향\_GIS를 이용한 공간화구분석. 치안정  
책연구, 36(3), 107-148.

정상필, 김진우. (2022). 지방자치단체 범죄예방환경 설계 가이드라인분석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  
심으로. 한국셉테드학회지, 13(2), 69-116.

정진도. (2023). 골목길 특성 및 지역 낙인 효과를 고려한 서울시 도시 범죄 영향 요인 연구 - 112 신  
고 데이터 및 서울시 골목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마이크로 스케일 영향 연구. 한국도시설  
계학회지 도시설계, 24(5), 19-36.

제주특별자치도. (2018).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조영진, 김용국. (2016).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에 관한 연구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범죄안  
전 평기방법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조영진, 임보영, 최창성, 허재석, 강석진, 오하늘. (2023).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 추진 단  
계별 표준 매뉴얼 개발 용역. 법무부.

조영진, 한수경, 현태환, 박유나. (2019).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 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 건축공간연구원.

조영진, 한수경, 현태환, 박유나, 유혜정,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2018).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건축공간연구  
원, 경찰청

최우철, 나준엽, 이상경. (2023). 고밀형 저층주거지 범죄예방을 위한 지능형 CPTED 기술요  
소 선정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 9(2), 71-98.

최소영, 양현모, 박해련, 권태우, 유철, 김지홍. (2023). 국토교통 2050 미래기술 전략로드맵수립. 국  
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충청남도 (2015). 충청남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 충청북도 (2019).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충청북도
- 통계청. (2023).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발생 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37A&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2\\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37A&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2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자 국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78&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3\\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78&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3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자 연령.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29&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3\\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29&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3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경찰청 범죄통계 분석. 범죄발생 장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vw\\_cd=MT\\_ZTITLE&list\\_id=132\\_132\\_04\\_GKIT659\\_gik986\\_di65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vw_cd=MT_ZTITLE&list_id=132_132_04_GKIT659_gik986_di65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 홍영오, 박준희, 금현섭, 박성민, 김빛나. (2017).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II):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 황종아, 강지연. (2021). 범죄발생 위험지역의 공간분포와 도시쇠퇴 특성과의 관계-GIS 기반 공간통계기법을 통한 범죄발생 위험지표를 중심으로. KIEAE Journal, 21(6), 87-94.
- 후쿠오카현 방범설비사업회. 후쿠오카현 보안·맨션·아파트 인정 제도(セキュリティ・マンション・アパート認定制度) <http://www.fukuoka-bosetsukyo.jp/>(검색일: 24.01.26.)
- APCC (2012). Police and Crime Plans Guidance and Practice Advice.
- Brown, J. (2021). Policing in the UK. House of Commons Library
- Christmas, H. and Srivastava, J. (2018). Public health approaches in policing\_A discussion paper. Public Health England.
- College of Policing (2021). Policing and health collaboration: Landscape review 2021
- HM Government (2023). Anti-Social Behaviour Action Plan
- Home Office (2020). Violence Reduction Unit Interim Guidance.
- Home Office (2021). Safer Streets Fund (2021–2022) Prospectus
- Home Office (2022). Safer Streets Fund Round Four\_Protecting Public Spaces Prospectus
- Home Office (2023).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 Anti-social behaviour powers Statutory guidance for frontline professionals
- Home Office (2023). The Strategic Policing Requirement

NPCC (2018). Policing, Health and Social Care consensus: working together to protect and prevent harm to vulnerable people

NPCC, APCC and College of Policing (2016). Policing Vision 2025.

NPCC, APCC and College of Policing (2023). Policing Vision 2030.

Secured by Design (2023). Secured by Design Homes

UK Government (2021). Beating Crime Plan: Fewer victims, peaceful neighbourhood, safe country

### [법령·고시]

건축법 제18935호. 제53조

건축법 시행령 제33717호. 제63조의6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33621호. 제5조제3항의2제3호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117호. 제19조제1항제8호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32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099호. 제9조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174호. 제52조제1항제5호

도시재생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893호. 제9조제13항의2, 제30조의3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021-930호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9234호. 제6조제3호, 제24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7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5조제5항, 제30조제1항제5호, 제37조제3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제2호

주택법 법률 제19839호. 제49조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176호. 제28조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79호. 제6조제1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19117호.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초중등교육법 제19738호. 제30조의8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조제5항, 제8조제9항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제2조, 제3조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3조제8항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장, 제33조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7항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1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장,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제1조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제1조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8조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7조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9조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8조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44조  
부산광역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14조, 제21조  
대구광역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5조의2제1항, 제14조, 제29조  
인천광역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2조

광주광역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13조, 제22조  
대전광역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3조  
울산광역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14조, 제21조  
경기도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 제21조  
충청북도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5조의2제1항, 제21조  
충청남도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 제21조  
전북특별자치도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 제21조  
전라남도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 제21조  
경상북도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5조의2제1항, 제21조  
경상남도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 제21조  
강원특별자치도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5조의2제1항,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 제21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

# Enhancing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trategies for Adapting to Social Changes

SUMMARY

Her, Jaeseok  
Ko, Youngho  
Kim, Youngwoo  
Im, Boyeong  
Moon, Boram

---

This study aims to propose strategic directions for improving Korea's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CPTED) projects to effectively respond to evolving social dynamics. By integrating social change factors into crime prevention strategies, this research provides actionable insights for creating safer and more resilient communities.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six key social change dimensions—demographic shifts, economic and social changes, cultural transformations, technological advancements, environmental and energy trends, and industrial transitions—on crime incidence and urban safety. A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policies identifies gaps in Korea's existing frameworks, particularly in addressing the need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ging populations, and city center decline. Current CPTED strategies often focus on physical infrastructure improvements, such as CCTV installation and lighting enhancements, while failing to adequately address broader social and community factors. Using Q-methodology and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priority areas for improvement were identified, emphasizing tailored

responses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takeholder needs.

Key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ombines technology, community engagement, and systemic policy improvements, moving beyond physical security measures. Challenges such as the ri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community disintegration, and urban hollowing underscore the necessity of flexible, region-specific strategies. Incorporating smart city management tools—such as intelligent CCTVs and IoT-based systems—was emphasized as critical for real-time crime monitoring and preven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four core recommendations:

- 1. Integrated Living Safety Management:** Develop holistic strategies combining crime prevention with daily safety measures, including traffic and fire safety, supported by smart technologies.
- 2. Smart City Integration:** Leverage advanced technologies for proactive and real-time crime monitoring systems, enhancing long-term prevention.
- 3. Customized Local Strategies and Collaboration:** Strengthen regional governance by empowering local governments and fostering collaboration among police, residents, and stakeholders to develop locally tailored strategies.
- 4. Strengthened Institutional Frameworks:** Enhanc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sustainable and adaptable crime prevention initiatives, with cooperative framework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provides a forward-looking framework that emphasizes sustainability, community engagement, and advanced technologies to guide policymakers in addressing evolving safety challenges.

**Keywords :**

Social Change, Crime Preventio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Projects, Public Safety, Life Safety

1. 검찰청 및 경찰청 범죄통계자료 분석
2. 지역유형별 신고빈발지 및 체감안전도 자료 분석
3.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관계자 의견조사 설문조사지
4. Q 방법론 분석 결과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체계 및 기술 관련 관계자 인식조사 분석 결과)

## 1. 검찰청 및 경찰청 범죄통계자료 분석

### □ 시간대별 재물 및 감정 범죄 발생 건수

검찰청 통계분석 자료는 2014년부터 시간대를 3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범죄 발생 건수를 집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를 두 가지 시간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간대는 비교적 사람들의 활동이 많은 일출부터 일몰 이전까지의 주간(06:00~17:59) 시간대이며, 두 번째 시간대는 시야 확보 시 인공조명에 의존적이며,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일몰 이후의 야간 시간대(18:00~05:59)이다.

- 주간(06:00~17:59) 재물 및 감정 범죄 발생 건수

주간의 재물 및 감정 범죄의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재물 범죄는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증가 추세이다. 감정 범죄는 재물 범죄와 반대 추세를 보이며, 2014년도부터 2019까지 증가 및 유지를 하다가 2020년도부터 감소하였다. 2020년도는 팬데믹 시기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 빈도가 크게 줄어들어 감정 범죄 발생 건수의 변화 역시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간 재물 및 감정 범죄의 발생 건수의 증감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범죄의 경향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재물범죄는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평균 증감률은 -1.94%인 반면 최근 4개년도(2019~2022년도)의 평균 증감률은 2.04%로 최근 재물 범죄의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시에서 18시 사이의 재

물 범죄 발생 건수의 최근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감정 범죄는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평균 증감률은 0.32%이며, 최근 평균 증감률은 -3.52%로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다. 감정 범죄 중 오전 06시에서 09시 사이의 발생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며 최근 감소율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 주간(06:00~17:59) 재물 및 감정 범죄 시간대별 발생 건수

	재물 범죄						감정 범죄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계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계	
2014	18,004	29,173	31,023	34,794	112,994	14,662	18,136	18,175	23,280	74,253		
2015	16,663	26,457	29,553	32,719	105,392	16,211	19,997	19,944	25,150	81,302		
2016	13,960	23,059	26,507	28,656	92,182	17,011	20,736	20,856	25,433	84,036		
2017	12,560	21,603	24,700	26,980	85,843	16,838	20,811	20,772	25,285	83,706		
2018	12,532	20,748	24,646	26,739	84,665	16,062	20,776	21,056	25,480	83,374		
2019	13,149	21,829	27,317	28,654	90,949	15,946	20,800	21,973	26,104	84,823		
2020	12,427	21,422	26,810	28,721	89,380	13,846	19,190	20,668	24,836	78,540		
2021	12,053	21,521	26,247	27,602	87,423	10,400	18,010	20,186	23,900	72,496		
2022	13,522	23,590	28,563	30,956	96,631	12,012	18,688	20,858	24,627	76,185		
'14-'22 평균 증감률	-3.52	-2.62	-1.03	-1.45	-1.94	-2.46	0.38	1.74	0.71	0.32		
'19-'22 평균 증감률	0.94	2.62	1.50	2.61	2.04	-9.01	-3.51	-1.72	-1.92	-3.52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발생 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37A&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2\\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37A&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2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 • 야간(18:00~05:59) 재물 및 감정 범죄 건수

야간 시간대의 재물 및 감정 범죄는 주간 시간대와 달리 두 범죄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두 범죄 모두 2021년도에 비해 2022년도의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간 시간대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며 팬데믹 이후 일상 활동이 회복되는 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야간 재물의 건수 증감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물범죄의 발생 건수 평균 증감률은 -6.86%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증감률은 -3.70%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그 감소 폭이 감소하였다. 최근 재물 범죄의 발생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대는 자정 이후인 00시부터 일출 직전인 06시 이전까지로 00시부터 03시 이전까지는 -7.94%, 03시부터 06시 이전까지는 -6.33%로 나타났다.

야간 시간대 감정 범죄 발생 건수는 재물 범죄와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이나, 최근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야간 시간대 감정 범죄의 발생 건수 평균 증감률은 -3.32%이며, 최근 4개년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증감률은 -6.50%이었다. 감정 범죄의 감소 폭이 가장 큰 시간대는 재물 범죄와 동일하게 정오부터 일출 직전까지의 시간대로 나타났다.

#### 야간(18:00 ~ 05:59) 재물 및 감정 범죄 발생 건수

	재물 범죄						감정 범죄					
	18:00 -20:59	21:00 -23:59	00:00 -2:59	03:00 -05:59	계		18:00 -20:59	21:00 -23:59	00:00 -2:59	03:00 -05:59	계	
2014	40,464	35,219	21,816	21,492	118,991	42,410	68,026	38,447	31,174	180,057		
2015	35,891	30,734	19,823	19,806	106,254	44,363	70,695	39,679	32,779	187,516		
2016	29,583	25,263	15,663	16,027	86,536	45,086	71,214	40,665	33,233	190,198		
2017	26,708	22,271	13,886	14,524	77,369	43,077	67,025	37,993	32,622	180,717		
2018	25,744	20,059	12,691	13,851	72,345	42,398	63,006	35,051	30,500	170,955		
2019	27,310	20,675	13,193	14,298	75,476	42,437	61,824	33,961	29,914	168,136		
2020	25,842	19,335	11,858	13,754	70,789	40,804	56,044	29,454	25,605	151,907		
2021	24,219	18,000	9,396	10,664	62,279	40,735	57,772	18,187	13,502	130,196		
2022	26,411	18,957	10,295	11,750	67,413	39,478	57,021	23,152	17,768	137,419		
'14-'22 평균증감률	-5.19	-7.45	-8.96	-7.27	-6.86	-0.89	-2.18	-6.14	-6.79	-3.32		
'19-'22 평균증감률	-1.11	-2.85	-7.94	-6.33	-3.70	-2.38	-2.66	-11.99	-15.94	-6.50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발생 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37A&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2\\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37A&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2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 □ 장소별 재물 및 감정 범죄 발생 건수

장소별 재물 및 감정 범죄 발생 건수

	재물 범죄					감정 범죄				
	주거 시설	상업 시설	유통 및 숙박시설	야외 주차장	공공 공간	주거 시설	상업 시설	유통 및 숙박시설	야외 주차장	공공 공간
2014	34,168	25,836	20,878	65,806	7,205	37,259	7,200	31,970	127,310	5,105
2015	26,847	25,064	17,729	60,075	7,758	44,803	6,586	27,924	126,370	4,914
2016	22,188	24,647	16,290	52,325	5,169	45,460	6,613	27,555	126,407	5,288
2017	16,248	22,028	13,675	47,669	4,772	42,141	6,429	28,301	123,093	5,836
2018	23,218	33,804	21,832	53,920	8,193	68,576	12,145	48,127	128,794	9,898
2019	25,987	38,712	21,971	60,895	7,546	76,545	11,969	48,085	126,854	9,885
2020	27,024	38,687	17,090	62,836	6,727	72,361	11,182	41,839	116,593	8,473
2021	25,142	40,645	9,856	61,403	5,115	73,656	9,675	26,954	99,796	7,859
2022	25,421	46,060	11,151	67,624	5,409	70,642	10,179	33,620	105,528	8,457
'14-'22 평균 증감률	-3.63	7.49	-7.54	0.34	-3.52	8.33	4.42	0.63	-2.32	6.51
'19-'22 평균 증감률	-0.73	5.96	-20.23	3.56	-10.50	-2.64	-5.26	-11.24	-5.95	-5.07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경찰청 범죄통계, 범죄 발생장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sv\\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gik986\\_di65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sv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gik986_di65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경찰청 범죄통계자료는 대검찰청 범죄통계분석 자료보다 장소가 상세하게 분류되어 장소별 범죄 발생 건수 자료는 경찰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장소는 주거시설(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시설(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할인매장, 상점, 시장 및 노점), 유통 및 숙박시설(유통점객업소, 숙박업소 및 목욕탕), 야외공간 및 주차장(노상, 유원지, 산야, 주차장), 공공공간(역, 대합실, 지하철, 기타교통수단 내, 공중화장실)이며, 공간 및 시설에서 연도별 범죄 발생 건수를 종합한 표는 아래와 같다(표2-9).

재물 범죄는 주거시설에서 감소 추세로 나타났으며, 감소 폭이 최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물 범죄가 감소 추세인 공간은 유통 및 숙박시설, 공공공간으로 나타났으며, 두

공간 및 시설에서 최근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상업시설과 야외공간 및 주차장에서는 재물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 최근 야외공간 및 주차장의 증가 폭이 늘어났다. 한편 감정 범죄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유통 및 숙박시설, 공공공간의 4가지 공간에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 추세이며, 야외 및 주차장 공간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모든 공간에서 감정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로 변화하였다.

- 주거시설 재물 및 감정 범죄 발생 건수

#### 주거시설 재물 및 감정 범죄 발생 건수

	재물 범죄			감정 범죄					감정 전체
	공동주택		단독주택		재물 전체		공동주택		
	범죄 건수(A)	비율(%) (A/C)	범죄 건수(B)	비율(%) (B/C)	범죄 건수(C)	비율(%) (D/F)	범죄 건수(E)	비율(%) (E/F)	범죄 건수(F)
2014	14,471	5.40	19,697	7.35	267,808	19,045	6.10	18,214	5.84 312,047
2015	11,139	4.50	15,708	6.35	247,299	23,262	7.09	21,541	6.56 328,162
2016	8,848	4.33	13,340	6.53	204,186	24,537	7.38	20,923	6.29 332,508
2017	7,118	3.85	9,130	4.94	184,724	23,652	7.44	18,489	5.81 318,021
2018	11,593	6.53	11,625	6.54	177,630	39,599	12.70	28,977	9.29 311,886
2019	14,450	7.70	11,537	6.14	187,755	46,313	14.83	30,232	9.68 312,229
2020	16,774	9.31	10,250	5.69	180,180	44,716	15.52	27,645	9.59 288,209
2021	16,560	9.92	8,582	5.14	166,904	46,896	18.49	26,760	10.55 253,596
2022	17,258	9.44	8,163	4.47	182,786	45,341	16.89	25,301	9.42 268,491
'14-'22 평균증감률	2.23	7.23	-10.43	-6.05	-4.66	11.45	13.57	4.19	6.17 -1.86
'19-'22 평균증감률	6.10	7.05	-10.89	-10.09	-0.89	-0.70	4.42	-5.76	-0.90 -4.91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경찰청 범죄통계, 범죄 발생장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sv\\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gik986\\_di65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sv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gik986_di65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재물 범죄와 감정 범죄 모두 감소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른 양상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물 범죄는 최근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며, 감정 범죄는 최근 증가 폭이 감소하였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재물 범죄는 지속해서 감소하였으

나, 감정 범죄의 발생 건수는 2019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 추세로 변화하였다.

주거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공동주택 발생하는 재물범죄는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추세로 변화하였으며 최근 그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범죄발생 장소 중 주택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에서의 재물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2014년 19,697건으로 공동주택보다 5천 건 이상 재물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2022년 8,163건으로 연평균 10%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감정 범죄는 최근 증감률이 -0.70%로 증감의 변화가 크지 않으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11.45%로 꾸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체 범죄 건수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감정 범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의 범죄 취약성은 매우 컸다. 단독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감정 범죄 역시 최근 감소 추세이나 2014년에 비해 2022년도의 발생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주거시설 재물 및 감정범죄 발생 건수

	재물 범죄				감정 범죄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범죄발생 건수	주택호수 대비 범죄 발생 비*	범죄발생 건수	주택호수 대비 범죄 발생 비*	범죄발생 건수	주택호수 대비 범죄 발생 비*	범죄발생 건수	주택호수 대비 범죄 발생 비*
2014	14,471	0.154	19,697	0.110	19,045	0.163	18,214	0.099
2019	14,450	0.379	11,537	0.135	46,313	0.462	30,232	0.157
2022	17,258	0.469	8,163	0.117	45,341	0.571	25,301	0.149
'14-'22 평균 증감률	2.23	41.91	-10.43	0.74	11.45	16.97	4.19	5.29
'19-'22 평균 증감률	6.10	7.37	-10.89	-4.71	-0.70	7.28	-5.76	-1.74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경찰청 범죄통계, 범죄 발생장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vw\\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gik986\\_di65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vw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gik986_di65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검색일: 24.05.10.)

\*주택호수 대비 범죄발생 비 : 해당 주택 유형에서 발생한 범죄 비율 / 전체 주택에서 해당 주택 유형의 비율

주1. 주택 유형의 비율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6년 이전에는 주거실태조사가 2년 주기로 조사되어 2015년 자료가 부재함에 따라 2014년과 2016년의 평균치를 활용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거시설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율이 증가한 영향도 있을 수 있어 주택 호수 대비 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재물 범죄와 감정 범죄 모두 공동주택 호수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

으며, 단독주택 역시 최근 감소 추세이나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증감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은 주택 호수의 증감과 관련 없이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장소로서 범죄예방 노력이 더욱 필요한 공간으로 나타났다.

- 상업시설 재물·감정 범죄 발생 건수

상업시설 재물 및 감정범죄 발생 건수

	재물 범죄						감정 범죄						
	백화점 마켓	슈퍼 마켓	편의점	대형 할인 매장	상점, 노점	시장, 노점	상업/ 재물 전체 (%)						
								백화점 마켓	슈퍼 마켓	편의점	대형 할인 매장	상점, 노점	상업/ 감정 전체 (%)
2014	1,88	4,74	4,73	1,97	9,56	3,03	9.65	148	664	1,784	106	2,777	1,721 2.31
2015	1,929	5,091	4,508	2,173	8,881	2,482	10.14	142	607	1,706	77	2,533	1,521 2.01
2016	1,991	4,913	4,236	2,105	9,085	2,317	12.07	123	580	1,838	79	2,610	1,383 1.99
2017	1,816	4,585	4,243	1,768	7,808	1,808	11.92	167	556	1,837	93	2,399	1,377 2.02
2018	2,600	6,295	5,251	2,416	13,142	4,100	19.03	248	1,059	2,794	182	4,324	3,538 3.89
2019	3,187	7,683	5,926	2,686	14,535	4,685	20.62	219	990	2,733	202	4,228	3,597 3.83
2020	2,696	9,290	6,012	3,066	13,657	3,966	21.47	197	1,032	2,661	170	4,041	3,081 3.88
2021	2,144	9,930	6,182	3,353	15,063	3,973	24.35	146	929	2,304	160	3,568	2,568 3.82
2022	2,274	11,715	7,026	3,537	17,577	3,981	25.20	216	857	2,448	160	3,952	2,546 3.79
'14-'22 평균증감률	2.77	11.96	5.06	7.61	7.92	3.40	12.75	4.84	3.24	4.03	5.28	4.51	5.02 6.40
'19-'22 평균증감률	-10.64	15.10	5.84	9.47	6.54	-5.68	6.92	-0.46	-4.70	-3.60	-7.48	-2.23	-10.88 -0.37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경찰청 범죄통계, 범죄 발생장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vw\\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gik986\\_di654&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vw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gik986_di654&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주로 재물 범죄로 전체 범죄 중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물 범죄의 비율은 2014년 9.65%에서 2022년 25.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정 범죄는 전체 범죄 중 차지하는 비율이 3% 내외로 크지 않았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다 최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상업시설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이 모두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시장은 재물, 감정 범죄 모두 최근 감소 추세로 변화하였다.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할인매장, 상점에서 재물 범죄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감정 범죄는 계속 증가하다 최근 감소 추세로 변화하였다.

- 유흥 및 숙박시설 재물·감정 범죄 발생 건수

#### 유흥·숙박시설 재물 및 감정 범죄 발생 건수

	재물 범죄		감정 범죄			
	유흥접객업소 목욕탕	숙박업소, 목욕탕	유흥·숙박시설/ 재물 전체 (%)	유흥접객업소 목욕탕	숙박업소, 목욕탕	유흥·숙박시설/ 감정 전체(%)
2014	14,053	6,825	2.55%	26,795	5,175	1.66%
2015	12,455	5,274	2.13%	23,265	4,659	1.42%
2016	11,813	4,477	2.19%	23,037	4,518	1.36%
2017	10,046	3,629	1.96%	23,599	4,702	1.48%
2018	15,499	6,333	3.57%	40,210	7,917	2.54%
2019	15,752	6,219	3.31%	40,146	7,939	2.54%
2020	12,702	4,388	2.44%	34,503	7,336	2.55%
2021	7,143	2,713	1.63%	18,925	8,029	3.17%
2022	8,365	2,786	1.52%	25,893	7,727	2.88%
'14-'22 평균증감률	-6.28	-10.60	-6.22	-0.43	5.14	7.13
'19-'22 평균증감률	-23.48	-19.02	-0.90	-13.60	4.21	4.21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경찰청 범죄통계, 범죄 발생장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vw\\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gik986\\_di65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vw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gik986_di65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유흥 및 숙박시설은 유흥접객업소와 숙박업소 및 목욕탕으로 구분된다. 유흥 및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물 범죄는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전체 범죄 중 유흥 및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재물 범죄의 비율은 3.57%이었으나, 2022년 1.52%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물 범죄 발생건수의 연평균 증감율은 유흥접객업소에서 -23.48%, 숙박업소 및 목욕탕에서 -19.02%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흥 및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정 범죄는 유흥접객업소와 숙박업소 및 목욕탕이

다른 추세로 변화하였다. 유흥점업체에서 발생하는 감정 범죄는 재물 범죄와 유사하게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하였으며, 최근 그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숙박업소 및 목욕탕은 감정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로 나타났으며, 최근까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감정 범죄로부터 취약한 장소로 나타났다.

- 야외공간 및 주차장 재물·감정 범죄 발생 건수

야외공간, 주차장 재물 및 감정 범죄 발생 건수

	재물 범죄					감정 범죄				
	노상	유원지	산야	주차장	야외 주차장/ 재물전체 (%)	노상	유원지	산야	주차장	야외 주차장/ 감정전체 (%)
2014	49,950	1,639	2,709	11,508	24.57	113,417	2,539	1,666	9,688	40.80
2015	45,715	1,469	2,534	10,357	24.29	112,770	2,521	1,675	9,404	38.51
2016	39,694	1,308	2,344	8,979	25.63	112,835	2,361	1,684	9,527	38.02
2017	37,059	1,192	2,283	7,135	25.81	109,713	2,194	1,605	9,581	38.71
2018	40,204	1,919	2,766	9,031	30.36	112,768	2,498	1,762	11,766	41.30
2019	45,760	2,059	3,271	9,805	32.43	110,205	2,583	1,910	12,156	40.63
2020	47,025	1,591	3,540	10,680	34.87	100,130	2,097	1,995	12,371	40.45
2021	46,488	1,496	3,518	9,901	36.79	84,363	2,056	2,008	11,369	39.35
2022	52,086	1,771	3,365	10,402	37.70	90,099	2,121	1,918	11,390	39.30
'14-'22 평균증감률	0.52	0.97	2.75	-1.26	5.25	-2.84	-2.22	1.78	2.04	-0.47
'19-'22 평균증감률	4.41	-4.90	0.95	1.99	4.49	-6.49	-6.36	0.14	-2.15	-1.10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경찰청 범죄통계, 범죄 발생장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wv\\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gik986\\_di65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wv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gik986_di65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노상, 유원지, 산야 등 야외공간과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재물 및 감정 범죄를 살펴보면, 재물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감정 범죄는 감소 추세이며 최근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공간과 주차장은 재물 범죄와 감정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2022년 전체 범죄 중 해당 장소에서 재물 범죄의 37.7%가, 감정 범죄의 39.3%가 발생하였다.

야외공간 중에서 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최근 노상에서

발생하는 재물 범죄는 증가 추세이며, 감정 범죄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재물 범죄는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며, 감정 범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산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살펴보면, 재물 범죄와 감정 범죄 모두 큰 폭은 아니지만 증가하는 추세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산야는 비교적 인적이 드물며 기계적·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공간이 많아 범죄예방이 쉽지 않으며, 실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인 만큼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주차장 역시 사각지대가 많은 공간으로 범죄 발생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증감이 반복되며 꾸준히 발생하는 장소로서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공간이다.

- 공공공간 재물·감정 범죄 발생 건수

공공공간 재물 및 감정 범죄 발생 건수

	재물 범죄					감정 범죄						
	역 대립실	자하철	기타 교통	공중 회장실	공공 공간 전체 (%)	역 대립실	자하철	기타 교통	공중 회장실	공공 공간 전체 (%)		
2014	1,175	629	4,937	464	2.69	1,091	919	2,744	351	1.64		
2015	1,188	646	5,437	487	3.14	976	1,009	2,574	355	1.50		
2016	1,052	569	3,106	442	2.53	1,007	1,081	2,806	394	1.59		
2017	985	481	2,771	535	2.58	1,164	1,369	2,964	339	1.84		
2018	1,644	612	4,948	989	4.61	2,038	1,520	5,639	701	3.17		
2019	1,779	597	4,086	1,084	4.02	1,992	1,554	5,603	736	3.17		
2020	1,525	529	3,786	887	3.73	1,608	1,035	5,222	608	2.94		
2021	1,102	435	2,848	730	3.06	1,428	1,054	4,892	485	3.10		
2022	1,180	586	2,939	704	2.96	1,552	1,288	5,030	587	3.15		
'14-'22 평균증감률	0.05	-0.88	-6.28	5.35	1.20	4.50	4.31	7.87	6.64	8.53		
'19-'22 평균증감률	-12.79	-0.62	-10.40	-13.40	-9.70	-7.98	-6.07	-3.53	-7.26	-0.17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경찰청 범죄통계, 범죄 발생장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vw\\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gik986\\_di65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3106&vw_cd=MT_ZTITLE&list_id=132_13204_GKIT659_gik986_di65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검색일: 24.05.10.)

공공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재물 범죄와 감정 범죄 모두 증가 추세이나 최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범죄 발생 장소 중 공공공간에서 발생하는 재물 범죄의 최근 연평균 증감률은 -9.70%로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 범죄는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 전체 범죄 발생 장소 대비 공공공간에서 발생하는 감정 범죄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1.64%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3.17%, 2022년 3.15%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모든 장소에서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증감률이 모두 감소 하였으며, 역·대합실, 공중화장실에서의 감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재물 범죄와 감정 범죄 모두 5.35%, 6.64%로 범죄의 발생 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계속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기타 교통수단 내 공간은 감정 범죄는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4년 대비 2022년에는 약 2천 건 이상 증가하여 주요 감정 범죄 장소로 나타났다.

#### □ 재물 및 감정 범죄자 현황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재물 및 감정 범죄자의 연령별, 내외국인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범죄자의 연령 구분은 청소년을 포함하는 20세 미만, 일반 성인인 20세부터 60세 미만, 고령자로 볼 수 있는 6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연령별 인구규모에 따른 범죄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 해당 연령 10만 명당 범죄자 수를 분석하였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범죄자 현황도 동일하게 인구 규모별 비교하였다.

##### ◦ 연령별 범죄자 현황

재물범죄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의 범죄자 감소 폭이 커으며, 20세에서 60세 미만의 성인 범죄자 역시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6.77% 증가율로 매우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고령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2022년 215.8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재물 범죄자가 가장 많으며, 2014년부터 연평균 11.24%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의 재물 범죄 문제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각했다.

감정 범죄자의 연령 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물 범죄와 동일하게 20세미만과 20세 이상 서 60세 미만 연령의 범죄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 범죄자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령자의 감정 범죄 수는 최근 증가 폭이 0.12%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 10만명당 감정 범죄자수를 살펴보면, 고령 인구 10만 명당 감정 범죄자 수는 재물 범죄와 달리 최

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의 인구 10만 명당 감정 범죄자 수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0.93%로 재물 범죄와 달리 줄어들지 않는 상황으로 청소년의 감정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연령별 범죄자 현황

	재물 범죄						감정 범죄					
	범죄자수			해당연령 인구10만명당범죄자수			범죄자수			해당연령 인구10만명당범죄자수		
	20세 미만	20세 ~60세	60세 이상	20세 미만	20세 ~60세	60세 이상	20세 미만	20세 ~60세	60세 이상	20세 미만	20세 ~60세	60세 미만
2014	29,305	60,415	8,416	277.0	191.2	92.0	29,318	29,828	26,392	277.1	9488	2885
2015	24,730	65,296	10,688	239.7	206.9	110.7	27,685	31,070	30,107	268.4	9827	311.8
2016	25,532	68,788	14,082	254.1	218.3	138.9	30,362	31,3018	33,647	302.2	9933	3320
2017	22,466	68,432	16,587	231.0	218.1	155.5	31,881	29,688	34,702	327.3	9463	3253
2018	18,920	62,351	17,540	200.5	199.9	156.7	30,356	28,429	37,477	321.8	8889	3348
2019	19,330	62,161	21,522	212.5	201.0	182.5	28,928	27,149	41,306	317.0	8863	3503
2020	18,849	57,943	23,173	215.1	189.2	186.2	23,517	25,610	40,732	268.4	8021	327.3
2021	13,846	47,886	24,951	163.5	158.7	192.1	21,535	20,677	38,144	254.3	671.5	293.7
2022	15,931	50,370	29,095	193.8	169.5	215.8	24,570	21,366	41,458	298.3	7189	307.4
'14-'22 평균증감률	-7.31	-2.25	16.77	-4.37	-1.49	11.24	-2.18	-4.15	5.81	0.93	-3.41	0.80
'19-'22 평균증감률	-6.28	-6.77	10.57	-3.02	-5.82	5.74	-5.30	-7.98	0.12	-2.00	-6.74	-4.26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자 연령.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29&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3\\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29&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3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 내국인 및 외국인 범죄자 현황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재물 범죄 건수는 증가 추세이나, 최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추세는 9.05%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펜데믹 상황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격히 줄어든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인구 규모 대비 범죄자 수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내국인의 재물 범죄자 수는 181.8명, 감정 범죄자 수는 533.7명, 외국인의 재물 범죄자 수는 108.6명, 감정 범죄자 수는 311.1명으로 외국인이 오히려 낮았다.

#### 국적별 범죄자 현황

	재물 범죄				감정 범죄			
	범죄자수		해당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수		범죄자수		해당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수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97,167	1,858	189.3	103.4	358,223	8,722	680.9	485.2
2015	103,867	2,425	201.6	127.7	373,116	9,930	704.8	522.8
2016	106,248	2,906	205.5	141.8	380,211	9,912	716.3	483.7
2017	105,181	2,972	203.1	136.3	366,602	9,307	690.0	426.8
2018	96,638	2,987	186.5	126.2	351,829	8,929	661.6	377.1
2019	100,716	3,243	194.2	128.5	347,270	9,077	652.3	359.5
2020	97,917	2,829	188.9	138.9	312,962	8,054	588.3	395.6
2021	84,700	2,400	164.0	122.7	264,424	6,374	499.7	325.7
2022	93,516	2,440	181.8	108.6	281,498	6,986	533.7	311.1
'14-'22 평균 증감률	-0.48	3.46	-0.50	0.63	-2.97	-2.74	-3.00	-5.41
'19-'22 평균 증감률	-2.44	-9.05	-2.18	-5.43	-6.76	-8.36	-6.47	-4.71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자 국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78&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3\\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78&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3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 2. 지역유형별 신고빈발지 및 체감안전도 자료 분석

### □ 분석의 개요

지역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분석하기 위해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신고빈발지 자료와 체감안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도시 규모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과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3가지로 분류하였다.

#### 도시 규모 분류 기준

구분	지역 유형1	지역 유형2	지역 유형3
분류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세종 포함), 지방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 중소도시
시군구 개수	77개	56개	117개

출처 : 연구진 작성

신고빈발지 자료는 전국 시군구별 112 신고 수를 집계한 자료로 신고 범죄 유형은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폭력, 성폭력, 몰래카메라, 살인, 강도, 절도로 구분되어 있다. 앞서 분석한 대검찰청 및 경찰청 통계자료는 범죄발생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시나 도 단위로만 구분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신고빈발지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범죄발생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고빈발지에서 구분한 범죄 유형을 앞서 구분한 재물범죄(강도, 절도)와 감정범죄(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폭력, 성폭력, 몰래카메라, 살인)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체감 안전도 자료는 1년에 2번씩 각 지방청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전국 단위의 자료이다<sup>27)</sup>. 설문 문항은 전반적인 안전도, 교통사고 안전도, 법질서준수도, 절도폭력 안전도, 강도살인 안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감안전도 자료는 범죄의 유형을 절도폭력과 강도살인 두 가지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재분류한 재물 범죄와 감정 범죄에 대한 체감안전도를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절도폭력과 강도살인 안전도의 평균값을 범죄안전도로 정의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역 전반의 안전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반적인 안전도 점수 항목을 활용하였다.

27)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체감안전도. [https://www.bigdata-policing.kr/product/view?product\\_id=PRDT\\_15](https://www.bigdata-policing.kr/product/view?product_id=PRDT_15)(검색일: 2024.5.3.)

## □ 지역 유형별 신고빈발지 현황

지역 유형별 재물 범죄의 신고 건수는 수도권인 지역 유형 1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 광역시 및 지방 대도와 지방 중소도시인 지역 유형 2, 3에서는 증가하였다. 특히 지역 유형 2보다 지역 유형 3에서의 재물 범죄 신고 건수의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지역 유형 1에서는 재물 범죄 신고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지역 유형 2와 3에서는 증가하였다. 절대적인 신고 건수는 대도시가 많았으나 감소 추세이며, 인구 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재물 범죄의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범죄의 신고 건수는 분류한 3가지 지역 유형에서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과 지방 광역시 및 대도시의 감정 범죄의 신고 건수 감소율이 12.24%, 12.78%이며, 인구 10만 명당 신고 건수 감소율은 12.41%, 12.33%로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중소도시인 지역 유형 3에서는 감정 범죄 신고 건수 감소율이 9.69%, 인구 10만 명당 신고 건수 감소율은 9.00%로 도시 규모가 큰 도시보다는 감소 비율이 작으나 재물 범죄와 달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도시 규모별 재물 및 감정 범죄 신고 건수

지역 유형	재물 범죄			감정 범죄			신고 건수(천건)	인구 10만 명당 신고 건수	재물 범죄			신고 건수(천건)	인구 10만 명당 신고 건수
	1	2	3	1	2	3			1	2	3		
2019	339	110	56	1,308	758	489	1,115	437	186	4,300	3,012	1,634	
2020	287	91	48	1,101	629	419	912	346	159	3,501	2,396	1,399	
2021	329	111	59	1,264	775	523	859	333	152	3,300	2,315	1,353	
'19-'21 평균증감률	-1.51	0.57	2.67	-1.70	1.10	3.39	-12.24	-12.78	-9.69	-12.41	-12.33	-9.00	

출처 :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신고빈발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지역 유형별 체감안전도 현황

지역 유형별 체감안전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체감안전도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 중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7년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결과 중 하반기 자료를 통해 도시 규모별 체감 안전도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체감안전도 자료는 각 지방청에서

255개의 경찰서 단위로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체감하는 안전도에 대한 설문을 통해 구축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서 단위를 관할 행정구역으로 재분류하고, 이를 다시 앞서 구분한 지역 유형 3가지로 분류하였다.

지역 유형별 전반적인 안전도 점수와 범죄안전도 점수를 살펴보면, 지역의 유형과 상관 없이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상승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지역 유형별 비교하면 도시 규모가 작은 도시의 전반적인 안전도와 범죄안전도 점수가 모두 가장 높았으며, 지역 유형 1과 2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체감안전도는 실제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으나, 범죄의 발생 여부보다는 다른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범죄 두려움이나 체감하는 안전도는 개인 및 집단의 특성 간 상호작용에 따른 인지의 과정이 거쳐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경훈, 1998, p.29). 이에 비교적 도시 규모가 크고, 인구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지하는 심각성, 우려, 위험성 등에서 규모가 작은 도시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 도시에서는 범죄의 발생 자체가 적어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안전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지역 주민 간의 교류가 도시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도가 높아 체감 안전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도시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 체감 안전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지역 유형별 전반적 안전도 및 범죄안전도 점수

지역 유형	전반적 안전도 점수			범죄안전도 점수		
	1	2	3	1	2	3
2015	68.92	68.16	72.30	74.30	74.60	79.36
2016	70.07	69.93	73.29	75.74	76.06	80.13
2017	72.78	72.32	76.55	77.36	77.68	82.12
2018	73.38	72.87	75.67	77.90	77.17	80.77
2019	74.05	73.88	77.09	78.27	78.23	82.08
2020	78.35	78.64	80.04	82.55	81.85	85.28
2021	78.22	77.56	80.97	83.08	82.82	85.52
'15-'21 평균증감률	2.13	2.18	1.91	1.88	1.76	1.25
'19-'21 평균증감률	3.24	3.16	3.44	3.27	3.60	2.90

출처 :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체감안전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3.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관계자 의견조사 설문조사지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조사	
<p>안녕하십니까?</p> <p>건축공간연구원(AURI)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 연구를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이 본격화된 지 20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라는 인구, 정치사회, 산업 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지역 범죄 건수와 범죄 두려움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고, 새로운 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시점에 사회변화에 대응한 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자 전문가 대상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p> <p>응답하신 내용은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p> <p>이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외의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p>*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p> <p>▶ 담당자 :</p> <p>▶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amp;G 세종타워B 9층 건축공간연구원</p>	
<p><a href="#">조사 협조 공문 보기</a> </p>	
<p>DQ. 응답자 특성 질문</p>	
<p>[홈페이지 메뉴 방식으로 조사 페이지 구성(PC Only), 응답 수정 허용, 최종 확인 후 응답 제출]</p>	
<p>DQ1. 귀하는 다음 중 <u>어디에 해당</u>하십니까?</p>	
<p>①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② 공무원(지자체 공무원 등) ③ 경찰(CPO 등) ④ 실무자(민간설계업체 담당자 등)</p>	
<p>DQ2. 귀하의 <u>범죄예방 분야 업무 경력</u>은 어떻게 되십니까?</p>	
<p>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20년 미만      ⑥ 20년 이상</p>	
<p>DQ3. 귀하의 <u>성별</u>은 무엇입니까?</p>	
<p>① 남성      ② 여성</p>	
<p>DQ4. 귀하의 <u>연령</u>은 어떻게 되십니까?</p>	
<p>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p>	

### A. 공간 단위별 범죄예방 환경조성 인식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범죄예방 관련 사회변화는 1인 가구 증가, 원도심 공동화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공간 단위를 다음 3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1. 건축물 단위 : 다가구·다세대 주택(1인 가구 주요 거주 공간)
2. 가로 단위 : 노후 저층 주거지역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
3. 블록 단위 : 지방도시 기성 시가지(학교 주변 주거지역 또는 상업과 혼재된 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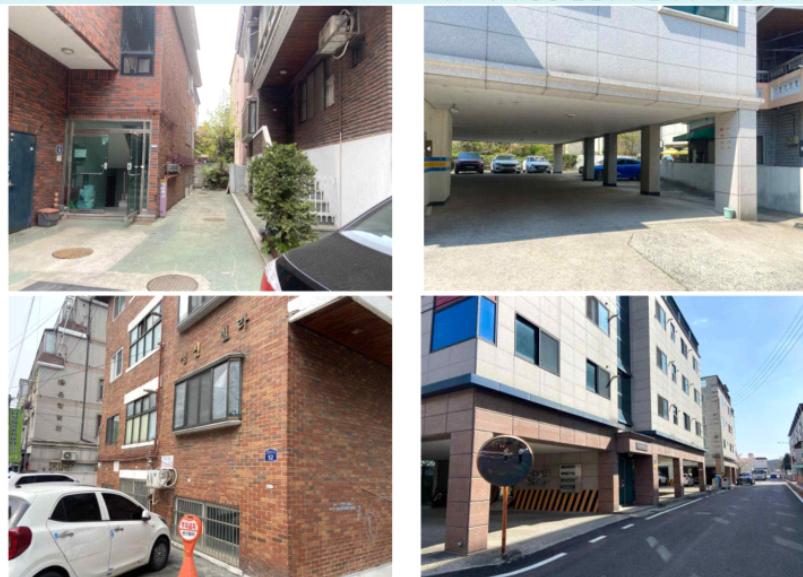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건축물), 노후 저층 주거지역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가로), 지방도시 기성 시가지(블록) 등 공간 단위별(아래 예시 참조) 우선 고려 요소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 ■ 건축물 단위 : 다가구·다세대 주택

##### 주요 특징

- ▶ 주택 내부로 외부인의 출입이 어렵지 않으며, 창문으로 개별 호실 내부로 침입이 가능
- ▶ 사각지대가 많은 필로티 구조의 주택
- ▶ 외부로부터 공동 출입구의 감시가 어려운 구조



■ 가로 단위 : 노후 저층 주거지역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

주요 특징

- ▶ 사각지대가 많고 야간에 어두운 좁은 골목길
- ▶ 현재 위치 파악이 어려운 복잡한 골목길
- ▶ 주택 담장으로 인하여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은 이면도로



■ 블록 단위 : 지방도시 기성 시가지

주요 특징

- ▶ 불법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 ▶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빈집, 공터 등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



A1.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3개 공간 단위 중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간별 CPTED 사업 추진 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건축물 단위 : 다가구·다세대 주택	가로 단위 : 노후저층주거지 좁은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	블록 단위 : 지방도시 기성 시가지	합계
_____%	_____%	_____%	=100%

다음 공간 단위별(건축물, 가로, 블록) 범죄예방 요소와 전략을 자세히 읽어봐 주십시오.

■ 건축물 단위 : 다가구·다세대 주택

no	요소	전략
1	접근통제	적정 성능을 갖춘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주택 내부로 접근이 어렵게 하는 개별 세대 침입 제한 전략이 중요하다. (공동현관 및 개별세대 방범시설, 방범창, 배관덮개, 특수형 광물질 등)
2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나 공동현관이나 공동공간으로 출입하는 것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심택배함 설치, 걸침기 외부 설치, 공동출입구 외부에 설치된 우편함 등)
3	감시강화	건축물 또는 출입구 주변은 장애물로 인해 시야가 가리지 않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감시 강화 전략이 중요하다. (적정 간격의 수목 식재, 적절한 위치에 반사경, 조명시설, 미러시트, CCTV 등 설치)
4		필로티 구조 1층 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은 외부로부터 자연적 감시가 강화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투시형 담장, 안심거울, 반사띠 등 설치)
5	영역성 강화	주택 출입구는 주변 공간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영역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바닥 단차 구분, 재료나 색채 구분 등)
6	공동체 활동	1인 가구가 아닌 귀가 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자치활동 또는 공공의 지원을 통한 안심 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 앱 등)
7		1인 가구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에게 스스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물품 지원이 중요하다. (여성안심카트 등)

■ 가로 단위 : 노후 저층 주거지역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

no	요소	전략
1	접근통제	범죄자가 숨거나 범죄(또는 도주)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사이의 이격 공간(외부로부터 감시가 어려운 공간)의 접근을 통제하는 전략은 중요하다. (이격공간 차폐시설 등 설치)
2		주택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감시가 가능하도록 담장은 허울거나 투시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감시강화	야간 주변 주거지의 빛공해는 최소화하고 적절한 시야확보를 위해 벽부등, 불라드 조명 등(높은 조도보다는 낮은 조도의 조명을 여러 개 설치, 광원의 균일도, 광원색 등 고려 필요)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4		주거지 진출입부와 주요 교차점 부근 또는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기계적 감시를 강화하고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이 포함된 통합형 모듈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영역성 강화	복잡한 구조의 골목길은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교차점, 굽이진 골목길 등에 적절한 조명과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야간 적절한 조명시설, 안내 사인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닥표지병, 고보조명, 안내표지판 등)
7	행역성 강화	노후화된 담장, 벽면, 계단, 도로 등의 정비 및 도색(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및 색상 적용)을 통해 기로경관을 개선하고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8		가로변 화단 정비 또는 식재 공간 조성(보행 공간 충분히 확보가능할 경우)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9	활동성 강화	주요 보행로와 연계하여 벤치 등 휴게시설이나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와 함께 활동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10	명료성 강화	주간과 야간 방범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디자인 적용과 적절한 조명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좁은 골목길이 많은 저층 주거지는 112신고 표지판과 함께 현재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 안내 표시판(주소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블록 단위 : 지방도시 기성 시가지

no	요소	전략
1	접근통제	빈집은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적절한 안내사인 및 방범시설물(CCTV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감시강화	어린이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은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영역성 강화	주거지 내 막다른 골목은 외부인이 잘못 들어오지 않도록 주거지역 및 막다른 골목이라는 노면표지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주거지역 내 규칙과 에티켓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분리수거 일정, 흡연 금지, 주찰금지, 소음 금지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픽토그램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외지인이 주거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방지하기 위해 주거 및 상업지역 경계부에 마을 지도(게시판), 안내표지판, 지주형 게이트 등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6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피할 수 있는 안심지킴이집(여성, 아동 등), 안심 상점(편의점)은 방범거점 시설물로서 충분한 방범시설을 설치와 함께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지역 내 쓰레기 무단 배출 및 투기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장소를 마련하고 클린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8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고 무질서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가로 시설물(안내 표지판, 전신주 래핑 상태 등의 정비를 통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9	유지관리	노후화된 방범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10		학교 인접 주택가는 지역 내 무질서도 관리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11		지역의 경관개선 및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수목 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12		지역 내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휴게 및 운동 시설 설치, 편의공간을 조성하여 활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활동성 강화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공간(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율방범대 거점 공간,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14		여성 1인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이 중요하다.
15		CPTED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방범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중요하다. (CPTED에 대한 이해, 안전지도 제작, 주요 사례, 주민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
16	공동체 활동	여성 1인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이 중요하다.
17		CPTED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방범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중요하다. (CPTED에 대한 이해, 안전지도 제작, 주요 사례, 주민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

먼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의 범죄예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요소와 전략을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공간 특성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사업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

■ 건축물 단위 : 다가구·다세대 주택

no	요소	전략
1	접근통제	적정 성능을 갖춘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주택 내부로 접근이 어렵게 하는 개별 세대 침입 제한 전략이 중요하다. (공동현관 및 개별세대 방범시설, 방범창, 배관덮개, 특수형광물질 등)
2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현관이나 공동공간으로 출입하는 것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심택배함 설치, 검침기 외부 설치, 공동출입구 외부에 설치된 우편함 등)
4	감시강화	건축물 또는 출입구 주변은 장애물로 인해 시야가 가리지 않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감시 강화 전략이 중요하다. (적정 간격의 수목 식재, 적절한 위치에 반사경, 조명시설, 미러시트, CCTV 등 설치)
5		필로티 구조 1층 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은 외부로부터 자연적 감시가 강화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투시형 담장, 안심거울, 반사띠 등 설치)
6	영역성 강화	주택 출입구는 주변 공간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영역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바닥 단차 구분, 재료나 색채 구분 등)
7	공동체 활동	1인 가구가 야간 귀가 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자치활동 또는 공공의 지원을 통한 안심 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 앱 등)
8		1인 가구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에게 스스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물품 지원이 중요하다. (여성안심키트 등)

A2.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공간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CPTED 요소별 추진 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접근통제	감시강화	영역성 강화	공동체 활동	합계
_____ %	_____ %	_____ %	_____ %	=100%

A2-1.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공간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접근통제 전략 중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별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접근통제 전략	중요도
적정 성능을 갖춘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주택 내부로 접근이 어렵게 하는 개별 세대 침입 제한 전략이 중요하다. (공동현관 및 개별세대 방범시설, 방범창, 배관덮개, 특수형광물질 등)	_____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현관이나 공동공간으로 출입하는 것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심택배함 설치, 검침기 외부 설치, 공동출입구 외부에 설치된 우편함 등)	_____ %
합계	=100%

A2-2.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공간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감시강화 전략 중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별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감시강화 전략	중요도
건축물 또는 출입구 주변은 장애물로 인해 시야가 가리지 않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감시 강화 전략이 중요하다. (적정 간격의 수목 식재, 적절한 위치에 반사경, 조명시설, 미러시트, CCTV 등 설치)	_____ %
필로티 구조 1층 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은 외부로부터 자연적 감시가 강화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투시형 담장, 안심거울, 반사띠 등 설치)	_____ %
합계	=100%

A2-3.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공간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공동체 활동 전략 중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별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공동체 활동 전략		중요도
1인 가구가 야간 귀가 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차지활동 또는 공공의 지원을 통한 안심 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 앱 등)		_____ %
1인 가구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에게 스스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물품 지원이 중요하다. (여성안심키트 등)		_____ %
합계		=100%

노후 저층 주거지역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의 범죄예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 가로 단위 : 노후 저층 주거지역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

no	요소	전략
1	접근통제	범죄자가 숨거나 범죄(또는 도주)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사이의 미적 공간(외부로부터 감시가 어려운 공간)의 접근을 통제하는 전략은 중요하다. (이격공간 차폐시설 등 설치)
2		주택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감시가 가능하도록 담장은 허물거나 투시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감시강화	야간 주변 주거지의 빛공해는 최소화하고 적절한 시야확보를 위해 벽부등, 불라드 조명 등(높은 조도보다는 낮은 조도의 조명을 여러 개 설치, 광원의 균일도, 광원색 등 고려 필요)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4		주거지 진출입부와 주요 교차점 부근 또는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기계적 감시를 강화하고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이 포함된 통합형 모듈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복잡한 구조의 골목길은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교차점, 굽이진 골목길 등에 적절한 조명과 시야 확보를 위한 범시경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영역성 강화	야간 적절한 조명시설, 안내 시인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닥표지봉, 고보조명, 안내표지판 등)
7		노후화된 담장, 벽면, 계단, 도로 등의 정비 및 도색(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및 색상 적용)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8		가로번화단 정비 또는 실제 공간 조성(보행 공간 충분히 확보가능할 경우)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9	활동성 강화	주요 보행로와 연계하여 벤치 등 휴게시설이나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와 함께 활동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10	명료성 강화	주간과 야간 방범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디자인 적용과 적절한 조명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좁은 골목길이 많은 저층 주거지는 112신고 표지판과 함께 현재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 안내 표시판(주소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A3.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좁은 골목길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CPTED 요소별 추진 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접근통제	감시강화	영역성 강화	활동성 강화	명료성 강화	합계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100%

A3-1.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좁은 골목길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감시강화 전략 중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별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감시강화 전략	중요도
주택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감시가 가능하도록 담장은 허물거나 투시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_____ %
야간 주변 주거지의 빛공해는 최소화하고 적절한 시야확보를 위해 벽부등, 블라드 조명 등(높은 조도보다는 낮은 조도의 조명을 여러 개 설치, 광원색의 균일도, 광원색 등 고려 필요)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_____ %
주거지 진출입부와 주요 교차점 부근 또는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기계적 감시를 강화하고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이 포함된 통합형 모듈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_____ %
복잡한 구조의 골목길은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교차점, 굽이진 골목길 등에 적절한 조명과 시야학보를 위한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_____ %
합계	=100%

A3-2.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좁은 골목길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영역성 강화 전략 중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별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영역성 강화 전략	중요도
야간 적절한 조명시설, 안내 사인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닥표지병, 고보조명, 안내표지판 등)	_____ %
노후화된 담장, 벽면, 계단, 도로 등의 정비 및 도색(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및 색상 적용)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_____ %
가로변 화단 정비 또는 식재 공간 조성(보행 공간 충분히 확보가능할 경우)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_____ %
합계	=100%

A3-3.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좁은 골목길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명료성 강화 전략 중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별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명료성 강화 전략	중요도
주간과 야간 방범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디자인 적용과 적절한 조명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_____ %
좁은 골목길이 많은 저층 주거지는 112신고 표지판과 함께 현재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안내 표시판(주소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_____ %
합계	=100%

**지방도시 기성 시가지에서의 범죄예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 블록 단위 : 지방도시 기성 시가지**

no	요소	전략
1	접근통제	빈집은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적절한 안내사인 및 방범시설물(CCTV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감시강화	어린이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은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역성 강화	주거지 내 막다른 골목은 외부인이 잘못 들어오지 않도록 주거지역 및 막다른 골목이라는 노면표지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지역 내 규칙과 에티켓(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분리수거 일정, 흡연 금지, 주차금지, 소음 금지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픽토그램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외지인이 주거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방지하기 위해 주거 및 상업지역 경계부에 마을 지도(게시판), 안내표지판, 지주형 게이트 등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피할 수 있는 안심지킴이집(여성, 아동 등), 안심 상점(편의점)은 방범거점 시설물로서 충분한 방범시설물 설치와 함께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내 쓰레기 무단 배출 및 투기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장소를 마련하고 클린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고 무질서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가로 시설물(안내 표지판, 전신주 래핑, 상태 등의 정비)을 통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유지관리	노후화된 방범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학교 인접 주택가는 지역 내 무질서도 관리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지역의 경관개선 및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수목 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역 내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휴게 및 운동 시설 설치, 편의공간을 조성하여 활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성 강화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공간(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율방범대 거점 공간,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여성 1인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이 중요하다.	
14	공동체 활동	CPTED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방범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중요하다. (CPTED에 대한 이해, 안전지도 제작, 주요 사례, 주민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
15		

A4. **지방도시 기성 시가지**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CPTED 요소별 추진 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접근통제	감시강화	영역성 강화	유지관리	활동성 강화	공동체 활동	합계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100%

A4-1. 지방도시 기성 시가지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영역성 강화 전략 중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별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영역성 강화 전략	중요도
주거지 내 막다른 골목은 외부인이 잘못 들어오지 않도록 주거지역 및 막다른 골목이라는 노면표지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_____ %
주거지역 내 규칙과 에티켓(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분리수거 일정, 흡연 금지, 주찰금지, 소음 금지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픽토그램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_____ %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외지인이 주거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방지하기 위해 주거 및 상업지역 경계부에 마을 지도(게시판), 안내표지판, 지주형 게이트 등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_____ %
좁은 골목길이 많은 저층 주거지는 112신고 표지판과 함께 현재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안내 표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피할 수 있는 안심지킴이집(여성, 아동 등), 안심 상점(면의점)은 방범거점 시설물로서 충분한 방범시설을 설치와 함께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판(주소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_____ %
합계	=100%

A4-2. 지방도시 기성 시가지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유지관리 전략 중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별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유지관리 전략	중요도
지역 내 쓰레기 무단 배출 및 투기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장소를 마련하고 클린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_____ %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고 무질서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가로 시설물(안내 표지판, 전신주 래핑 상태 등)의 정비를 통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_____ %
노후화된 방범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_____ %
학교 인접 주택가는 지역 내 무질서도 관리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_____ %
지역의 경관개선 및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수목 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_____ %
합계	=100%

A4-3. 지방도시 기성 시가지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활동성 강화 전략 중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별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활동성 강화 전략	중요도
지역 내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휴게 및 운동 시설 설치, 편의공간을 조성하여 활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_____ %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공간(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율방범 대 거점 공간,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_____ %
합계	=100%

A4-4. 지방도시 기성 시가지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추진 시, 공동체 활동 전략 중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별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공동체 활동 전략	중요도
여성 1인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이 중요하다.	_____ %
CPTED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방범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중요하다. (CPTED에 대한 이해, 안전지도 제작, 주요 사례, 주민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	_____ %
합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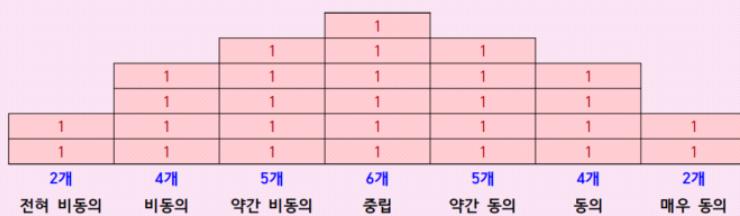
## B.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추진 절차, 정책 및 제도, 기술에 관한 인식

### [ 응답 방법 ]

- ▶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전략을 부문별(사업 추진 절차(14개), 정책 및 제도(8개), 기술(6개)), 총 28개로 정리하였습니다.
- ▶ 부문별 28개 진술문을 보시고 적정성을 판단하시어, 동의 또는 비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면 됩니다.

1. 평가하시기 전에 **28개 진술문을 먼저 읽어 주십시오.** (개별 평가 지향, 종합적으로 평가)

2. 28개 진술문을 **동의 또는 비동의 정도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CPTED 전략별 상대적 동의도 파악)



### [ 평가 화면 구성 ]

전혀 비동의	2개	1 1
비동의	4개	1 1 1 1
약간 비동의	5개	1 1 1 1 1
중립	6개	1 1 1 1 1 1
약간 동의	5개	1 1 1 1 1
동의	4개	1 1 1 1
매우 동의	2개	1 1

다음 28개 CPTED 전략을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 (진술문 토테이션)

28개 CPTED 전략	
질자 및 주체	
사업 추진 절차	1) 물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범죄 특성을 종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범죄발생이 높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범죄발생은 적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지방도시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대상지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하고 이를 처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사업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차기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이후 CPTED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7) 여러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에 흩어져 있는 CPTED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지역 내 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주민, 업체, 전문가 등 주체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9) 중앙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자치단체의 사업 담당부서와 유관 부서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11)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12)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 단계(대상지 선정, 대상지 진단 및 처방, 방범시설물 설치 위치 선정 등)에서 경찰의 역할(적절한 관여, 개입, 지원 등)이 중요하다 13) 지자체 담당자의 정기적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역량 강화는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14)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컨설팅 지원은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업 주체 역량	
정책 제도	15)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위상(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6)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같이 범죄예방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관련이 있는 조례에 통합하여 다양한 제도에 범죄예방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17)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 인력,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중요하다 18) CPTED 인증 범죄예방 환경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한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9)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과 타 환경개선 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 CPTED 계획 반영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 20)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및 정책 실행을 위해 (광역)자치 단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21)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범죄예방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안전(교통, 방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다양한 부처의 지역단위 환경개선 사업(국토부 : 도시재생사업, 해수부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농림부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교육부 : 교육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기술**

- 스마트 기술
- 23)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24) 유동인구가 적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드론, 무인 로봇, IoT 등)을 활용하여 감시 및 순찰 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25) 기존 시설물의 범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AI, IoT,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
  - 26) 다양화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통한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고도화가 중요하다
  - 27) 범죄예방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관련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
  - 28)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 절차에 따라 28개 CPTED 전략을 분류하여 주십시오.

단계1. 제시된 28개 CPTED 전략 중 **동의할 수 있는 전략 11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1개 필수]

(B1. 선택 응답 제외)

단계2. 선택되지 않은 CPTED 전략 중 **동의할 수 없는 전략 11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1개 필수]

(평가 화면에 Drag&Drop 방식으로 분류, 응답 초기화 가능)

단계3. 동의할 수 있는 CPTED 전략 11개를 **동의 정도**에 따라 “매우 동의” 2개, “동의” 4개, “약간 동의” 5개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분류하여 주십시오.

(평가 화면에 Drag & Drop 방식으로 분류, 응답 초기화 가능)

단계4. 동일한 방식으로, 동의할 수 없는 CPTED 전략 11개를 **동의 정도**에 따라 “전혀 비동의” 2개, “비동의” 4개, “약간 비동의” 5개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분류하여 주십시오.

(☞ 단계1, 단계2에서 선택되지 않은 6개 전략은 “중립”으로 자동 분류)

귀하께서 분류한 28개 CPTED 전략의 **동의 여부와 동의 정도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수정이 필요하시면 최종 제출 전에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하기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 4. Q 방법론 분석 결과(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체계 및 기술 관련 관계자 인식조사 분석 결과)

- (요인 1) 제1유형 :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의 통합적 접근 중요

번호	질문문	Z-score
9	물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범죄 특성을 종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858
7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범죄예방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안전(교통, 방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1.749
12	대상지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하고 이를 처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674
16	지역 내 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주민, 업체, 전문가 등 주체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1.106
23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007
5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농어촌 활성화 사업 등) 추진 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사업 선정 시 가점 제공 등)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0.832
3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 인력,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중요하다.	0.777
11	범죄발생은 적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지방도시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0.544
8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다양한 부처의 지역단위 환경개선 사업(국토부 : 도시재생사업, 해수부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농림부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교육부 : 교육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0.532
13	사업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0.485
20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 단계(대상지 선정, 대상지 진단 및 처방, 방법 시설을 설치 위치 선정 등)에서 경찰의 역할(적절한 관여, 개입, 지원 등)이 중요하다.	0.246
18	자치단체의 사업 담당부서와 유관 부서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0.062
14	차기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이후 CPTED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0.049
21	지자체 담당자의 정기적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역량 강화는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0.026
2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컨설팅 지원은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0.055
28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0.159
24	유동인구가 적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드론, 무인 로봇, IoT 등)을 활용하여 감시 및 순찰 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0.372
15	여러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에 흩어져 있는 CPTED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0.421
26	다양화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통한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고도화가 중요하다.	-0.431
25	기존 시설물의 범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AI, IoT,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	-0.560
6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및 정책 실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0.634
27	범죄예방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관련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	-0.714
1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위상(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0.724
19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0.762
10	범죄발생이 높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0.872
17	중앙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258
2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같이 범죄예방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관련이 있는 조례에 통합하여 다양한 제도에 범죄예방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1.742
4	범죄예방 환경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CPTED 인증제도(CPTED 제품 및 디자인 인증 등)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244

출처: 연구진 작성

- (요인 2) : 제2유형 : 법적 기반 및 제도 강화 중요

번호	진술문	Z-score
1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위상(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402
3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 인력,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중요하다.	1.715
9	물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범죄 특성을 종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219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다양한 부처의 지역단위 환경개선 사업(국토부 : 도시재생사업, 해수부 : 어	
8	촌신활력증진사업, : 농림부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교육부 : 교육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0.813
6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및 정책 실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0.725
5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농어촌 활성화 사업 등) 추진 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사업 선정 시 가점 제공 등)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0.681
17	중앙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0.677
2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같이 범죄예방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관련이 있는 조례에 통합하여 다양한 제도에 범죄예방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0.645
2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컨설팅 지원은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0.642
16	지역 내 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주민, 업체, 전문가 등 주체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0.603
18	자치단체의 사업 담당부서와 유관 부서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0.514
14	차기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이후 CPTED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0.224
19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0.088
21	지자체 담당자의 정기적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역량 강화는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0.030
11	범죄발생은 적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지방도시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0.162
4	범죄예방 환경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CPTED 인증제도(CPTED 제품 및 디자인 인증 등)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0.181
7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범죄예방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안전(교통, 방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0.199
12	대상지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하고 이를 처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0.260
13	사업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0.328
20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 단계(대상지 선정, 대상지 진단 및 처방, 방범 시설물 설치 위치 선정 등)에서 경찰의 역할(적절한 관여, 개입, 지원 등)이 중요하다.	-0.590
10	범죄발생이 높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0.602
26	다양화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통한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고도화가 중요하다.	-0.623
24	유동인구가 적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드론, 무인 로봇, IoT 등)을 활용하여 감시 및 순찰 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0.682
23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105
15	여러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에 흩어져 있는 CPTED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1.144
27	범죄예방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관련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	-1.462
28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1.665
25	기존 시설물의 범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AI, IoT,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	-1.976

출처: 연구진 작성

- (요인 3) 제3유형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균형적 역할 중요

번호	진술문	Z-score
6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및 정책 실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1.643
7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범죄예방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안전(교통, 방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1.381
17	중앙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286
14	차기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이후 CPTED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1.101
9	물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범죄 특성을 종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0.818
2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컨설팅 지원은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0.776
11	범죄발생은 적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지방도시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0.771
4	범죄예방 환경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CPTED 인증제도(CPTED 제품 및 디자인 인증 등)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0.733
8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다양한 부처의 지역단위 환경개선 사업(국토부 : 도시재생사업, 해수부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농림부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교육부 : 교육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0.714
19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0.624
13	사업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0.382
16	지역 내 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주민, 업체, 전문가 등 주체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0.288
28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0.252
5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농어촌 활성화 사업 등) 추진 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사업 선정 시 가점 제공 등)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0.223
12	대상지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하고 이를 처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0.189
27	범죄예방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관련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	0.111
2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같이 범죄예방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관련이 있는 조례에 통합하여 다양한 제도에 범죄예방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0.070
18	자치단체의 사업 담당부서와 유관 부서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0.191
15	여러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에 흩어져 있는 CPTED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0.228
26	다양화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통한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고도화가 중요하다.	-0.309
24	유동인구가 적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드론, 무인 로봇, IoT 등)을 활용하여 감시 및 순찰 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0.615
3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 인력,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중요하다.	-0.775
21	지자체 담당자의 정기적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역량 강화는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0.980
10	범죄발생이 높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318
23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358
25	기존 시설물의 범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AI, IoT,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	-1.549
20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 단계(대상지 선정, 대상지 진단 및 처방, 방범시설물 설치 위치 선정 등)에서 경찰의 역할(적절한 관여, 개입, 지원 등)이 중요하다.	-1.697
1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위상(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220

출처: 연구진 작성

- (요인 4) 제4유형 : 유지관리 및 지속가능성 중요

번호	진술문	Z-score
13	사업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204
3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 인력,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중요하다.	1.948
28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1.293
9	물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범죄 특성을 종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206
14	차기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이후 CPTED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0.949
27	범죄예방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관련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	0.902
16	지역 내 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주민, 업체, 전문가 등 주체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0.552
12	대상지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하고 이를 차별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0.486
2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같이 범죄예방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관련이 있는 조례에 통합하여 다양한 제도에 범죄예방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0.383
1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위상(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0.363
26	다양화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통한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고도화가 중요하다.	0.280
6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및 정책 실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0.195
15	여러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에 흩어져 있는 CPTED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0.156
2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컨설팅 지원은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0.047
17	중앙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0.002
19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0.000
18	자치단체의 사업 담당부서와 유관 부서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0.235
4	범죄예방 환경개선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CPTED 인증제도(CPTED 제품 및 디자인 인증 등)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0.280
25	기존 시설물의 범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AI, IoT,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	-0.296
5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농어촌 활성화 사업 등) 추진 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사업 선정 시 가점 제공 등)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0.742
8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다양한 부처의 지역단위 환경개선 사업(국토부 : 도시재생사업, 해수부 : 어촌신�력증진사업, 농림부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교육부 : 교육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0.787
20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 단계(대상지 선정, 대상지 진단 및 차방, 방범시설 설치 위치 선정 등)에서 경찰의 역할(적절한 관여, 개입, 지원 등)이 중요하다.	-0.886
10	범죄발생이 높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0.997
7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범죄예방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안전(교통, 방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5
23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132
11	범죄발생은 적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지방도시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417
21	지자체 담당자의 정기적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역량 강화는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1.585
24	유동인구가 적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드론, 무인 로봇, IoT 등)을 활용하여 감시 및 순찰 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601

출처: 연구진 작성

- (요인 5) 제5유형 : 대도시 및 지방도시의 맞춤형 접근 중요

번호	진술문	Z-score
10	범죄발생이 높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729
11	범죄발생은 적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지방도시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432
4	범죄예방 환경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CPTED 인증제도(CPTED 제품 및 디자인 인증 등)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415
23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345
14	차기 사업의 자속적인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이후 CPTED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1.066
3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 인력,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중요하다.	1.014
12	대상지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하고 이를 처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0.751
26	다양화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통한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고도화가 중요하다.	0.542
13	사업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0.524
2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같이 범죄예방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관련이 있는 조례에 통합하여 다양한 제도에 범죄예방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0.438
20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 단계(대상지 선정, 대상지 진단 및 처방, 방범시설물 설치 위치 선정 등)에서 경찰의 역할(적절한 관여, 개입, 지원 등)이 중요하다.	0.331
17	중앙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0.315
24	유동인구가 적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드론, 무인 로봇, IoT 등)을 활용하여 감시 및 순찰 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0.245
5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농어촌 활성화 사업 등) 추진 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과의 연계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사업 선정 시 가점 제공 등)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0.002
7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범죄예방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안전(교통, 방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0.104
6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및 정책 실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0.209
28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0.229
25	기존 시설물의 범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AI, IoT,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	-0.245
18	자치단체의 사업 담당부서와 유관 부서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0.279
8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다양한 부처의 지역단위 환경개선 사업(국토부 : 도시재생사업, 해수부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농림부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교육부 : 교육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0.279
9	물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범죄 특성을 종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0.281
1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위상(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0.787
15	여러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에 흩어져 있는 CPTED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0.996
16	지역 내 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주민, 업체, 전문가 등 주체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1.118
27	범죄예방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관련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	-1.345
19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1.642
21	지자체 담당자의 정기적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역량 강화는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1.729
2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컨설팅 지원은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1.905

출처: 연구진 작성

- (요인 6) 제6유형 :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중요

번호	진술문	Z-score
21	지자체 담당자의 정기적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역량 강화는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1.690
3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같이 범죄예방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관련이 있는 조례에 통합하여 다양한 제도에 범죄예방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1.520
5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농어촌 활성화 사업 등) 추진 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사업 선정 시 가점 제공 등)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277
16	지역 내 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주민, 업체, 전문가 등 주체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1.268
4	범죄예방 환경개선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CPTED 인증제도(CPTED 제품 및 디자인 인증 등)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221
6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및 정책 실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1.183
14	차기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이후 CPTED 평가 및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0.762
2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컨설팅 지원은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0.699
12	대상지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하고 이를 처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0.658
13	사업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다양한 부처의 지역단위 환경개선 사업(국토부 : 도시재생사업, 해수부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농림부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교육부 : 교육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0.563
26	다양화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통한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고도화가 중요하다.	0.165
10	범죄발생이 높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0.037
18	자치단체의 사업 담당부서와 유관 부서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0.052
19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0.085
25	기존 시설물의 범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AI, IoT,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	-0.260
15	여러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에 흩어져 있는 CPTED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0.360
27	범죄예방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관련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 유동인구가 적은 공간에 스마트 기술(드론, 무인 로봇, IoT 등)을 활용하여 감시 및 순찰 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0.539
20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 단계(대상지 선정, 대상지 진단 및 처방, 방범시설물 설치 위치 선정 등)에서 경찰의 역할(적절한 관여, 개입, 지원 등)이 중요하다.	-0.568
17	중앙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0.592
2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같이 범죄예방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관련이 있는 조례에 통합하여 다양한 제도에 범죄예방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0.965
28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1.098
7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범죄예방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안전(교통, 방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1.188
11	범죄발생은 적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지방도시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324
1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위상(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406
9	물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범죄 특성을 종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201

출처: 연구진 작성